

#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홍관희 황병덕 허문영  
박형중 이우영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인 쇄 2004년 12월

발 행 200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협동연구팀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51, 2645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9,500원

### © 통일연구원, 200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 조한범...[등저].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 ; cm.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04-15)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272-1 93340

340.91-KDC4

320.95-DDC21

CIP2004002326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

본 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4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  
사회연구회 소관 9개 국책연구기관과 5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요약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는 이미 떨 수 없는 긴밀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굴절된 동북아의 근대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의 주된 이유는 침략과 피침이라는 동북아 국가간의 갈등적 근대사에 일차적으로 기인하며, 근대사의 갈등구조가 이후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각 국가 내에서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근대화와 한반도 강점, 중·일전쟁과 2차 세계대전,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과 이후의 첨예한 냉전적 대립 등은 왜곡된 동북아 근대사의 핵심적이고도 주요한 계기들이라 할 수 있다. 근대사의 왜곡된 진행과정에 의해 동북아 관련국들의 평화적 공존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한반도가 동북아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차원의 평화문화 형성을 지향하고, 한반도 내부의 냉전문화 역시 동북아 평화문화라는 보다 포괄적 틀 속에서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실태 분석 및 비교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바, 본 연구는 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국제협력 추진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동북아 각국의 평화문화에 대한 실태연구는 동북아의 이해 및 공동체 건설에 대한 문화적 관점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동북아의 각국이 평화적 공존을 통해서만이 동북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보다 근본적 문제의식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성찰적 의미를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물들은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 평화문화의 이해

소극적 차원에서 평화란 전쟁의 회피 개념으로 규정되는 것으로서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적극적 의미의 평화개념은 사회정의가 구현되고 갈등의 민주적 조정 및 국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평화로 규정한다. 즉 사회정의, 민주적 질서, 국가간 협력 등이 충족되면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적인 상황이 사라져 인권 보장, 경제발전, 민주적 참여 등의 평화의 적극적인 여건들이 갖추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토대로 평화문화를 정의할 경우, “평화 형성을 위한 능력을 지닌 행위자들이 과정, 내용, 구조, 효과 등을 통하여 폭력제거, 갈등조정, 평화조성 등을 행하는 사회의 문명화 형식”을 의미한다. 즉 사회성원들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면 이러한 상태를 평화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규범적 시각에서 볼 경우 평화문화는 일반적 행위지침으로서 폭력제어라는 구체적 특징을 지녀야 하고, 이것 또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보편타당한 가치기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구조적 측면에서 평화문화를 고찰할 때 평화적 여건형성에 주력하는 기구에 평화문화적 가치와 규범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평화문화의 과정적 측면은 평화를 조성하는 과정이 역동적으로 발전되어 생활세계 및 일상생활에서 평화문화가 습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화문화의 기능적 측면은 사회의 문명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평화를 촉진시키는 효과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종교, 여가활동, 가족 등의 생활세계는 점차 경제영역에 의해 침식당하고 식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촉진시키는 것이 정치와 문화가 아니라 경제와 기술 영역이 담당하고 사회적 정향성과 가치를 규정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평화문화에 대한 탈근대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탈근대적 관점에서 평화문화는 ‘미래의 비전’, ‘예방적 폭력방지’, ‘시민적 갈등해결’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평화문화를 위한 원칙은 ‘폭력독점(Gewaltmonopol)’, ‘법치국가 원칙과 민주적 참여’, ‘감정통제’, ‘사회정의(Soziale Gerechtigkeit)’, ‘자연과의 조화’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대중적 조직을 통한 사회적 평화운동은 19세기에 모습을 나타냈으며, 평화연구나 평화정책은 2차 대전 이후 실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평화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기는 1980년대 유럽에서의 평화운동이었다. 1980년대 초에 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평화시위와 핵무기철폐시위는 이전에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1990년대에 와서는 냉전 종결과 함께 양대 진영간의 전쟁과 폭력적 충돌의 방지와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평화연구는 그 대상을 잃었으나, 민족적·지역적·문화적·종교적 갈등이 급격히 심화되었다. 따라서 냉전 종결 이후 평화연구에서는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의 방지라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이나 대립의 요소가 제거되고, 보다 더 긍정적인 평화의 구조가 갖추어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근대에 대한 성찰적 관심이 제기되면서 나타난 신사회운동은 평화운동의 현대적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사회운동은 근대의 위기가 빚어내는 폭력적 갈등상황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고 그 대안을 추구해 나가는 대안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 2. 동북아의 평화문화

전통적으로 ‘백의민족’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평화와 친화력을 보여 온 한국사회에서 식민지 경험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은 평화를 생소한 것으로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특히 분단과 한국전쟁을 경유한 남북한의 극단적 대립구도는 한국사회를 근본적 갈등구조위에 올려 놓았다. 냉전적 체제경쟁의 지속과 냉전문화의 재생산 구조는 남북한 간의 해소되기 어려운 갈등구조를 형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증오와 적대감이 기본적인 정서로 자리잡았다. 문제는 남북한 간의 갈등이 남북한 체제 내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상당기간동안 남북한은 일종의 분단효과에 힘입어 각각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 물리적 억압을 바탕으로 권력구조를 유지했으며, 이는 체제 내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요

인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평화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된 것은 민주화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전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인권 등 그 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가치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평화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동시에 대결보다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남북관계가 정착됨에 따라 평화공존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평화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산되면서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평화운동도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점증하는 평화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평화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나 성찰은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기존의 특정 평화개념이나 평화운동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평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지향하는 보편적 평화와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계급적 관점에 기초해서 평화를 2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들의 억압에 의해 이뤄지는 노예적 굴종의 ‘부르조아 평화’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축출한 후 이룩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진정한 평화’는 협상과 같이 구걸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며, ‘미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기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관에 기초하여 북한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이 지속하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노예적 굴종의 평화이며, 진정한 평화는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통일수단으로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평화적 방도란 남한 내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남한의 혁명정권을 흡수하거나 또는 남한의 현 체제가 연공정권 또는 용공정권으로 교체된 후, 이 정권과 합작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평화적 방도를 적용한 전술이 바로 연방제 통일론이다. 그리고 비평화적 방도란 전쟁의 방법으로 남한을 공산화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으로 무력통일론을 의미한다. 무력통일론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빠른 통일방법이므로 북

한으로서는 가장 원하는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분단 이후 줄곧 주장해 온 주한미군 철수는 바로 비평화적 방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즉 무력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로 덩샤오핑·장쩌민 및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집단지도체제가 지속적으로 ‘평화적 부상(和平崛起)’이라는 발전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현 지도층에 의해 더욱 체계화된 이 발전전략은 중국의 유가적 전통에서 유래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철학적 이념과 정신을 체현하고 있다. 중국은 현 세계의 후발 대국으로서 평화적으로 부상하는 길을 가고 있음을 스스로 천명하고 있다. 이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조건하에서 독립 자주적으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스스로의 부상은 평화적인 부상이며 이러한 중국은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건설한 역량임을 강조한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평화적인 부상’의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외교의 신사고를 제시, ‘유소작위(有所作為)’의 공영성 외교를 실시해 왔다. 이는 중국이 발전도상의 대국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화이부동’, ‘화위귀(和爲貴)’ 등의 평화철학과 중국인이 고대로부터 추구해 온 ‘천하위공(天下爲公)’의 ‘대동(大同)’사회의 가치이념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아시아 이웃나라에 대한 심도 있고 다양한 관심이 나타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일본에서 ‘겨울연가’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 중국의 고전악기를 연주하는 젊은 여성들의 악단인 ‘십이악방’의 콘서트는 항상 만원사례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NHK가 방송하고 있는 외국어 강좌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영어이지만, 교재의 판매부수는 중국어나 한국어가 붙어, 독일어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한국, 그리고 중국에게 과거사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일본의 침략적 과거사로 인해 아시아의 근대사를 이야기할 때 일본은 항상 가해자로서 그려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쌍방의 공통적인 역사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과거의 역사

를 반성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천 전략을 실행해 가야 한다. 역사해석에 대한 논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나, 이는 상대에 대한 일방적 비난이 아니라 상호이해를 깊게 하고 미래를 향한 협력관계를 이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3. 유럽 평화문화의 시사점

유럽은 과거 나폴레옹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등의 전쟁 참화를 겪으면서 반전의식은 물론, 전쟁방지를 위한 국내외적인 여건 형성 및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평화문화 연구도 상당 정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동서냉전 종식 후 유럽은 유럽대륙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저하되면서 전쟁에 대비되는 평화문제 연구에 매달리기보다는 각종 사회적 갈등이 빚어내는 폭력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근대성의 위기로서 복지국가 위기, 구조적 실업문제, 빈부격차, 생태위기, 성문제 등이 사회적 위기로서 폭발할 경우 빚어내는 폭력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양한 제도, 규범, 가치 등의 연구가 평화문화 연구로서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패전이 후 서독에서 진행된 정치교육은 탈근대적 방식을 통해 평화문화를 형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정치교육은 교육이라는 실천적 노력을 통해서 평화문화를 정착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적극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4. 동북아 평화문화 인프라 실태 분석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이며 ‘협력안보’ 또는 ‘안보의존’의 시대이다. 특히 테러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며, 국제적 협력이 절실한 시대가 되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또는 분쟁·갈등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안보의 상호의존의 시대에 종래의 집단안보뿐만

아니라, 지역을 구성하는 국가간 다자간 협력안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자간 안보협력의 유형 중에서, 동북아에서 작동 중인 안보협력의 유형은 한반도 정전협정 이후 존속하고 있는 UN사령부 체제, 한·미 동맹 및 미·일 동맹,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제가 있고, 북한 측에 북·중 동맹, 북·러 동맹 등이 있다. 이들 안보협력 유형은 집단안보 또는 집단자위동맹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에서 협력안보 또는 공동안보에 해당하는 유형은 모색단계라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공동의 협력안보보다 쌍무관계를 축으로 하는 집단안전보장 유형의 동맹이 보편화 되어 왔다. 이는 장기간의 냉전구도를 겪어 온 동북아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협력안보란 집단안보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 대신 구성국가들 간 정치적·군사적 신뢰를 쌓아 회원국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곧 직접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한 외교적 활동에 치중한다.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구속력 없이 안보협력을 이끌어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므로, 협력안보는 집단안보 또는 동맹 형태의 안보협력 체제의 토대 위에 보다 느슨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분단상황하에서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처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과 UN사령부 체제 하에서 기본적인 안보체제를 확고히 하는 토대 위에, 중, 일, 러 등을 포함하는 협력안보 개념을 상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실성이 있을 것이다.

최근 비국가적 행위주체들의 활동범위와 영향력 확대는 시대적 조류인 바, 민간과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문화의 확립을 위해서도 NGO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NGO의 활동과 관련 ‘동북아’는 한국을 비롯, 중국과 일본 등 한국이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뿐 아니라, 지역 특성상 소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대만과 홍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중요성 인식, NGO의 분포 양상, 이슈 설정과 인식에서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한 양태가 나타난다. 우선 이러한 국가별 지역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와 관련된 NGO의 협력 현황, 앞으로의

가능성과 양태를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 각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NGO는 처해진 역사적 발전 과정, 국가 및 시장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간의 관계 등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양태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각 국가별, 지역별 NGO의 주요 활동 분야 및 활동방식 등에서도 차이들이 나타난다. 동북아의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는 대부분 NGO가 국가와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복지 부문에서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을 보조하는 활동에 특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동북아 국가별 특성상,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평화와 관련된 NGO 활동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 시민사회와 NGO의 역할이 높아져 왔던 한국에서 2000년대 초부터 평화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상당한 동원력을 발휘했다. 일본의 경우, 전반적으로 비판적 사회운동이 약화되고 사회의 보수화가 강화되어 가는 가운데, 평화관련 이슈의 비중과 동원력이 약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NGO는 넓은 의미의 '평화' 관련 문제를 놓고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동북아 공동체와 평화문화의 형성은 왜곡된 근대사의 경험과 영향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와 민간간의 공동의 평화노력을 전제로 하는 복합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평화문화는 국제적 과제이면서도 동시에 각 국가의 국내적 발전에 의해서도 영향받는다는 점에서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평화문화는 국제적이며, 복합적이고도 장기간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먼저 동북아차원의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연구의 심화와 구체적 노력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각 국가평화문화에 대한 비교사회론적 인식은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에 대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추진방안의 경우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적 역할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이나, 특히 초기단계에서 시민사회와 민간에 대한 종합적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내용과 기대효과	7
II. 평화문화의 이해	9
1. 평화와 평화문화	11
2. 평화문화의 탈근대적 해석	14
3. 평화문화형성의 제 원칙	18
4. 평화운동	27
III. 동북아의 평화문화	43
1. 한국의 평화인식	45
2. 북한의 평화인식: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71
3. 중국인의 평화철학과 동북아의 평화	96
4. 아시아의 평화와 일본의 역할	114
IV. 유럽 평화문화의 시사점: 독일의 탈근대적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129
1. 유럽의 평화개념	131
2. 평화교육으로서의 독일정치교육	133
3. 탈근대적 평화문화 형성의 의의	142

V. 동북아 평화문화 인프라 실태 분석 .....	145
1. 동북아 다자 외교안보 협력구도의 실태 분석 .....	147
2. 동북아 평화 NGO의 실태분석 .....	177
VI. 결론 .....	201
참고문헌 .....	207

## 표 목 차

<표 II-1>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비교 .....	40
<표 III-1> 평화의 개념(1989) .....	69
<표 III-2> 평화개념(2003) .....	70



# I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근대의 탄생은 자본주의체제의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자본은 그 탄생과 축적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줄 외피를 필요로 했으며, 근대국가의 탄생의 이유는 상당부분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상상된 공동체’로서 민족을 구성원으로 하는 근대국가는 다른 시기와 구별되는 확연한 심적, 물질 경계를 확정했으며, 1, 2차 세계대전은 이와 같은 근대국가의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한 갈등이라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엄격한 경계를 가지는 근대국가는 자신들의 탄생에 기여했던 자본주의의 성격변화에 따라 새로운 변화의 흐름속에 편입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자본이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 자유로운 활동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의 도래는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을 만들어 냈으며, 세계화는 동시에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지역국가간의 통합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의 흐름과 관련을 맺고 있다. EU와 NAFTA는 변화의 구체적인 산물로 근대국가의 경계를 상당부분 완화시킨 새로운 변화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최근의 변화는 근대국가를 형성시킨 근대의 인식틀을 넘어선 탈근대적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 국가주의의 기본틀과 관념을 상당부분 변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선진국가들이 생존과 번영을 지속시키기 위해 세계화와 지역화를 선택하고 있다. 갈등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EU라는 거대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는 유럽의 경우 이와 같은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동북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는 이미 떨 수 없는 긴밀한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굴절된 동북아의 근대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유럽에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탈근대는 근대에 대한 성찰적 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관련 국가들은 아직도 근대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럽과 다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는 경제대국 일본, 13억의 인구를 바탕으로 급속한 산업화과정에 있는 중국, 그리고 세계 10위권의 무역량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 상호 경제적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는 협력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일간의 관계는 어느 일방과의 관계단절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호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간 인적 교류도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아시안컵 축구대회기간 중 중국과 일본 축구대표팀 경기에서 나타났던 충돌과, 이후의 양국 국민 간의 갈등적 정서가 급속하게 확산된 일화는 한·중·일간의 관계의 불균형적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심화된 상호의존성과 인적 교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각국 간의 관계는 갈등적 심층구조를 내재한 상태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따라서 사소한 촉발요인만으로도 상대국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되는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주요한 수출시장이며 경제적 협력대상이지만 한국의 의사에 반하는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한중관계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한·일경제의 긴밀한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강행이나, 유사법제의 제정, 그리고 교과서 왜곡문제 등은 양국민 간의 갈등적 정서를 급속히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동북아 국가간의 협력관계의 확대와 아울러 갈등적 관계가 반복되는 양상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의 주된 이유는 침략과 피침이라는 동북아국가 간의 갈등적 근대사에 일차적으로 기인하며, 근대사의 갈등구조가 이후에도 조화로운 방식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각 국가내에서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근대화화 한반도 강점, 중·일전쟁과 2차세계대전, 한반도의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과 이후의 첨예한 냉전적 대립 등은 왜곡된 동북아 근대사의 핵심적이고도 주요한 계

기들이라 할 수 있다. 근대사의 왜곡된 진행과정에 의해 동북아 관련국들의 평화적 공존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동북아에서 근대사의 왜곡된 진행과정이 과거의 요인이라면 현재적 관점에서도 동북아 각국은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평화적인 선린우호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에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 해소되지 않은 근대사의 유제들이 각 국가내부에서 온존된 채 배타적 민족주의와 친화력을 보이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동북아 각국 내부에서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문화적 지형의 형성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동북아는 국가간 협력적 관계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공존을 지향하는 관용적 국민정서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순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동북아의 각 국가간 관계 혹은 각 국가내부에서 조차 상대방과의 공존을 지향하는 노력은 갈등적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수로 전락했으며, 국민적 정서는 상대국가에 대한 침예한 대결적 국면에 더 친화력을 보여 왔다.

갈등구조의 온존은 외교안보적 차원의 경쟁과 대립구조를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비생산적인 비용의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중국의 패권주의적 경향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후 새로운 군사강국의 출현’ 등은 상대방에 대한 긴장과 경계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담론들이다.

동북아에서의 협력과 갈등이라는 모순적 이중구조의 존재는 동북아 지역 공동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동시에 공존과 공영을 지향하는 평화문화의 형성이 지체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의 각 국민들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관계의 확대는 근본적 한계에 직면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동북아의 긴밀한 상호연계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의 거리감이 상존하는 것은 문화적 차원의 공동체 형성의 노력이 미진했다는 본질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인적 교류와 함께 거대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으면서도 한·중·일 간의 거리감이 상존하고, 상호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동북아가 지역 차원의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공동체는 경제공동체와 함께 동북아 지역 공동체를 완성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각국의 국민간의 문화적 친밀성을 의미하는 문화공동체 형성이 병행되지 않는 경제적, 외교안보적 공동체는 취약한 것일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소는 결국 동북아의 굴절된 근대사를 바로잡는 시도, 즉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사의 왜곡이라는 과거의 요인이 동북아의 내면적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바, 이는 동북아의 공존을 지향하는 평화문화 형성이라는 현재적 관점의 노력에 의해서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굴절된 근대사의 문제를 해소하고, 공존을 지향하는 평화문화 형성노력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분단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의 경우 평화문화의 형성은 보다 실천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현실적 문제이며, ‘평화번영정책’의 근본적 철학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냉전체제가 종식되지 않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한반도에 고착되어 있는 냉전문화를 평화문화로 전환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넘어선 동북아 차원의 평화문화 형성을 통해 완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반도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냉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냉전체제는 동북아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관철되고 있는 국제적 이슈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해소될 수 없는 국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냉전체제는 정치, 외교적 측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역사적인 경험과 연계된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냉전문화 역시 동북아 차원의 역사적 경험과 연계되어 있는 다면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개막에 있어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지양하고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동북아 협력이 핵심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문화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한반도가 동북아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차원의 평화문화 형성을 지향하고, 한반도 내부의 냉전문화 역시 동북아 평화문화라는 보다 포괄적 틀 속에서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실태 분석 및 비교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바, 본 연구는 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국제협력 추진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2. 연구내용과 기대효과

동북아시대와 관련된 학술연구분야의 경우 국내·외 연구동향과 이슈의 제기가 주로 경제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기존의 동북아 관련 연구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의 성격과 의미’(2002),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200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2002)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평화와 이를 위한 문화적 접근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바, 동북아의 공동체적 인식의 결여에 기인했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특히 동북아 개념에 대한 평화문화적 접근과 한반도문제에 대한 연계연구는 미흡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시하지 못했던 평화문화를 중심개념으로 설정하여 연구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우선 평화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평화와 평화문화에 대한 관심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근대에 접어들면서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평화문화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고찰과 아울러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탈근대적 접근을 지향하는 실천

적 노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3국의 평화문화 실태 및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남한과 북한, 중국과 일본의 평화문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각 국가간의 평화문화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비교사회론적 관점에서 동북아 평화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밀한 지역에서 장기간 갈등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온 유럽의 사례를 참고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과 공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유럽지역의 평화문화의 사례를 일반성과 특수성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동북아 평화문화 인프라의 실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로 구별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국가간 협력장치로 공동의 외교안보협력체의 구성이 필요한바, 양자적 관점과 아울러 주변국들의 협력체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비국가적 행위 주체들의 활동범위와 영향력 확대는 시대적 조류인바, 민간과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비정부기구들은 UN산하 기구 또는 국제비정부기구와 연대를 가지면서 동북아 문제 및 민감한 한국문제에 개입하고 있는바, 동북아 지역의 평화 NGO 활동 및 네트워크에 대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 각국의 평화문화에 대한 실태연구는 동북아의 이해 및 공동체 건설에 대한 문화적 관점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기본적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동북아의 각국이 평화적 공존을 통해서만이 동북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보다 근본적 문제의식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성찰적 의미를 제공한다 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물들은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 평화문화의 이해



## 1. 평화와 평화문화

노르웨이 사회과학자 요한 갈통에 의한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의 구분은 평화개념의 이해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sup>1</sup> 소극적 개념으로의 평화란 전쟁의 회피 개념으로 규정되는 것으로서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인 개념의 부정적 규정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극적인 개념에서의 평화는 폭력, 빈곤, 부자유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소극적 평화 개념은 역사적으로 제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새로운 세계대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구상되었다. 이러한 평화개념에서는 평화와 휴전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념의 취약성은 집단적 전쟁의 부재를 평화로 규정짓기 때문에 모든 국제질서의 현상유지 상태를 정당시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적극적 의미의 평화개념은 사회정의가 구현되고 갈등의 민주적 조정 및 국가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평화로 규정한다. 즉 사회정의, 민주적 질서, 국가간 협력 등이 충족되면 평화를 위협하는 폭력적인 상황이 사라져서 인권 보장, 경제발전, 민주적 참여 등의 평화의 적극적인 여건들이 갖추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평화의 위협요인은 크게 구조적 폭력과 전쟁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 폭력과 관련하여 갈통의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갈통은 평화연구에서 구조적 폭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sup>2</sup> 그는 통합 또는 협조라는 뜻에서의 적극적 평화개념 대신, 사회적 불의라는 개념을 지닌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구조적 폭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수많은 아동들이 기아로 인하여 사망하고

---

<sup>1</sup> J. Galtung, "Peace Research: past Experiences and Future Perspectives," in *Essays in Peace Research*, 3/1990.

<sup>2</sup> J. Galtung, *Strukturelle Gewalt. Beitrage zur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Reinbek, Hamburg, 1975).

있으며, 수많은 성인들도 영양실조로 인하여 죽음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 상황의 구조적 원인은 전쟁, 절대빈곤, 권위주의 통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제 3세계 국가들은 후발산업화를 외체에 의해 수행하였으나, 외체에 의한 수입대체 산업화 결과는 저발전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아·빈곤 상황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의 기근과 기아문제가 구조적 폭력의 원인으로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권위주의 정권에 의하여 고문당하고, 구속되고, 암살당하는 등 인권유린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권위주의 통치방식 때문에 참정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

현대 세계는 결코 평화로운 세계가 아니다. 유사 이래 오늘날보다 더 전쟁이 창궐한 때는 없었다. 18세기 이래 전쟁의 빈도와 파괴성은 증대되었고, 전쟁에서의 사상자는 대부분 시민이었다. 전쟁이 발발하면 물리력의 사용이 극대화되어 인도주의자 또는 평화사상들의 이상 및 호소도 수용되기 어렵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전쟁 자체의 논리에 의하여 전쟁 정당론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현대전은 단순히 과거처럼 재래전에 머무르지 않고 핵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소련 붕괴 후 동서냉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핵전쟁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핵의 위협은 인류에 대한 상시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는 아직도 상대방을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으며, 인류의 존재자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 지구상 존재하는 여러 국가들은 대개 인종이나 민족의 구성이 복잡하고, 또한 종교·문화·언어 등에서도 매우 복잡·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종교, 민족, 또는 인종 간에 심한 대립과 갈등의 양상이 나타난다. 민족간 혹은 국가간의 갈등 문제는 분쟁과 전쟁으로 발전하여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세계 각국의 산업화의 가속화에 따라 환경과 자원 등의 문제가 새로운 갈등과 대립의 씨앗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구상의 국가간

혹은 지역간의 분쟁 지역은 현재에도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촌차원의 평화문화형성을 저해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토대로 평화문화를 규정할 경우, “평화 형성을 위한 능력을 지닌 행위자들이 과정, 내용, 구조, 효과 등을 통하여 폭력제거, 갈등 조정, 평화조성 등을 행하는 사회의 문명화 형식”<sup>3</sup>을 의미한다. 즉 사회에서 사람들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면 이러한 상태를 평화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규범적 시각에서 볼 경우 평화문화는 일반적 행위지침으로서 폭력제어라는 구체적 특징을 지녀야 하고, 이것 또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보편타당한 가치 기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구조적 측면에서 평화문화를 고찰할 때 평화적 여건 형성에 주력하는 기구에 평화문화적 가치와 규범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평화문화의 과정적 측면은 평화를 조성하는 과정이 역동적으로 발전되어 생활세계 및 일상생활에서 평화문화를 습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화문화의 기능적 측면은 사회의 문명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평화를 촉진시키는 효과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종교, 여가활동, 가족 등의 생활세계는 점차 경제영역에 의해 침식당하고 식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촉진시키는 것이 정치와 문화가 아니라 경제와 기술 영역이 담당하고 사회적 정향성과 가치를 규정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 평화정책적 측면에서 고찰할 경우 이러한 경제논리에 의한 정치와 문화영역의 식민화 경향은 폭력행사가 증대되는 주요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평화적 여건 조성에 극히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평화문화의 통합적이고 평화지향적인 효과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sup>4</sup>

---

<sup>3</sup> Vogt, Wolfgang R., “Friedenkultur. Zur Vision kultureller Zivilisierung der Weltgesellschaft,” in Wolfgang R. Vogt und Eckhard Jung(Hg), *Kultur des Friedens: Wege zur einer Welt ohne Krieg* (1997), p. 11.

<sup>4</sup> 위의 글, p. 12.

## 2. 평화문화의 탈근대적 해석

### 가. 미래의 비전으로서 평화문화

빈부격차 증대, 구조적 실업문제, 생태위기, 평화문제 등 근대의 위기는 발전이념에 기반한 계몽주의의 한계를 노정시켰다. 빈부격차 증대, 구조적 실업문제, 생태위기, 평화문제 등이 구조적 문제로서 등장함으로써 사회의 해체 및 양극화, 인류존재 기반의 생태적 파괴 등의 문제 대두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역사발전이라는 이상을 심어주었던 근대의 문명화모델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근대의 위기는 과거 체제의 기능 발휘는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위기이다. 더욱이 근대의 위기는 폭력의 구조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의 구조물인 현대사회의 폭력을 제거하고 평화를 촉진시켜야 하는 평화문화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평화를 위한 미래의 비전은 실현 불가능한 유토피아적 상상력의 발현에서가 아니라 폭력을 통한 인간존재의 본질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미래의 생활관계를 발전시켜가기 위한 실현가능한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sup>5</sup> 즉 평화 비전은 합목적 행위에 의해 실현가능한 현실적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평화 비전은 현재 대두된 폭력 상황과 미래의 평화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된다. 평화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폭력 완화 및 평화 촉진을 위한 정치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화비전의 근거에는 문명화 과정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에서 문명화는 전래의 인간 감정의 억제, 인간에 의한 자연정복, 폭력의 순화 등에 의해 개념지울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 탈근대적 성찰에 의해 새로운 방식으로

---

<sup>5</sup> Heiss, Robert, Utopie und Revolution.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fortschrittlichen Denkens (1975), p. 117.

규정되어야 한다. 평화와 연관된 탈근대적 문명화를 위해서는 폭력 없는 갈등조정 기제를 통하여 개인 및 사회의 의식적인 공격성 자정, 폭력 조정 등의 평화모델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sup>6</sup> 문명화는 갈등조정 및 폭력 완화를 위한 제반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됨으로써 폭력, 전쟁, 기아, 억압 앞에서 개인과 사회가 대내외적으로 보호받는 상태를 말한다.

## 나. 예방적 폭력방지로서 평화문화

근대의 구조적 위기현상으로서 실업, 빈부격차, 생태위기, 가정 붕괴 등의 제 문제는 갈등, 증오, 폭력 등을 집중적으로 증대시킨다. 이에 따라 서구 문명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서구사회의 안전과 안정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조적 경제위기, 실업문제, 사회 해체 현상, 가족붕괴, 마약 및 범죄 증가, 인종차별주의 증가 등의 내부 위협의 증대로 인하여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현상들이 지속적인 근대화 진척에 따라 감소될지, 또는 증대되어 폭력적 상황을 연출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 다만 최근 독일 등 유럽에서 가정, 학교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갈등해결의 수단으로서 폭력의 사용 빈도수가 증가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폭력행사가 극히 우발적 동기에 의해 행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현대사회의 문명화모델에 폭력이 구조적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근대의 위기에 따른 폭력의 구조화를 전면 철폐할 수는 없지만, 폭력행사가 최소한으로 방지되도록 평화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sup>7</sup>

폭력의 유형은 갈등에 의하면 개인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

<sup>6</sup> Koenig, Helmut, "Zivilisationsprozess und Frieden," in Jopp Matthias (Hg.) Dimensionen des Friedens, Theorie und Selbstverstaendnis der Friedensforschung (1992), pp. 107-124.

<sup>7</sup> Vogt, Wolfgang R., "Friedenkultur. Zur Vision kultureller Zivilisierung der Weltgesellschaft," in Wolfgang R. Vogt und Eckhard Jung(Hg), *Kultur des Friedens: Wege zur einer Welt ohne Krieg* (1997), p. 16.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8</sup> 개인적 폭력은 구체적 행위자에게 관련이 있으며, 구조적 폭력은 잠재적 기회의 실현을 방해하는 정치·사회·경제적 조건 및 관계에 의한 부정적 결과물로부터 기인한다. 문화적 폭력은 지배와 피 지배관계가 의식에 사회화되어 있는 폭력을 의미한다.<sup>9</sup>

폭력은 국가 내부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가사이에서도 야기된다. 특히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동서냉전이 종식된 후 전쟁 위험성은 보다 더 증대되었다. 동서냉전은 전쟁억지에 상당 정도 기여했으나, 냉전종식 후 종교, 민족분쟁 등으로 내전의 형태로 많은 전쟁이 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종교·민족분쟁은 더 나아가 문화 정체성 차이, 강대국들의 세계전략 등으로 테러 증대, 이에 대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등의 폭력적 상황이 갈등 해결 수단으로서 연출되고 있다. 국익 수호 및 확대 차원에서 국가간 전쟁이 분쟁 및 갈등 해결 목적으로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쟁은 국가간/국내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보다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억압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수단이 되지 못하고, 또 다른 폭력 행사를 불러들이는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군사력 사용은 갈등의 예방에 실패한 정치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sup>10</sup>

현대의 군사적 폭력은 서구문명의 발전에 의하여 더욱 촉발되었다. 서구의 근대는 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생태계 파괴 등의 위험사회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sup>11</sup> 원자폭탄 등의 개발로 인한 핵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인류 파멸의 위험성을 배가시켰다. 그러므로 핵전쟁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

<sup>8</sup> J. Galtung, "Peace Research : past Experiences and Future Perspectives," pp. 291-305.

<sup>9</sup> J. Galtung, *Strukturelle Gewalt. Beitrage zur Friedens- und Konfliktforschung*.

<sup>10</sup> Vogt, W. R., *Das Theorem der Inkompatibilitaet*, in Vogt, W. R.(Hg.), *Sicherheitspolitik und Streitkraefte in der Legitimitaetskrise* (1983) 참조.

<sup>11</sup> 위험사회 이론(Risikogesellschaft)에 대해서는 Beck, Ulrich, *Die Erfindung des Politischen. Zu einer Theorie reflexiver Modernisierung* (Frankfurt/M. 1993) 참조.



현대에서 세계평화는 인류의 정언명령이 되었다. 따라서 평화문화는 국가 간 전쟁, 사회내부에서의 다양한 폭력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문화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 다. 시민적 갈등해결로서 평화문화

갈등은 인간생활의 기본요인이다. 사회적 갈등을 철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은 평화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갈등의 평화적 조정을 위해 요구되는 평화문화는 생활세계에서 폭력적 수단의 매개 없이 갈등이 평화적으로 조정되는 사회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화문화의 사회화 과정에서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평화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평화의 사회화 과정에서 평화능력의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근대의 문명화 과정은 탈근대의 문명화 과정으로 보다 진척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갈등은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적 실천에 의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sup>12</sup>

탈근대적 문명화의 평화윤리는 무엇보다도 비폭력을 의미하며, 비폭력적 갈등해소 원칙이 일반 생활세계의 실천윤리로 발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이 군사적 충돌 및 폭력적 상황으로 진전되기전에 구조적 원인을 진단·개선하고, 갈등 해결을 시민사회내부의 자정기능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조정·해결할 수 있는 시민적 능력 배양이 바로 탈근대적 평화문화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이다. 따라서 탈근대적 평화문화는 갈등이 폭력적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발생을 예방적으로 조치하고 갈등 발생 원인을 미연에 제거하는 사회화 과정을 의미한다. 만일 갈등이 발생할지라도 비폭력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군사력 사용이 되지 않도록 국제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sup>12</sup> Huber, Wolfgang/ Reuter, Hans-Richard, Friedensethik, Stuugart/ Berlin/ koeln (1990) 참조.

### 3. 평화문화형성의 제 원칙

#### 가. 폭력독점(Gewaltmonopol)

폭력의 국가에 의한 정당한 독점상태야말로 평화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13</sup> 일반시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정체성 및 이해관계상의 갈등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물리력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민주적 논쟁을 통해 평화적으로 조정되어야 시민사회의 평화 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은 가능한 모든 물리력을 국가에 위임하고 국가의 물리력 행사 역시 법에 의해 추진될 경우 시민사회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즉, 물리력이 사람들의 행위영역 밖에 존재하고, 이에 대한 접근 역시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이해당사자들은 시민사회 공공영역에서의 논쟁, 정책 대결 등으로 자신의 이해관계 및 정체성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레바논, 북아일랜드, 그리고 보스니아 등의 경우처럼 국가에 의한 폭력독점 상황이 붕괴되고, 이해집단간의 물리력 행사가 일상화된다면, 안전과 평화의 근본이 파괴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 나. 법치국가 원칙과 민주적 참여

정치의 탈근대적 문명화과정은 인권과 법의 지배 원칙의 확립에 있다. 이러한 법치국가 원칙은 헌법의 기초 아래에서 인간존엄성, 자유, 정의, 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지녀야 한다. 국가의 물리력 독점은 경우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폭력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치국가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즉 이해 당사자 또는 이해 집단간 갈등에 국가가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개입하여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이러한 국가의

---

<sup>13</sup> Senghaas, Dieter, "Kultur des Friedens im Lichte des zivilisatorischen Hexagon," in Wolfgang R. Vogt und Eckhard Jung(Hg), *Kultur des Friedens: Wege zur einer Welt ohne Krieg* (1997), p. 34.

물리력 행사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당성 위기에 빠지게 된다. 국가의 폭력 독점은 사유재산권 보호, 외적 침입방지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시민사회 내부의 사적 집단 및 개인에게 중립성을 지킬 목적으로 허용되지만, 사적 개인 및 특정집단의 이해를 보호할 목적으로 국가가 시민사회에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 경우 국가의 물리력 사용은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의적 사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폭력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치국가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sup>14</sup>

이러한 법치국가 원칙은 기본적으로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천부인권 보장을 근본으로 두고,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의 제도적 장치를 두는 한편, 시민사회 내부를 조정하고 규정하는 다양한 법칙 및 규범을 하위구조로 둔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이해관계 및 정체성 갈등은 예외가 아닌 일반적 현상이므로 제도화되어 있는 국가물리력은 항상 정당하고 중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평화문화적 차원에서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법치국가적 원칙이 붕괴된다면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과 정체성을 유지·확보하기 위하여 평화를 버리고 다시 무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치국가 원칙은 국내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평화문화 논의에서는 민주적 보편주의(demokratischer Universalismus)가 평화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서구 민주주의는 정치적 영역에서 배제와 포함의 원칙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서구 자유주의 전통에 입각하고 있는 민주주의 논의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는 사적인 영역인 경제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공영역인 정치부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자유주의적 배제의 원칙은 서구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경우 민주적 보편주의는 경제적 부문과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분야, 즉 시장경

---

<sup>14</sup>위의 글, p. 36.

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실질적으로 정치적 공공부문에서 중대한 정당성 확보문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평화문화 이해는 서구 민주주의를 정치적 민주주의로 단순화시킨 것으로 비판한다.<sup>15</sup>

서구 민주주의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적 보편주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고, 유럽, 미국 등 특정지역의 국민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서구 민주주의는 국가의 폭력 독점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배집단의 언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문화적 단일성을 특정 영역에서 관철시킨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언어, 역사, 인종, 종족 등의 구성요인이 대부분 동질적 요인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제부분 이외의 생활세계(Lebenswelt)는 종교, 여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여 독일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매우 동질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은 민족형성(Nationbuilding)이 문화민족이라는 문화적 동일성에 의해 이루어졌다. 반면, 영국은 다민족적 구성으로 인하여 문화적 동질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 이념 및 질서에 의한 민족형성은 국가민족(stationation)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 이입으로 인하여 문화적 정체성의 동질성이 훼손되고 문화다원주의(Multikulturalismus) 현상이 나타나면서 문화다원주의는 평화문화적 차원에서 주요 연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다원주의로 인한 문화정체성 문제는 북아일랜드 분리독립 문제 등에서도 대두되듯이 유럽 학계에서 중요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질적 문화공동체들이 공존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전투적인 문화를 진단하고 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서구의 민주적 보편주의는 경제적 이해관계, 종교, 인종, 종족, 세계관 등의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회평화 위협요인들을 평화문화 분석영역에서 배제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sup>16</sup> 따라서

---

<sup>15</sup> Gerhard, w. "Friedenkultur und Moderne," in Wolfgang R. Vogt und Eckhard Jung (Hg), *Kultur des Friedens: Wege zur einer Welt ohne Krieg* (1997), p. 37.

<sup>16</sup> 위의 글, p. 38.

서구 민주주의에서 평화문화 문제는 보다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는 영역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처럼 서구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으로 구분하여 종교, 종족, 인종, 성, 세계관 등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치적 영역인 공공영역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서구 민주주의는 종교, 종족, 인종, 성, 세계관 등의 요인을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배제하고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위에서 거론된 요인들은 실제로 시민들의 사회적 존재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갈등과 위기를 야기 시키는 주요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민주적 참여과정을 통하여 개선된다면, 서구 대의제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로 확대·발전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지속적으로 구조적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한번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지속되고, 사회적 구조가 변화하면 사회적 합의 역시 변화되어진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라 침예하게 대립된 정체성 및 이해관계의 갈등구조가 폭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조직화된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수면 아래 잠복되어 있는 이해관계를 조직하고 민주적으로 참여시키는 기회와 규범이 존재해야 한다. 특히 1989·90년 동유럽 민주화 사태가 시사하듯이 잠복되어 있는 이해관계가 민주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정치적으로 이러한 이해관계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어진다.

그러므로 민주적 참여에 대한 기회부여는 건설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사회적 변화가 빚어내는 갈등구조는 민주적 참여방식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사회적 변화가 만들어내는 사회갈등을 민주적 참여방식으로 해소시키지 않는다면 현대사회의 사회적 갈등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고 사회평화는 보존될 수 없다. 그러나 민주적 참여방식은 표출된 사회갈등을 민주적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갈등해소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소수집단이 다

수집단이 될 수 있고, 특정 요인으로 인하여 다수집단이 될 수 없는 소수 집단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민주적 참여방식이야말로 현대사회의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규범임과 동시에 평화를 지향하는 문화적 지침이다.

## 다. 감정통제

현대사회는 노동, 정치, 종교, 종족, 성, 인종, 여가생활 등 다양한 삶의 양식을 제공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역할도 노동 등의 특정 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에 대한 입장, 활동, 종교생활 등 다양하게 특징지어진다. 또한 현대사회의 다기적 성격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정체성 및 이해관계 역시 다양하게 형성되고, 이에 따라 정체성 및 이해관계 갈등도 다양하게 분출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인간들은 다원적 정체성(Multiple Identitaet)을 소지하게 되었다. 다원적 정체성으로 인하여 현대사회의 자아는 다양한 정체성 요소들이 중층적으로 결합하여 동시에 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 열린 기제로 파악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정체성은 다기화 되어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또한 각 정체성의 강약과 상황적 변화에 따라 현대사회에서의 자아는 복합적으로 표현되어진다.

이처럼 탈근대 사회에서 정체성 및 이해관계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은 총체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어 일반적으로 폭력적 상황은 조성되지 않는다. 예컨대 노동 부분에서의 불만족은 직접적으로 노동쟁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폭력행사로까지 발전되지 않는다. 또한 정치적 불만족은 여가활동을 통하여 충족되거나, 노동활동에서 만족스러운 상황에 있으면 직접적인 폭력사태로까지 표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다기적 성격과 이에 따른 다양한 역할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중층적으로 형성하여 특정 부문에서의 갈등을 축소시키는 감정통제

(Affektkontrolle) 기능을 수행한다.<sup>17</sup> 현대사회에서 갈등이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다른 분야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 라. 사회정의(Soziale Gerechtigkeit)

현대사회는 봉건제, 노예제 등의 전통사회와 유사하게 여러 층의 불평등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전통사회와 다른 점은 수직적·수평적 사회적 유동성을 지닌 사회라는 점이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스스로 무제한적인 사회적 유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얻은 능력을 통하여 타고난 사회적·지정학적 약점을 극복하고 사회적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즉 현대사회의 사회적 상승은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신분제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사회에서의 사회적 유동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불평등이 지배하고 있지만 높은 사회적 유동성이 존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정의를 준수되고 경기규칙에 대하여 적극적인 계도가 이루어진다면 사회갈등은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계층이동이 자유로워야 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동일한 출발선 위에서 경쟁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의 개별능력 향상을 위한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더욱이 최소한 수준의 복지혜택이 제공되어 인간적인 삶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공정성은 사라지고 차별 당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사회적 상승기회가 박탈당하는 의식을 지닐 경우 사회는 매우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사회구성원 대부분은 사회적 상승 희망이 무산되고 모든 사회적 규칙은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

---

<sup>17</sup> Senghaas, Dieter, "ultur des Friedens im Lichte des zivilisatorischen Hexagon, in Wolfgang R. Vogt und Eckhard Jung(Hg)," *Kultur des Friedens: Wege zur einer Welt ohne Krieg* (1997), p. 35.

문에 기존의 사회적 규범, 문화, 법칙 등을 무시하고 새로운 규범 및 법칙 등을 정하기 위하여 폭력행사를 불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회와 분배정의 등과 같은 사회적 유동성을 보장하는 사회정의 확립과 더불어 공정한 규칙 제정이야말로 사회내부의 평화를 재생산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8</sup>

그러나 이러한 사회정의 구현을 통한 평화문화의 창출은 지구촌화 현상에 의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가 국민국가 영역을 벗어나서 국제화되면서 국민국가의 사회·경제정책은 국제적 자본논리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다. 즉 정치가 경제논리에 의해 지배받게 되면서 사회정의 확립에 의한 평화문화 형성도 어려움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적 자본논리를 제어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이 한층 배가된다.

서구 근대성은 시장경제적 관계 형성을 통하여 사회평화를 유지·발전시켜 온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인간을 봉건적 질서로부터 해방시켰으나, 인간관계는 시장경제의 운용논리에 상당 정도 규정되었고, 시민사회 내부에 자본과 노동이라는 계급적 전선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시장경제의 “보이지 않는 힘”은 경쟁을 통하여 시장 참여자에게 복지의 증진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시장경제의 작동이 위기에 빠지는 경제위기시에는 인간은 갈등, 투쟁 등이 일상화됨으로써 사회평화가 파괴·훼손되는 상황에 봉착된다. 즉 근대성의 창조물인 시장은 항상 사회평화를 보존해주는 기제가 아니라 사회평화를 파괴하는 기제로도 작동할 수 있다.

유럽에서의 평화문화 연구는 사회변화에 따른 개인주의화가 사회평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의한 경제적 합리성은 업적(Leistung)에 의한 평가와 이에 따른 물질적 보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구조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예를 들면 결혼,

---

<sup>18</sup> Gerhard, w. “Friedenkultur und Moderne,” in Wolfgang R. Vogt und Eckhard Jung(Hg), p. 38 참조.



가족 등과 같은 부양기제는 사라지게 되고, 직업의 전문성도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사회평화가 평화문화의 불가결한 요인이라면 가족, 결혼 등의 전통적인 사회조직 등이 작동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역불가능한 개인이 사회적 주체로서 등장한다. 사회적 주체로서 등장한 개인은 시장경제의 합리성 요구에 따라 혁신능력, 창조성 등을 요구받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구조형성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은 사회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기회균등과 사회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의 상호공존과 사회규범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 평화문화는 그 효용성을 상실한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이 더욱 발전하면 폭력의 국가독점은 점차 폭력의 사유화에 의해 잠식당함으로써 법치국가 원칙은 경시되거나 붕괴되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교, 정치 등의 특정 다른 부분에서 수용하여 축소되었던 감정도 폭발하여 사회적 규범으로써 기존의 협상기제도 붕괴되고 협상당사자나 집단들은 무장을 하는 등 사회평화는 사라지고 폭력적 상황이 일상화될 수 있다.

## 마. 자연과의 조화

오늘날 우리들은 생태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생태위기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로 인해 인간사회의 지속적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컨대 쓰레기를 동화할 수 있는 자연의 자기정화능력이 파괴되었고 인류생존 및 문명활동에 필요한 자연자원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의 생태위기는 지구의 지속적인 온도상승을 유발하는 온실효과 문제, 전 세계적으로 열대우림의 파괴로 인한 사막화 및 생물종의 멸종 위기 증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 인구팽창, 무한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원고갈문제 등을 초래하여 인간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 한계가 노정된 시점에서, 인

간사회의 지속발전 여부는 예측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들은 1972년 로마클럽보고서가 경고한 “성장의 한계”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생태위기는 새로운 사회사상을 요구한다. 악화된 생태위기는 서구에서 이른바 생태사상 또는 녹색사상을 등장시켰다. 기존의 사회사상이 정립되는데 수세기가 필요하였음에서 볼 수 있듯이, 녹색사상은 그 등장 이후 약 몇 십 년 정도의 시간밖에 갖지 못함으로써 아직 이론적 응집성 보다는 분파적 다양성을 자신의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녹색사상의 유파들은 자연과 인간의 일체적 조화 위에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생태위기에 직면한 현대사회에서 평화문화 논의는 자연과의 평화를 전제하지 않고는 결코 진행될 수 없다. 과거 서구에서 자연은 동양의 자연 개념과 유사하게 자체의 의미와 더불어 자체 동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따라 인간은 자연을 외경의 대상으로서 간주하고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자연관에서는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까지도 지배하는 강력한 하나의 주체로서 등장하였다.<sup>19</sup>

그러나 자연 및 과학기술에 관한 서구의 근대성은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간주하여 과학기술의 무한한 발전을 통하여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 특히 근대적 자연관은 자연을 인간에게 원료를 제공해주는 절대적 객체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자연은 인간의 정복대상 및 착취대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근대의 지배사상은 자연환경의 파괴로 나타나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로 만들었다. 예컨대 무한정한 과학기술 발전철학과 이와 연계된 자연지배 사상은 자연자원 고갈 및 환경보호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기후대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보다는 긴장을 초래하여

---

<sup>19</sup> 평화문화와 생태위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Albrecht-Heide, Astrid, “Wege aus der Gewalt in der Dominanzkultur,” in Wolfgang R. Vogt und Eckhard Jung(Hg), *Kultur des Friedens: Wege zur einer Welt ohne Krieg* (1997), p. 45 참조.

자연과 인간사회간의 평화적 공존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 문제와 관련, 근대성은 보다 자연과의 균형과 조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자연과 인간 사이에는 긴장과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중국에는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보복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 4. 평화운동

### 가. 평화운동의 역사적 고찰

평화사상은 그 연혁이 오래이며 이미 구약성서의 《이사야서(書)》에 나타나 있다. 유럽에서 평화사상의 원류는 기독교에 표현되었다. 그것은 철학적인 논리 및 법의 논리로서 그로티우스, 루소, 칸트 등에 의해서 주장되고, 제국주의전쟁으로 전쟁형태가 변천함에 따라 마르크스, 레닌의 평화론이 나왔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파시즘이 세계에 대두하고 전쟁의 위기가 높아졌을 때, 롤랑, 러셀 등은 반파시즘이야말로 평화로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제 1차 세계대전 후에는 평화의 확립을 위한 국제적 조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국제연맹·부전조약(不戰條約)·군축회의 등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 역시 결국 실패하였으며,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합의 경우도 주어진 임무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평화에 대한 약간의 역사적 고찰을 해 보면 고대 그리스에서의 전쟁은 대부분 제한적·부분적 전쟁이었고, 직접적인 전쟁 피해자의 평화요구에 대한 발언권도 강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선철(先哲)들은 전쟁을 가리켜 ‘도시국가의 생명력을 시험하는 건강한 시련’ 또는 ‘인간사회에서의 자연적 현상’이라고 표현하였다. 유럽에서 인류 평화에 대한 요구를 최초로 강력히 제기한 것은 원시 기독교였는데, 절대 평화사상의 입장에 서서 전쟁 자체를 부인하였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면서 국가체제에 순응하여 전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렀지만,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덕적 율법’의 침범자를 제재하는 전쟁 이외에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였다. 여기서 전쟁을 ‘정의의 전쟁’과 ‘불의의 전쟁’으로 구별함으로써 전쟁을 정전(正戰)에만 한정시키려는 최초의 시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율법이란 기독교적 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전론은 비기독교 국가에 대한 전쟁에 주로 적용되었다. 십자군전쟁은 이교도에 대하여 철두철미 정전이라는 명분으로 수차에 걸친 비평화적 전쟁으로서 모든 기독교 국민의 전쟁 참가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메시아 사상적 사고는 전쟁을 제한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전인류를 기독교에 교화시킬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도의적 의무를 고취함으로써 도착적 호전주의로 전락하였다.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도 이미 종교화된 이념간의 적대적 대립은 어느 진영에서나 왕년의 십자군적·광신적 이미지가 체현되어 있다.

그로티우스는 선구자들의 정전론을 계승하면서도 정전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자연법이라는 만인에 공통되는 이성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평화론의 발전을 한 걸음 더 진전시켰다. 그의 이러한 정전론은 살육행위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30년 전쟁’에 대한 심각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며, 후세에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평화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는 생피에르의 국제연맹계획이 그 최초이다. 이것은 루소에게 계승되어 칸트에 이르러 한 걸음 더 발전하였다. 칸트는 각국은 자신의 막중한 주권의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국제조직을 만들어 전쟁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인류 본래의 도덕적 이성 에 의한 전쟁폐지의 요망으로부터 자신이 제창한 평화연맹이 창설되리라고 확신하였다. 또한 칸트는 ‘영구평화’의 조건으로 ‘공화정체(共和政體)’를 거론하였는데, 이는 공화정체가 평화적인 서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킬 수 있는 최상의 제도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상호무

역 확대가 전쟁방지에 유리하다고 보는 이성의 판단과 일체의 비밀조약을 비판하는 공개적 저널리즘을 강조하였다.

평화주의를 집단적으로 실천하려던 사람들은 17세기의 퀘이커 등 기독교의 소종파 그룹들이 있었으나, 정치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었다. 18세기말에 이르기까지, 평화문제는 사상가 개인의 윤리의식에 머물고 대중적인 실천운동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 그러다가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오면서 윤리적인 평화주의자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대중적인 평화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평화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조직된 힘과 여론을 통해서만 반평화적인 현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9세기 평화운동은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운동에서부터,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적어도 1차대전 이전까지, 즉 2차 헤이그 평화회의 때까지는 전쟁을 없애고 군비를 감축하며, 분쟁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윤리적 정신이 강하게 지배하였다. 그렇지만 윤리성이 강한 결의문이나 협약은 국제정치의 현실에 맞지 않아 결국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특히 1차대전은 평화운동과 회의의 결의문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현대의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이 칸트가 제창한 국제평화기구의 현대적 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기구도 그 목적이 전쟁을 제한·방지하는 데 있으면서도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무제한적인 전쟁으로 발전하더라도 속수무책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자위(自衛)의 전쟁’은 ‘정전’이라는 신념이 깔려 있다. 현대의 핵시대에 있어서 ‘예방전쟁’의 정당화로 유도하는 위험사상이 바로 이러한 자위전쟁의 신념인 것이다. 국제연합의 전쟁금지 조항은 전쟁을 금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략자의 낙인을 회피하려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만을 증대시킬 뿐이다. 근래에 세계정부 이론이 등장하였는데, 대국이 각각 상대방을 신뢰하고 자국의 주권을 세계정부에 양도할 결의를 가지지 않는 한 세계정부는 하나의 이상은 될 수 있으나 현실은 될 수 없다. 금일의 평화사상자들은 평화문제가 단순히 핵무기의 폐지 내지는 군비축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야심·이익·경쟁심·불안·공포 등 요컨대 신뢰의 문제이며 정치의 문제임을 도외시한다.

## 나. 국제평화운동

평화 문제를 생각하고 논해온 역사는 아마도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적 조직을 통한 사회적 평화운동은 19세기에 와서야 일어나게 되고, 평화연구나 평화정책은 20세기에 와서, 그것도 2차 대전을 겪고 나서야 실제적인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sup>20</sup>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운동은 그 이전의 반전운동과 비교할 때 새로운 특징과 전망을 가진 것으로 구별된다. 일시적 평화의 유지가 아닌 전쟁의 절멸, 항구적 평화의 실현을 지향하되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적 내지 전제로 삼지 않으며 민주주의적인 목적에만 한정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평화운동은 정당·파벌·사상·신조의 차이를 초월하여 광범위한 각 계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후 평화운동의 새로운 특징과 전개는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한 파시즘의 타도와 민주주의의 승리에 의해서 이룩된 전후의 역사적·사회적·정치적 제 조건에 의하여 지탱·추진되어 왔다.

2차대전 이후의 평화문제가 국제화하고 정치화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평화연구라는 학문이 나타났다. 평화문제가 윤리적 규범의 차원을 넘어어서서, 현실 정치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화보장의 정책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화를 위협하고 깨뜨리는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이며 과학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인식이었다. 우선 군비를 축소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도 객관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통제와 감시의 방법이 있어야 하며, 무력을 가지고도, 충돌이 생기지 않는 방안에

---

<sup>20</sup> 이하 '1. 국제평화운동의 역사'와 '2. 냉전종결이후 평화연구의 주요 경향'은 이삼열, "세계 평화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방향"의 요약임.<[www.peacemom.com](http://www.peacemom.com)>.

대한 정책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연구는 1955년경부터 동서의 냉전체제 속에서 미소 양대 진영간에 존재하는 갈등과 대결구조를 연구해서, 대립을 완화시키고 핵전쟁의 파멸을 막는 정책을 연구 개발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50년대에 미시간 대학의 갈등해결연구소(Center for Conflict Resolution)가 출판한 학술지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이 주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발표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과도 깊이 관련된 이 갈등연구들은 어떻게 하면 국방전략이나 무기 체제를 개선해서 상대방이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며, 일어날 수 있는 위기를 잘 관리해서 (Krisenmanagement)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가가 연구의 주 과제였다.

그런데 이처럼 군사 전략 차원에서의 평화연구에 대한 비판이 베트남 전쟁 경험을 거치면서 1960년대 후반에 발생했다. 안보 전략적인 평화연구나 갈등의 조정이 평화의 보장책이 될 수 없고, 위협체제를 유지하며 위기로 몰아가는 전략일 뿐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평화연구자들은 이제까지 평화연구가 미국과 소련의 타협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평화공존체제를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용하게 지배하는 전략에 기여하는 연구라고 비난하였다. 이들은 국제평화연구협회(International Peace Research Society)의 세미나를 통해 안보 전략적인 평화연구를 비판하고 [비판적 평화연구]를 비판적 사회과학의 일부로서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비판적인 평화연구의 대표자인 갈통(Galtung)에 의하면 평화의 개념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눌 수 있는데, 소극적 평화는 단순히 보이는 전쟁이나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말한다. 적극적 평화는 잠재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까지 없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한다. 그러면 평화를 적극적인 의미에서 실현한다는 것은 사회구조가 가진 모든 폭력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곧 사회정의의 실현을 의미하게 된다. 결국 평화는 인간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죽게 하는 모든 구조적인 폭력들, 즉 정치적 독재, 경제적 착취, 사회적 차별과 소외, 인종탄압에서부터 해

방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한편, 평화운동을 해오던 측에서도, 이제는 변화된 상황에 맞게 평화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민족,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갈등과 대립으로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 국제적 분쟁들과 과학기술 산업의 발달로 엄청나게 증대하는 대량살상 무기와 군사력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는 윤리적 호소나 평화주의적 원칙만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평화문제는 평화정책 편에서나 평화운동 쪽에서 모두 과학적인 연구를 지향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새롭게 등장하며 부각되는 평화연구소들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때에 군비축소와 평화문제를 연구하는 기관들이 20여 개국에 일백여개나 생기게 되었다. 이런 현상을 갈통(Galtung)은 평화운동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 of the peace movement)<sup>21</sup>라고 했다.

평화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기는 1980년대 유럽에서의 평화운동이었다. 80년대 초에 영국·독일·네덜란드·스칸디나비아반도 등 유럽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평화운동의 시위에 참가하고 핵무기의 철거를 외친 일은 예전에는 전무했다. 80년대의 새로운 평화운동은 그 이전의 평화운동과는 성격과 의미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평화운동은 대체로 전쟁과 비인도적 폭력들을 반대하는 운동이었지만, 국가와 민족의 안보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까지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운동은 아니었다. 이처럼 체제 개혁적인 성격을 갖지는 못했으나 80년대의 평화운동은 핵무기 증가나 동서대결의 안보전략에 대한 반대운동을 넘어서 자본주의적 산업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들, 즉 고도성장, 자본의 독점, 군수산업의 확대, 업적주의와 효율우선주의, 환경파괴, 사회 계층적 분열 및 대립 등 체제와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 발상의 전환과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폭넓은 운동이었다고 하겠다.<sup>22</sup> 이 운동이 이렇게 새로운 체제와

<sup>21</sup> Johan Galtung, Peace Research, in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Collier-Macmillan London (1968), Vol. II, p. 495.

<sup>22</sup> Peter Schlotter, "Zur Zukunft der Friedensbewegung. Rahmenbedingungen alternativer Politik," in: Reiner Steinweg(Hrsg.), *Die Neue*



의식,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데는 70년대부터 나타난 새로운 가치관과 철학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나 새로운 환경운동으로서의 녹색당의 출현이 큰 자극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 다. 냉전 종결 이후 평화연구의 주요 경향

90년대에 와서는 냉전 종결과 함께 양대 진영간의 전쟁과 폭력적 충돌의 방지와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평화연구는 그 대상을 잃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민족적 지역적 문화 종교적 갈등이 급격히 심화되었고 피 흘리는 열전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냉전체제는 나름대로 양대 진영의 초강대국의 통제와 영향 속에 민족이나 지역, 문화적 갈등을 억제할 수 있었으나, 두 슈퍼 파워의 체제수호를 위한 통제가 사라진 공간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확산되었다.

따라서 냉전 종결 이후 평화연구에서는 내용과 중점이 크게 달라졌다. 평화연구는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갈등을 순화시키거나, 평화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에 더 중요한 관심과 의미를 두게 된다. 즉, 평화는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의 방지라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이나 대립의 요소가 제거되고, 보다 더 긍정적인 평화의 구조가 갖추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평화연구의 중심과제는 갈등연구로 옮겨지게 되며, 갈등의 보다 문명적(Zivilisierung, 개화적, 교양적) 처리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어느 사회, 어느 지역, 국가에도 갈등은 있기 마련이며, 인간사회에는 계속 새로운 갈등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려면 갈등을 야만적으로가 아니라 보다 문명적으로 해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연구에 문명화라는 긍정적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문명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 평화를 만드는 길임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평화연구가 마치

---

*Friedensbewegung*, Suhrkamp, Frankfurt, (1982), p. 17.

문명화의 과정이나 내용 방법을 연구하는 것처럼 보여 지기도 한다.<sup>23</sup> 예를 들면, 인권과 복지와 자유, 소득, 여가생활 등이 확장되면 보다 더 문명화된 상태로 규정하고, 독재와 억압, 지배, 빈곤, 과로, 강제성 등의 지수가 높아지면 문명의 저하나 상실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며,<sup>24</sup> 이것이 평화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이다. 갈등의 문명적 해결책으로 가스(Senghaas)는 폭력의 사유화금지, 법치국가, 상호규제, 민주적 참여, 사회정의, 건설적 갈등의 문화 등 여섯 가지로 제안하여, 구조를 적극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다.<sup>25</sup>

## 라. 평화 운동의 국제 과제

평화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첫째, ‘군축과 인간안보’에 관한 것이다. 이 주제는 무기 자체의 감축과 함께 인간안보의 확보와 관련된다. 침략과 대량학살에 대한 일방적 군사 개입을 막을 수 있는 다자적인 안보로 전환, 군사력의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감소를 위해 비무장 갈등해소를 강화하고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현하는 전쟁금지 국제활동계획의 집행, 지구적, 지역적 안보기구의 강화, 지구경제의 비무장화를 위해 군사예산감소와 인간안보 프로그램으로의 자원 전환, 핵무기 폐지 국제조약의 협상과 비준 촉구, 재래식 무기의 사용과 확산의 금지, 우주공간에서 신무기와 신군사기술의 사용과 개발금지, 전쟁폐지를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건설 등과 관련된다.

둘째, ‘무력분쟁의 방지, 해결과 평화적 이행’에 관한 것이다. 이 주제는

<sup>23</sup> Wolfgang R. Vogt, “Zivilisierung und Frieden.” pp. 91-135.

<sup>24</sup> 위의 책, p. 109.

<sup>25</sup> Dieter Senghaas, “Frieden als Zivilisierungsprojekt,” in ; Wolfgang Vogt(Hg) Frieden als Zivilisierungsprojekt, Baden Baden, (1994/95). (Vivilisatorisches Hexagon).

<sup>26</sup> 정경란, “세계 여성평화운동의 현황과 21세기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www.peacewomen.com>.

정부가 폭력갈등의 방지, 해결, 전환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전제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외교뿐만 아니라 다자적인 외교체계(multi-track diplomacy)의 중요성과 연결된다. 즉 갈등의 해결은 정부, 국제기구, 민간외교라는 다양한 갈등조정 주체가 제역할을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화 정착을 위해 유엔의 능력 강화, 지역시민사회 참여 확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강화, 시민평화전문가의 훈련 촉진, 소수민족의 이해 대변, 평화단체 강화, 여성의 역할 강화, 미디어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평화와 관련된 국제인도주의법, 인권법과 그 기구들에 관한 것이다.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이 유엔 헌장을 무시한 것처럼 국가이익을 위해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의 집행과 주권국가의 법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형사재판소 성립을 위한 전지구적 캠페인 강화, 국제사법재판소의 개혁과 역할 확대, 보편 죄에 대한 보편적 사법권의 강화-피노체트 선례, 무력갈등 희생자 보호와 보상제공 방법, 인권보호를 위해 갈등 금지, 갈등 해결 및 갈등 후 재건 문제 등에 대한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

넷째, ‘전쟁의 근본적 원인/평화의 문화’에 관한 것이다. 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문화는 직결된다. 지난 한 세기동안 무장 갈등의 원인과 행위는 변화했지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폭력의 사용은 증가했다. 다양한 민족적 그리고 하부민족적(sub-national) 행위자들이 폭력을 그들의 다양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고려하는 추세에서 평화의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쟁의 원인으로서는 가난과 경제적 불평등, 인종적 종교적 갈등과 민족주의 운동, 환경악화와 자연자원의 부족과 잘못된 사용, 식민주의의 지속을 포함한 원주민의 소외, 미디어의 폭력선정성, 지구적 지배를 위한 민주제도의 부재, 인권 보호의 실패 등이 있다. 평화의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학교, 미디어에서 평화교육의 확대, 21세기 평화권에 대한 유엔선언을 지지하는 것, 평화,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의 적대

적인 효과 제거,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의 근절, 인종, 민족, 성, 종교에 대한 불관용 제거, 성 정의(Gender Justice) 촉진, 국제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지구적 지배(global governance)의 촉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중요한 평화캠페인이 3차 헤이그 평화회의 이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소형무기에 대한 국제활동네트워크(IANSA: International Action Network on Small Arms)의 발족-www.iansa.org. 이 캠페인은 소형무기의 확산과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해 200개 이상의 비정부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국제대인지뢰대책회의 이후 가장 큰 네트워크이다.

둘째, 평화교육을 위한 지구적 캠페인. 세계 시민들이 평화의 문화를 전지구적 문제로 이해하고 비폭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가질 때, 인권과 평등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실제로 집행될 때 가능하다. 캠페인은 평화의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엔이 정한 세계어린이를 위한 비폭력과 평화문화를 위한 10년을 지원하고 각 교육기관에 평화와 인권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지구적 비준캠페인-www.igc.org. 1998년 7월에 국제사회가 채택한 국제형사재판소법령에 대한 이해를 시민사회, 미디어, 정책결정자들에게 확산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당국에 비준을 촉구하는 활동을 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사안을 판결하는 최초의 국제상설재판소가 될 것이다. 60개 국가가 이 법령에 비준하면 이 재판소는 상설화될 것이다.

넷째, 핵무기폐지 캠페인-www.ddh.nl/org/ialana. 핵무기 확산금지 조약의 6조와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안에 기반한 핵무기폐지협약에 핵국과 비핵국이 동의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다섯째, 전쟁방지를 위한 전지구적 행동(Global Action to Prevent War)캠페인-www.idds.org. 단일 주제 평화캠페인은 갈등, 가난, 인권

위반, 환경파괴, 차별과같은 모든 도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갈등예방, 평화유지, 군축, 인권촉진조치, 법의 지배 등을 상호 연관시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단일주제 캠페인의 연합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 외 열화우라늄탄(depleted uranium) 반대 캠페인, 어린이 병사 사용 금지 캠페인 군축과 지구화에 대한 국제네트워크가 발족하였다. -www.icbl.org. 이와 함께 국제대인지뢰회의의 대인지뢰협약 집행을 위해 70개국에 1,000개 이상의 비정부단체들의 연대조직인 국제대인지뢰 대책회의는 1997년 대인지뢰금지조약을 보편화, 비준,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마. 신사회운동과 평화문화

근대에 대한 성찰적 관심이 제기되면서 나타난 신사회운동은 평화운동의 현대적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사회운동은 근대의 위기가 빚어내는 폭력적 갈등상황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고 그 대안을 추구해 나가는 대안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은 근대시민사회의 성립과 궤적을 같이한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는 봉건적 구속을 벗어나 시민들이 억압적·착취적 국가에 대항하여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를 추구한 기나긴 시민혁명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서구의 시민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원동력이었다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사회경제적으로는 이기심과 탐욕이 난무하는 자본주의적 계급갈등의 전투장이기도 하였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서구역사에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먼저 양자간의 긍정적인 관련성을 지적하자면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 합리성은 시민사회의 합리화를 촉진하여 시민들이 자

유로운 주체적 개체로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예컨대 각종 시민권 확대운동은 이같은 시민적 주체성에 입각하여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고유한 계급불평등으로 시민사회는 계급적 분열과 투쟁이라는 끊임없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확대되어 왔던 서구사회의 민주화과정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해화(形骸化)와 복지국가의 실패라는 난관에 봉착하고 만다. 특히 기술관료적 합리성이 시민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시민사회의 공공 영역은 자유로운 공론이 형성되는 장이라기보다는 권력관계에 의하여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위축되거나 왜곡되어 정치경제적 체계의 식민지로 변질되고 있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 권력엘리트들이 연출하는 하나의 정치적 무대가 되어버렸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투표권의 행사와 함께 소멸되어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평가절하 되었다. 그리하여 시민사회는 점차 내부적으로는 각종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역기능을 산출하는 문제의 영역이 되었으며, 외부적으로는 점증하는 국가개입주의에 의해서 자신의 독자적 정체성을 위협받는 하위영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서구의 시민사회는 1960년대가 되면서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독점화, 신 제국주의화, 불평등화, 엘리트화, 관료제화, 형식화하는 상황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구미 선진자본주의 사회를 휩쓸었던 1960년대의 각종 사회운동은 단순한 반정부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의 수준에서 제기된 것이라기보다는 서구의 시민사회가 당면하고 있던 총체적인 문명적·체제적 위기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1960년대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사회운동의 격렬한 물결은 대안적 지향성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는 신사회운동의 직접적인 등장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 신사회운동은 논자에 따라서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혹은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사회운동에는 실제로도 자본주의적 물질문명에 대항하는 후기 물질주의, 복지국가의 확충과 경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 후기 산업사회 갈등과 저항을 강조

하는 후기산업주의, 권위주의체제와 관료화의 경향을 비판하며 공동체적 연대를 추구하려는 자유해방주의들의 이념적 지향성들이 각각 혼재되어 있다.

19세기 이후, 제국주의적 경쟁과 복지국가의 신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증대된 국가의 역할로 인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역은 현저히 축소되었으며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항력 또한 극히 약화되었다. 신사회운동은 시민사회라는 비판과 저항의 활동거점과 세력영역이 필요하였고, 시민사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이념적·실천적 세력과 논리가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시민사회 없는 신사회운동이 형식 없는 내용이라면, 신사회운동 없는 시민사회는 내용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 하나의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역사적 실체로서 시민과 시민사회는 온갖 국가주의적 억압과 착취, 간섭과 규제, 감시와 위협, 유인과 설득에 맞서서 개인적·집합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방어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신사회 운동 또한 반불평등 자본주의, 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를 극복하려는 좌파 자유해방주의의 기치아래 반 경제발전지상주의와 반 인간운동, 여성해방주의운동, 평화사상운동, 소수인권 보호주의운동 등의 형태로 새로운 시민사회를 위한 각종 투쟁과 창조의 세력거점을 시민사회 내에 구축하여, 시민사회의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위한 장기적인 진지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처럼 신사회운동은 근대의 위기가 빚어내는 폭력적 갈등상황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고 그 대안을 추구해나가는 대안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사회운동의 목표는 시민사회의 동원이지, 권력의 장악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문화적이고, 시민사회 내부에 위치하면서 시민 스스로 대안적 생활양식을 추구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초래하고자 한다. 따라서 신사회운동은 노동운동과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표 II-1>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비교

	노동운동	신사회운동
위치	정치체계 내부	시민사회
목표	정치적 통합 경제적 권리	가치 및 생활양식의 변화 시민사회방어
조직	형식적 · 위계적	네트워크
행동수단	정치적 동원	직접행동 · 문화혁신

무페는 신사회운동을 새로운 민주주의 투쟁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순수하게 방어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신사회운동은 자신의 총체적 부정성 때문에 실제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관념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토대와 상부구조 사이의 명확한 단절을 부정하는 무페는 노동자의 계급운동과 신사회운동을 명확히 대치시키는 것을 반박하고, 노동자들의 투쟁과 마찬가지로 신사회운동의 투쟁들도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적이거나, 심지어는 진보적일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sup>27</sup>

정치적으로 신사회운동은 여러가지면에서 기존의 정당정치나 압력단체 정치와 구별된다. 왜냐하면 신사회운동의 이해관심은 국제적이고, 행동은 국경을 초월하며, 현재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경제관계와 사회관계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일련의 요구를 제시하며, 국가주의적인 정당과 압력단체의 기존 조직에 도전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한다. 이처럼 신사회운동은 의회를 넘어서는 직접행동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참여 정치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신사회운동의 행동은 급진민주주의의 내적구조와 과정을 제안하면서 국가와 정당의 위계적이고 관료적인 구조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나아가 신사회운동은 평등주의 정치의 이념 아래서 차별과 지배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분리

<sup>27</sup> Mouffe, C., (Hg), Gramsci and Marxist Theory (London, 1979).



를 극복하여 초계급적·비계급적 정치를 추구한다.<sup>28</sup>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의 유기적 기초에 대한 근대적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적·수세적인 새로운 형태의 저항세력을 신사회운동으로 파악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모순적 합리화와 선택적 제도화로 인하여 관료적 행정과 화폐경제가 과도하게, 도구주의적으로 팽창한 까닭에 시민 사회의 자율성과 연대성은 파괴되거나 왜곡되었다. 따라서 하버마스는 신사회운동은 이제까지 억압·지체되어왔던 근대성의 정체성을 규범화·제도화시킴으로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sup>29</sup>

신사회운동은 근대적 이성만능주의가 빚어낸 현대사회의 위기를 시민 사회 자체동력에 의거하여 시민들이 해소함으로써 사회평화를 유지·발전시키려는 사회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즉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현상, 예컨대 구조적 실업, 빈부격차 확대, 환경문제, 성문제, 개발도상국의 저발전문제, 반전 비핵화문제 등의 제 현상이 빚어내는 사회적 갈등구조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하여 풀어내려고 하는 새로운 생활문화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사회운동은 근대의 부정적 결과와 새로운 위협의 해소를 지향하고 평화적 공존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 의미에서의 평화운동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sup>28</sup> Offe, K., "Politische Legitimation durch Mehrheitsentscheidung?" In: Guggenberger, Bernd/Offe, Claus (1984), pp. 150-183.

<sup>29</sup> Habermas, J.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Frankfurt/M. 1985).



# III

## 동북아의 평화문화



## 1. 한국의 평화인식

### 가. 평화에 대한 관심

전통적으로 ‘백의민족’으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인식되어온 한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국가를 침범한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체제였다. 지정확적인 이유에서 끊임없이 외침을 받아오면서도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향해왔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를 제외하고, 왕조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단일국가체제가 지속되어 온 것도 전쟁보다는 평화에 익숙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쟁은 민족을 지키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체제 내에서는 일상적인 문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 이후 분단과 전쟁을 경험하면서 도리어 한국사회에서는 평화라는 개념이 생소한 것이 되었다. 일제의 억압적 식민지배에 대항한 반제 투쟁은 독립의 쟁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단을 거쳐 한국전쟁을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에서는 갈등이 일상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쟁이후에도 체제경쟁을 지속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씻기는커녕 남북한은 갈등을 더욱 키워나갔고, 이 과정에서 증오와 적대감이 기본적인 정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남북한간의 갈등은 남북한 체제 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일종의 분단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남북한은 각각 강력한 권위주의체제를 구축하였고 물리적 억압을 바탕으로 유지된 남북한의 권력구조는 체제 내에서도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였다. 항일빨치산 전통을 핵심적 가치로 생각하는 북한이나 군사문화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된 남한에서 평화라는 개념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평화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는 차치하

---

<sup>30</sup> 한국사람들의 인사말이 안녕(安寧)인 것도 역사적으로 안전과 생존이 중요한 문제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고초가 많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shalom(평화)을 인사말로 쓰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이삼열, “한국 사회와 평화운동,” 『기독교 사상』 (1985. 8), p. 123.

고 평화의 개념에 대한 관심도 희미해졌다고 볼 수 있다.<sup>31</sup>

한국 사회에서 평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된 것은 민주화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전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인권 등 그 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가치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평화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대결보다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남북관계가 정착됨에 따라 평화공존이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평화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확산되면서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평화운동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점증하는 평화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평화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나 성찰은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평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서구적 평화-성서, 그리스, 로마의 평화 개념에 기초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양적, 한국적 평화개념은 구조적 폭력, 심리적 폭력을 함축하고 있지 못하고 개인의 가족 차원의 평화에만 국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사실 중요한 기존의 특정 평화개념이나 평화운동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역사적으로 경험한 평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지향하는 보편적 평화와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평화개념

역사적으로 한국인은 평화에 대한 지향성을 견지해왔다. 건국신화의 곰과 호랑이의 경우부터 시작하여 각종 설화에서도 전쟁을 상징하는 것은 거의 없는 반면 평화와 화해를 강조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고대국가와 더불어 유입된 불교와 유교와 같은 종교 그리고

---

<sup>31</sup> 위의 글, p. 122.

문자를 중시하는 학문적 성향도 평화 지향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내전을 치루고 설립한 신라나 고려의 경우에는 초기에 군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점차 문신들이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고, 고려시대 무신정권을 제외하고는 군부는 전통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집단이었다는 것도 평화지향적인 분위기를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에 와서 보다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조선이 정통으로 확립한 성리학은 유교 가운데서도 공자와 맹자를 핵심으로 하는 주자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공자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조선사회에서 핵심적인 사표로 생각한 맹자는 ‘성선설(性善說)’이 대변하듯이 인(人)을 강조하는 유학 가운데서도 특히 화해를 강조하는 학자였다. 맹자적 세계관을 체제의 기본 관점으로 채택하였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평화지향적인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유교는 과거제를 바탕으로 하는 관료충원 시스템과 연결되어 학문을 중시하고 문신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은 외침을 경험하기는 하였지만 성리학이 지배이념으로 공고화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의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하였다. 양반제를 토대로 한 중앙집중적인 권력 제도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다른 국가들이 경험한 분권적 봉건제는 존재하지 않았고, 내적 갈등도 무력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평화개념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가운데 한국적 평화 개념의 탐구에는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첫째, ‘내용적 보편주의’의 입장이다. 이것은 차이에 대한 섬세한 인정 대신에 우리의 전통을 형식적으로 절대화함으로써 세계적인 보편타당성을 가진 거시적 이론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절충적 보편주의’의 입장이다. 이것은 동양과 서양의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 해석학적 지평융합을 시도하는 것이다.<sup>32</sup> 셋

째, ‘실천적 보편주의’의 입장이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편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과 지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평화 개념은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경험이 전수된다는 차원에서 한국 민족의 다양한 민족 개념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현재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교의 평화관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교는 조선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였을 뿐만 아니라 유교적 전통은 오늘날에서도 일상적인 수준까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한국의 전통적인 평화개념의 핵심으로 유교의 평화사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교는 기본적으로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철학이다. 유교사상에서 평화는 화평(和平)을 말한다. 화평이란 천지만물과 더불어 일체가 되는 것이다. 화평의 이론적 근거는 유교의 자연관이다. 자연계의 모든 사물과 사건들은 상호작용하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사이에 일시적인 불균형 상태가 야기될 수 있지만, 결국 평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상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평화로운 사회는 만물을 기원하게 하고 생성하게 하는 근원으로서 평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천(天)의 형상 질서를 모방한 것이다.

유교의 핵심은 「대학(大學)」의 평천하(平天下), 「중용(中庸)」의 중화(中和), 그리고 「예기(禮記)」의 대동(大同)이다. 평천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의무가 평화세계의 실현임을 의미한다. 중화는 협정이나 협약과 같은 깨지기 쉬운 외형적 평화가 아니라 내면적인 진정한 평화를 말한다. 진정한 평화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그리고 세계, 자연과 원융회통하여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대동사상은 분열을 초래하는 사적 자아의 소멸이라는 근본정신을 지향한다. 평화가 실현된 평천하, 대

---

<sup>32</sup> 김국현, “한국유교의 평화사상과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43, (2002. 2), p. 191.



동, 중화는 궁극적으로 인간본성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인의 도덕성에 근거한 덕치(德治)를 근본으로 한다.<sup>33</sup>

공자는 대학에서 인(仁)을 평화의 출발점으로 본다. 인 사상은 맹자의 인정(仁政),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이념으로 계승되었고, 특히 송명대에는 만물일체설로 확대되어 인간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만물간에도 일체를 이루는 적극적 평화사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평화사상은 선과 악, 인간과 신, 고통과 괴로움 같은 양극적 가치들 사이의 갈등 대립, 투쟁보다 화해와 조화를 추구하는 무속의 평화사상을 가지고 있다.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 신, 자연간의 관계도 원칙적으로 공존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무속의 평화사상이 가진 사고방식은 본질적으로 음양대립의 변증법이 아니라 음양조화의 합일사상이다.<sup>34</sup> 이러한 무속의 평화사상적 전통은 후에 한국이 유교사상을 수용하고 그 평화사상을 삶의 원리로 채택하고 발전시킨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인과 국가의 평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온 것은 유교적 평화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평화사상의 특성은 무속적 평화정신 위에서 중국유교의 평화사상 전통을 수용하고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한국의 평화사상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평화사상에서 중국유학사상과 이론적으로 다른 새로운 이론이나 해석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접근방식이 매우 특징적이다. 특히, 한국사상은 성리학의 발달과 함께 인성에 대한 탐구에 중국 이상으로 몰두함으로써 평화의 실현 내지 정치학적 이론 수립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인애, 사단, 도심, 인성 등을 통한 본성 탐구에 대한 한국 사상가들의 열정적인 탐구는 원천적으로 본성이라는 신성의 본유 및 발견에 대한 신뢰에 의해 평화를 이루려는 의지가 강했음을 뜻한다. 한국

<sup>33</sup> 정인재, “국육의 평화사상,” 서강대 철학연구소 편, 『평화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p. 247.

<sup>34</sup> 김인회, 『한국인의 가치관: 무속과 교육철학』 (서울: 문음사, 1981), pp. 244-245.

의 유교사상가들에게 오류는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믿음을 주었다. 그들은 오류(五倫)적 윤리체계를 사회에 확립함으로써 평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오류는 정치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미의 평화실현의 수단이었다.<sup>35</sup>

둘째, 한국에서는 유교의 평화사상이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되었다. 한국의 전통적 국가와 민족이 침략에 저항하면서도 침략을 하지 않은 역사가<sup>36</sup> 이를 증명한다.

셋째, 한국사상의 평화구현의 의지는 매우 지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경제적 방면에 치중되었다. 다산의 공복의식이나 성리학적 평화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중국유학의 인정설을 애민으로 심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통사회의 평화의식은 끊임없이 이어온 외침으로 인하여 생겨난 피해의식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종의 도피적 사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현실을 타파하고 평화를 구현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전쟁을 경험함에 따라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전쟁의 부재 상태나 폭력이 생산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소극적 평화가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평화 개념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sup>37</sup>

유교와 무속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평화의 개념이 근대의 평화개념과 차원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sup>38</sup> 근대 서구의 평화개념은 국제관계를

<sup>35</sup> 윤사순, “한국유학의 평화사상,” 이호재(편), 『한반도평화론』 (서울: 법문사, 1989), p. 31.

<sup>36</sup> 한국역사에서 전쟁의 연 회수가 200회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병로, “한국문학에서의 전쟁과 평화의식,” 『대동아연구』 19, (1984. 1), p. 53.

<sup>37</sup> 이에 반해 적극적 평화는 평화를 구조적 차원에서 정의하며, 평화가 파괴되지 않을 즉 전쟁과 폭력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들이 제거된 사회구조의 확립을 의미한다. J. Galtung, “On Peace Education,” in Christoph Wulf, *Handbook of Peace Education* (Frankfurt: IPRA, 1974) 참조.

<sup>38</sup> 김석근, “한국전통사상의 평화관념: 사대와 중화를 중심으로,” 하영선 편, 『21세기의 평화학』 (서울: 풀빛, 2001), pp. 73-107 참조.

바탕으로 한 것인데 전통사회에서 이에 부합하는 것은 사대(事大)와 교린(交隣)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개의 개념은 실질과 형식 양 측면에서 수직적 위계가 작동했던 유교 문화권의 국제 질서를 규율하는 규칙과 규범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관념이 존재하였다면, 그것은 적극적인 평화의 실현태로서의 대등과 소극적 평화의 실현을 보장하는 사대였다고 볼 수 있다.<sup>39</sup>

개화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평화론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인 개화파인 유길준은 1907년 「평화광복책(平和光復策)」을 순종에게 올리면서 평화국 복지책을 국시로 삼아 부강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가 생각한 평화의 개념은 다시 일본의 주류가 주장하던 평화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문명국 일본을 이용하여 일본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다.<sup>40</sup> 반면에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을 주장하면서 동양평화의 의미는 모두 자주 독립해 나가면서 각국이 힘을 모아서 협력하면 어떤 다른 나라와도 맞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등박문을 죽인 것도 동양의 평화를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안중근의 평화론은 한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sup>41</sup> 신채호의 경우도 일본식 동양평화론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

안중근과 신채호 등의 평화론은 식민지 시대의 독립운동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 독립선언서에는 “우리가 꾀하는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존영을 획수하게 하는 동시에 아울러 일본인으로 하여금 사로에서 구출하여 동아의 지지로서의 책무를 온전하게 함이며 중화인으로 하여금 몽매에도 면치 못하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 함이요, 또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동양의 중요한 일부

<sup>39</sup> 구갑우, “평화담론 재론: 한반도적 맥락,” 김성주·차문석 편, 『근대극복을 꿈꾸는 동아시아의 도전』 (서울: 청어람 미디어, 2004), p. 342.

<sup>40</sup> 류재근, “근대 한국 평화사상연구,” 『한일관계사 연구』 15 (2001. 10), pp. 160-162.

<sup>41</sup> 위의 글, pp. 164-166.

가 되고 있으니 조선의 독립이 필요한 계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개화기 이후 한국의 평화사상은 일본의 침략이라는 점에서 독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개화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독립이 곧 평화라고 생각하였으며, 동시에 개화기 사상가들은 전통적인 사상에서 평화의 뿌리를 찾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신채호의 경우 민족을 포함한 민족의 얼을 중시한 반면, 최익현과 박은식 등은 유교에서 평화의 뿌리를 찾았다. 특히 박은식은 논어의 대동과 중화를 평화의 본원이고 평화의 극공이라고 보고 있다.<sup>42</sup>

## 다. 분단과 냉전문화의 형성

한반도의 굴절된 근대사와 한반도의 분단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분단은 한반도의 남과 북에 상이한 체제를 건설하는 태생적 한계이자, 남과 북을 전쟁이라는 잠재적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게 만들어왔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근대화는 분단과 냉전적 대립이라는 대결구조하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단과 냉전적 대결구조는 근대화의 방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냉전문화라는 기형성을 탄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립과 갈등이 남북한 사회에 확산되었으며, 다양성과 관용의 문화는 설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전체의 강조, 국가주의의 부각은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평화문화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적대적 공존관계는 남북한 사회내부의 전반적인 분야에 영향을 미쳤으며, 남북한의 근대화방식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분단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시도된 남북한의 근대화는 그 자체로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발전과정은 분단과 냉전체제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그리고 전쟁의 잠

---

<sup>42</sup> 위의 글, p. 187.

재적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제약성은 남북한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해 왔으며, 정상적인 시민사회의 형성도 저해했다. 장기적인 분단체제하의 근대화시도의 결과, 북한은 체제로서의 전망을 상실했으며, 남한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구축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남북한은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될 수 없다. 그러나 남한사회의 발전도 분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에서 ‘성공’에 대한 성찰적 관점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분단은 남한시민사회의 정치적 자율성을 약화시켰고, 권위주의 정권은 반공과 발전이라는 두 요소를 핵심적 가치로 설정했다. 장기간 남한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요구와 다원주의의 추구는 억압되어 왔다. 남한체제의 발전 과정과 냉전문화의 형성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중층성을 지니며,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직도 재생산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분단이후 남과 북은 상호 대립적인 대치상황에서 이질적인 체제와 제도를 형성해왔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이질화는 남과 북의 사회구성원들이 상이한 사회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통일은 정치, 경제 등 제도적인 차원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분단체제상에서 나타난 이질화의 영향은 제도적인 차원의 통합만으로 해소되지 않으며, 장기간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사회성원들이 상이한 생활세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사회화로는 해소되기 어려운 신념체계와 행동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은 냉전체제의 최전선에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을 의미했다. 따라서 남북한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체제의 이념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놓였으며, 남북한의 근대화 역시 이 과정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치체계를 극단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켜 왔다. 상대방은 극단적으로 적대시 되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가치에 대한 그 어떠한 이해나 동조도 이적행위와 동일시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남북한의 근대화는 분단과 극단적 대립으로 인해 기형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북한은 자신들의

전체주의적 속성을 평등주의로 포장해 왔고, 남한에서는 발전논리 속에서 자본은 자유를 만끽해왔다. 그 결과로 우리는 체제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는 북한과, 반공과 성장지상주의속에서 상실했던 가치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남한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분단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형성했으며, 이는 다시 남북한 사회의 내부에 중요한 내적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는 냉전문화로 고착되어 왔다. 특히 이 과정은 한국사회의 급속한 산업화과정과 결부되어 복합적인 측면을 지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단체제의 등장과 한반도 냉전구조의 형성은 동북아의 외교안보적 질서재편과정에서 탄생한 것이지만, 동시에 남북한의 내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분단은 식민지배체제에서 벗어난 신생국가로서 새로운 체제를 형성해야 하는 남북한에 공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냉전구조는 다양한 차원에서 남북한의 내부구조에서 재생산 되었으며, 냉전문화는 냉전구조의 내적인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평화정착은 세계적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의 역내 질서재편과 연관된 국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조는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북한 및 사회주의권과의 대립구조로서 ‘혈맹’으로서의 한미동맹체제를 탄생시켰으며, 이는 남한사회내의 친미주의와 강력한 반공문화의 형성을 의미했다. 이는 동시에 반북주의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세계적인 차원의 냉전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한미동맹관계의 결속력은 강화되었고, 반공문화 역시 강력한 통제기제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북한에 대한 극단적 적개심의 형성은 친구로서 ‘미국’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동시에 ‘적’으로서 북한의 의미를 강조하는 강화기제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냉전체제의 강화에 따라서 ‘친미, 반공’이라는 남한사회의 핵심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

반공주의를 핵심축으로 하는 냉전문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남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재생산 되어왔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 탄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권위주의적 정권은 ‘정당성의 결여’라는 스스로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사회의 ‘압축적 성장이라는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친미, 반공’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냉전문화를 효율적인 통제기제로 활용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친미, 반공’에 대한 도전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남한사회의 금기영역이었다. 이는 종종 정치적 반대세력 및 저항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극히 최근까지도 대중적 지지를 받는 야당지도자에 대한 이념적 성향의 문제를 제기하는 소위 색깔시비의 제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에서 야당에 대해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남한사회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구조가 형성시 되었다. 최근까지도 한국의 정당구조는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들이 이념적으로는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상태에서 여야구조를 형성했다. 따라서 정당간의 차이는 정책적 차이이기보다는 주로 상징적인 정치적 지도자와 지역적 편향성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반공주의는 정권의 취약한 정당성을 보충해줄 효과적인 기제로서 다양한 차원에서 활용되었다. 반공주의는 종종 정치적 반대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도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적 요구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기제로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노동운동과 같은 시장에서의 이익추구 행위나 민중문화 같은 문화적 다원성의 추구는 체제저항적인 이념행위로 취급되는 경향을 보였다. 검찰과 경찰, 안기부, 보안사 등은 반공주의를 위반하는 행위들의 단속과 처벌을 위해 상당한 자원과 인력을 할당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남한의 적화를 공언하고 있는 북한의 존재에 의해 남한사회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이와 같은 점들은 종종 정권안보의 수호를 위해 이용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대립과 이에 대한 외교안보적 상황의 전개는 한미동맹관계를 강화시켜 왔으며, 이는 친미주의적 정서 및 문화를 남

한사회에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세계적인 냉전체제와 한국전쟁을 거친 남북한간의 극단적 대립은 친미정서와 문화에 대한 거부감 및 문제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한미동맹관계와 친미주의적 정서에 반하는 행위들은 금기시 되었으며, 친북주의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친미주의의 형성과정은 동시에 반미주의를 형성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정당성의 결여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권위주의 정부가 한미동맹관계와 친미주의를 정권안보에 활용함으로써 반미주의는 남한의 민주화운동세력들에 있어서 주요한 운동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과정에 있어 미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신군부와 미국은 민주화운동 체세력의 동일한 비판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부체제하에서 ‘반미주의’적 인식은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은밀한 저항문화의 형태로 형성, 발전되는 경로를 거쳤다. 물론 이 과정에서 친미주의와 반미주의를 지향하는 세력간의 평화적 대화와 인식의 교류는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은 반미주의가 극적이고 저항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요인이었다. 80년대 초의 미 문화원방화사건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광주민중항쟁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동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친구로서의 미국’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의 요구였다.

친미와 반공주의는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한사회의 민주화 및 시민사회의 성장, 그리고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의 구사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개선과정은 ‘적으로서의 북한’이라는 단순한 이미지에 복합적인 의미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해체이후 동서진영간의 대립은 의미를 상실했으며, 국제관계는 이념이 아니라 실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한반도 역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따라서 한미관계 역시 이념적 동질성에 기반한 과거의 동맹관계에서부터 새로운 변화



를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남북관계의 패러다임변화라는 상황속에서 부시정부의 대북압박정책 및 여중생사망사건 등 일련의 과정은 남한사회의 대미인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친구로서의 미국’과 ‘적으로서의 북한’이라는 도식에 근본적 변화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sup>43</sup> 따라서 남한에서는 미국에 비해 북한정권의 위협성을 낮게 보고 있는 반면,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반감은 높아지고 있다.<sup>44</sup>

기아상황에까지 다다른 북한의 위기구조심화는 북한이 더 이상 체제경쟁대상이 아니며, 지원의 대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체제경쟁이 의미를 상실한 상황에서 대북정책 역시 대립을 지양하고 남북간의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게 되었으며,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추진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 당연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내외의 새로운 변화는 한반도 냉전구조와 냉전문화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냉전구조의 해체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국사회는 패러다임전환을 해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변화의 시도는 구질서의 유제들과

<sup>43</sup> 남북관계의 성격변화와 더불어 대미인식도 빠른 속도로 변화했다. 1993년 한국 갤럽조사의 경우 ‘향후 한국의 안보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나라’에 대한 응답은 북한(44%), 일본(15%), 중국(4%)순이었으며, 미국은 1%에 그쳤다. 이는 한국국민들이 미국을 확고한 동맹국으로 인식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2003년 9월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 중에 누가 더 우리나라의 평화에 위협적인가’란 질문에 김정일 위원장(42%)과 부시 대통령(38%)이란 응답이 비슷한 나왔다. 2004년 1월 리서치앤리서치의 전화조사의 경우도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어디인가’란 질문에 미국(39%)이란 응답이 북한(33%)보다 더 많게 나왔으며, 이는 한국국민들의 대미 신뢰감 약화추이가 지속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04년 1월 12일.

<sup>44</sup>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과 미국 등 20개국을 대상으로 한 2003년 조사에서 북한정권이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위험한 대상’이란 응답이 호주(79%)에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미국(77%), 독일(77%), 영국(71%), 캐나다(70%) 등의 순이었고, 한국은 69%로 여섯번째에 머물렀다. 반면 남한사회의 한국인 3명 중 2명(76%)은 ‘미국이 대외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민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도 반대가 71%에 달했다. 평화 유지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도 한국인의 절반 이상(55%)이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대의를 나타냈다. 『조선일보』, 2003년 8월 31일.

충돌하기 마련이며, 이는 이미 한국사회의 보혁갈등과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냉전문화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한국사회를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존구조가 아닌 배타적 구조로 양극화시켰다는 점이다. 냉전문화는 대립구조에서 기원했다는 점에서 탄생부터 다원성과 포용성의 요소를 배제한 획일주의에 친화력을 보여 왔다. 한국사회의 다양한 갈등구조는 이와 같은 점에서 냉전문화와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냉전기간을 통해 한국 사회내에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배제와 거부가 사회의 지배적 특성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평화문화의 형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최근 제기된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한미관계에 대한 시각차, 이라크파병에 대한 여론의 양극화는 보혁갈등의 현주소이며, 상당부분 냉전문화의 구체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sup>45</sup>

일방적 친미와 반미주의는 한국의 현대사 및 분단사의 과정이자 결과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양자 모두 실용주의적 인식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양자 모두 북한과 미국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친미주의적 성향은 한미 동맹이라는 현실적 조건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남한에게 생존을 위한 ‘강요된 선택’이었으며, 반미주의 역시 친미적 독재정권에 대한 ‘우회적 저항의 담론’이었다는 점에서 분단체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친미주의와 반미주의는 모두 일방적이라는 점에서 배타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과정에서 현실적합성을 잃어가고 있다. 필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친미주의와 반미주의는 모두 냉전체제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견해와 차이가 공존하는 복합적 공간이다. 따라서

<sup>45</sup> 국가보안법폐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이전인 2003년 8월 MBC 조사의 경우 이미 응답자의 79.1%가 보혁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 대부분의 한국인이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03년 8월 8일.

차이가 인정되는 ‘관용’은 시민사회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형성과 이에 따른 냉전문화는 차이의 인정과 공존의 논리가 한국사회에 일상화되는데 있어 근본적 한계로 작용했으며, 그 결과 한국사회는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냉전문화의 유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목도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배타적 보혁갈등구조는 이 같은 점에서 분단과 냉전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냉전문화의 상존은 한국사회의 평화문화인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 라. 한국 평화문화의 특성

한국인의 평화의식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민족이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인가라는 물음에 한국인들은 국제정치에 대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즉 현대 한국인들은 우리 민족이 평화 애호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소민족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외침을 당했다고 인식하고 있다.<sup>46</sup>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은 과거 역사보다 식민지 시대 이래의 근대사의 경험이 일반 사람들에게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47</sup> 그러나 무엇보다 현대 한국인의 평화의식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한국전쟁의 경험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여온 분단 구조라고 할 수 있다.<sup>48</sup>

전쟁의 참혹한 경험을 겪으면 일반적으로 평화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나 이후 들어선 반공우선의 군사정권은 전쟁을 지속적으로 권력유지를 위하

<sup>46</sup> 이호재 외, 『한국인의 평화의식과 통일관』 (서울: 법문사, 1989), p. 25.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식민사관의 문제 그리고 패배주의의 소산으로 한국민족은 평화를 지키고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다는 주장도 있다. 김정태, “한국의 민족성과 평화의 성향,” 『경향잡지』 (1975. 1) p. 36.

<sup>47</sup> 이삼열, “한국 사회와 평화운동,” p. 123.

<sup>48</sup> 전쟁의 문화적 결과에 대해서는 유팔무, “한국전쟁과 문화변동,” 『아시아문화』 16 (2000, 1) 참조.

여 이용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박정희의 쿠데타 이후 한국에서 군대가 단순한 억압적 국가기구를 넘어서 본격적인 사회화 기구로 구실하게 되었고, 쿠데타세력은 자신들을 근대화의 주체로 내세우면서 포괄적인 근대화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군사주의는 근대화 이데올로기와 통합되었다. 전쟁의 경험에 비추어 근대화는 반드시 군사주의의 강화를 수반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군사주의는 그 자체로 근대화의 핵심적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군대는 단순히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확립되었다. 그러나 군사주의의 이러한 변화는 전쟁이라는 극한상황에 대비하여 마련된 군대의 특수한 질서와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또한 군사주의와 근대화 이데올로기의 결합은 한국군의 질서와 문화가 식민지 지배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극도의 억압성과 폭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49</sup>

따라서 군부가 주도하였던 권위주의 체제에서 평화는 일상적인 차원에서나 사상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조건과 더불어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도 한국사회의 반평화적 분위기에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래 진행된 자본주의 산업화는 권위주의 정부의 주도하에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 간에 무한경쟁, 착취, 기존 가족 공동체의 해체 등이 동반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라는 개념은 자리 잡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평화를 주장하고 평화운동을 지향하는 집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한국 사회의 주류적 흐름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sup>50</sup>

<sup>49</sup> 홍성태, “50년 전쟁체제의 사회적 결과: 비정상성의 정상화,” 『남북간 대립 사회체제의 동요와 새로운 갈등구조의 이해』 (비판사회학대회 발표 논문, 2000. 9. 23) 참조.

<sup>50</sup> 이 시기의 대표적인 평화사상가로서 함석헌을 들 수 있다. 기독교의 퀘이커교도인 함석헌은 간디의 비폭력 사상을 받아 들여 비폭력 평화운동을 주장하였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민주화의 진전이다. 강력한 물리력을 동반하였던 권위주의체제는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을 고비로 일단락되고, 민주주의가 복원되었다. 이후 제도 내에서 경쟁이 지배하는 정치공간이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정치로 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점차 군부와 대자본가들의 승인 또는 지지보다는 인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권력 장악의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중반이후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의 물결이 한국에도 도래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sup>51</sup> 제도적인 수준에서이지만 민주주의가 복원되었다는 것은 물리적 억압과 강제가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에는 잊혀져있었던 평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sup>52</sup>

둘째, 민주화와 더불어 진행된 남북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7·7조치를 전환점으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수립된 이후 북한과의 화해협력의 추구가 공식적인 한국의 통일정책이 되었고, 이후 점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방안은 평화적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전쟁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반공을 ‘국시’의 수준으로 절대시하였던 과거와 달리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점차 확산되었다.<sup>53</sup> 이러한 환경변화는 자연스럽게 평화에

---

다. ‘씨오’로 대변되는 그의 사상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이 분명하고, 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영호, “함석헌의 비폭력 평화 사상과 그 실천 전략,” <<http://blog.naver.com/uuuau.do?Redirect=Log&logNo=40006949592>>; 함석헌기념사업회, 『민족의 큰 사상가 함석헌 선생』 (서울: 한길사, 2001) 참조.

<sup>51</sup> 임혁백,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평화정착,” 『평화연구』 2호 (1992), p. 37.

<sup>52</sup> 정치제도와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성용, “평화와 정치체제에 관한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31권 2호 (1997. 1) 참조.

대한 관심으로 유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54</sup> 이후 북한에 대한 유화책을 강조하였던 김대중정부와 이를 계승한 노무현정부의 출현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진전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평화적 공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의 핵 위기와 2002년 다시 불거진 북한의 핵문제는 역으로 평화의 절실함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면적인 파괴와 오랜 기간에 걸친 후유증을 의미하는 핵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더불어 강화되었고, 이 과정 자체가 전 사회적으로 평화의 중요함을 일깨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이 문제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전쟁의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대외 환경도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두 번에 걸친 이라크 전쟁을 포함하여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크고 작은 전쟁을 목격한 것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배가시켰다고 할 수 있다. 미소를 축으로 했던 냉전 종식 이후 발칸반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지속되었다. 또한 국가사회주의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로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데 더 이상 장애요인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sup>55</sup> 한편 미국중심의 국제 질서에 저항하는 테러리스트의 저항도 완강해졌고 이를 상징하는 것이 911테러라고 할 수 있다. 일상화되는 전쟁과 테러의 공포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경험한 것은 일반인들에게 평화의 절실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

---

<sup>53</sup> 북한에 대한 인식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운동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sup>54</sup> 실질적으로 200만 명에 가까운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역으로 구조적으로 평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곳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창수, “한국의 평화운동의 이념과 과제,” 『환경과 생명』 7, (1995, 가을) p. 116. 그러나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였던 권위주의 체제아래에서 평화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문제시되었다.

<sup>55</sup> 2차 이라크 전쟁에서 UN의 결의 등을 무시한 것이 하나의 예가 된다.

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새로운 사회운동의 대두이다. 1980년대까지 사회운동의 주축은 권위주의체제의 종식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87년을 고비로 제도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시기의 민주화 중심의 사회운동은 점차 다면화되었다. 시민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이루어진 새로운 사회운동은 환경, 소비자, 여성, 생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sup>56</sup> 새로운 사회운동은 이미 1970년대 서구사회에서 활성화된 것으로 시민사회의 성숙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운동 가운데 하나가 평화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학과 교육학 그리고 여성운동과 결합하여 진행된 평화운동은 평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또 다른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분단이후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한국사회에서 평화에 대한 논의는 굴곡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과 분단구조의 심화는 일반사람들에게 평화를 낫선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 시민사회의 성숙, 남북관계의 변화, 국제환경의 급변 등은 중요하지만 잊혀져 있었던 평화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새롭게 형성된 평화에 대한 관심은 다음의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평화 개념이 철학과 사상적인 차원에서 비롯되었다면 최근 한국의 평화개념은 국가간의 평화라는 국제정치학적 차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개화기와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것으로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간의 냉전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핵문제와 강경한 미국정권의 등장으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평화 혹은 전쟁의 회피가 현재 평화 인식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평화에 대한 관심이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평화 그 자체로서가

---

<sup>56</sup>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임희섭 외,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서울: 나남, 1998) 참조.

아니라 교육의 차원에서 신학의 차원에서 그리고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가 다양한 분야와 결합된다는 것은 평화가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통일교육의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평화교육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념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의 차원으로 논의가 발전하고 있다.<sup>57</sup>

셋째,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평화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이후 노동자의 힘이 증대됨에 따라 노사갈등이 심화되면서 산업현장의 평화가 중요한 의제로 부각된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sup>58</sup> 또한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세대간 갈등도 새로운 차원의 평화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핵문제, 이라크 파병과 테러위협이 증대 등 최근의 상황변화는 평화의 문제를 보다 절박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59</sup>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미국의 강경한 정책은 끊임없이 전쟁 발발 가능성을 이야기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라크 파병은 전쟁이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다. 더욱이 이라크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파병을 하고 있는 한국이 테러의 주된 표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사실도 사회적으로 평화문제를 절실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

<sup>57</sup> 강순원, 『평화·인권·교육』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0) 참조.

<sup>58</sup> 임혁백,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평화정책” 참조.

<sup>59</sup> 이에 대해서는 문광훈, “전쟁과 평화 그리고 세계시민적 질서,” 『아세아 연구』 46권 3호 (2003), pp. 7-15 참조.



## 마. 한국의 평화운동과 평화의식

### (1) 한국의 평화운동

한국사회에서 평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평화운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평화운동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반전운동, 반핵운동, 환경운동이 평화운동의 핵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운동의 이념이나 주체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의 평화운동은 광범위한 대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사회운동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평화운동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60</sup> 이러한 조건은 평화운동을 다른 사회보다 더욱 절실한 것으로 만들 수 있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부 이래 안보를 절대시하였던 경험, 정치적 민주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사회운동의 흐름 등으로 유럽과 같은 정도의 대중성은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61</sup>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의 평화운동은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 생존권과 인권 차원의 접근이다. 한국여성연합회 등이 중심이 되어 진행해온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한인 피폭자 문제, 태평양 전쟁유족회

<sup>60</sup> 이러한 까닭에 평화운동을 통일운동과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다. 김창수, 『멋진 통일 신나는 평화운동』 (서울: 책세상문고우리세대, 2000) 참조. 반면 평화운동과 평화통일을 분리하여 생각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차명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회운동 활성화의 가능성: 유럽과 한국의 평화운동 연구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4 (1994), p. 216. 평화통일운동은 통일을 평화적으로 수행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평화운동은 사회의 다양한 차원과 결합하기 때문에 외연이 더 넓다는 것이다.

<sup>61</sup> 한국의 순수 평화운동단체는 1994년 6월에 만들어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체는 1988년 만들어진 ‘평화연구소’, ‘반핵평화회의’, 그리고 ‘공해추방연구소’ 산하의 ‘반핵공해연구소’가 통합되어 1993년 만들어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회의’가 확대개편된 것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평화운동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평화자체 보다는 다른 분야와 결합되는 형태가 적지 않다. 차명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 유럽과 한국의 비교,” 『94년 전기사회학대회 발표 논문집』 (서울: 한국사회학회, 1994), p. 197.

등에서 전개한 태평양전쟁 희생자 문제,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신대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민족의 역사적 문제와 결합할 수 있다.

둘째, 환경적·생태적인 접근으로 미군기지 반대운동과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들 수 있다. 경기도 화성군과 매항리 사격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미군기지 반대운동이나 원자력 발전소 건립과 핵폐기장을 반대하는 운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반전·반핵·군축운동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구조와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이러한 운동들은 현재 한국평화운동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위기 삭감운동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넷째, 통일운동이다. 통일운동은 한국 평화운동의 특수한 형태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통일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평화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현재의 남북한 대치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평화라고 보는 경향도 있지만 분단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파생시킨 구조적인 요인이므로 한반도 평화운동은 통일운동을 포괄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sup>62</sup>

최근 평화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분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평화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전쟁과 분단 그리고 권위주의적 정권으로 안보논리가 평화를 압도하였다는 역사적 요인이다. 외침에 시달린 경험으로 강자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반전을 이야기하면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평화운동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초래된 불평등한 분배구조, 농촌의 폐쇄화 등 계급적 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들

---

<sup>62</sup> 김창수, “한국의 평화운동의 이념과 과제,” p. 117.

어 서구의 민중들이 반핵 평화운동을 대규모적으로 전개할 때, 제3세계의 운동가들은 불평등하고 불의한 구조를 지닌 상태를 고정시키려는 평화운동에 동조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한국의 경우도 이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sup>63</sup>

셋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유럽에서 있어왔던 징집거부 운동이 우리사회에선 찾아 볼 수 없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적 풍토도 평화운동이 활성화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육 체제도 평화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화운동은 1990년대에 비해 훨씬 활발해지고 있으며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반전과 관련된 흐름이다. 이라크 전쟁 반대 등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동시에 남북한간 평화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평화 네트워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sup>64</sup> 반미적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sup>65</sup>

둘째, 여성과 관련된 평화운동이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같이 반전 통일운동과 결합되는 경향도 있지만, 정신대대책협의회 등 여성의 특수한 영역을 중심으로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전쟁 등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여성과 아동이라는 이유와 생명의 잉태자로서 여성이 평화지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가부장적 질서에서 여성이 겪는 피해 등으로 여성이 평화운동에 적극적일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sup>66</sup>

셋째, 평화교육운동이다. 반공일변도의 과거 통일교육의 반성에서 새로운 통일교육을 모색하는 가운데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평화교육

---

<sup>63</sup> 이삼열, “한국사회와 평화운동,” p. 127.

<sup>64</sup> < <http://www.peacekorea.org>, <http://www.peacewomen.or.kr> > 참조

<sup>65</sup> 촛스키 외, 『전쟁과 평화』 (서울: 삼인, 2001) 참조.

<sup>66</sup> 여성 평화운동에 대해서는 김양희·양애경·정숙경,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 방향』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0) 참조.

이다. 통일교육을 담당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평화 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up>67</sup>

넷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평화신학 운동이다. 평화를 중시하는 기독교 이념과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결합하여 기독교계에서는 평화신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sup>68</sup> 최근 이라크 전쟁과 테러문제와 같은 국제적 문제에 조용하는 신학적 움직임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2) 한국인의 평화의식

한국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집중적인 의식조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1989년 고려대 평화연구소에서 시행한 평화의식 연구가 평화의식과 관련된 가장 적합한 조사라고 할 수 있다.<sup>69</sup>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평화는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자유가 보장된 상태”라는 응답이 33.9%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받는 상태”(23.5%),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18.9%)의 순이었다.

---

<sup>67</sup> 정유성, “평화교육: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새로운 교육이념 - 사람, 삶, (되) 살림 : 더불어 고르게 사는 삶을 터잡는 교육,” 한국교육연구소 『평화교육심포지움 발표논문집』 (1993), 참조.

<sup>68</sup> 연구홍, “한국교회의 민족통일운동과 통일문제,” 『신학연구』 41 (2000); 맹용길, “한반도의 평화신학 정착: 한반도 평화신학 정립,”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6권 (1989) 참조.

<sup>69</sup> 최상용, “한국인의 의식에 나타난 정치적 평화,” 『평화연구』 1 (1991) 참조.

<표 III-1> 평화의 개념(1989)

(단위: %)

구 분	빈 도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자유가 보장된 상태	33.9
인간과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받는 상태	23.5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	18.9
계급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고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진 상태	8.4
자연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상태	7.0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 해소된 상태	4.7
각 개인이 심리적으로 평정된 상태	3.3

위의 결과에서 평화는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라는 항목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것은 전통적 평화의식에 대한 반응으로서 단순히 폭력의 부재라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에 대한 비판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평화의식에는 전쟁의 부재상태에서도 존재하는 각종의 반평화적 구조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호남지역 사람일수록, 다시 말하면 현재제에 비판적인 사람일수록 구조폭력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해방 이후 현재까지를 평화적(27.4%)이라고 보고 있으며, 한국군의 월남파병을 세계평화를 위한 것(43.5%)으로 보는 등 대체로 보수적, 소극적, 타성적 평화의식에 머무르는 경향도 있다.<sup>70</sup> 한국 역사에서 평화로웠던 시기와 평화롭지 못했던 시기를 물어본 조사에서는 가장 평화로운 시기로 통일신라시기가 37.2%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현재(27.4%)인데 동시에 현재는 일제시대(74.3%) 다음으로 가장 평화롭지 않은 시기로 꼽고 있어(19.6%)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71</sup>

<sup>70</sup> 위의 글, pp. 210-213.

<sup>71</sup> 위의 글, p. 216.

<표 III-2> 평화개념(2003)

(단위: %)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	사람들간 갈등이 없는 상태	심리적 안정상태	사회정의, 인권이 보장되는 상태	계
전 체		191( 27.3)	129( 18.4)	105( 15.0)	275( 39.3)	700(100.0)
성별	남성	86( 24.6)	72( 20.6)	40( 11.4)	152( 43.4)	350(100.0)
	여성	105( 30.0)	57( 16.3)	65( 18.6)	123( 35.1)	350(100.0)
		$\chi^2=12.64480$		df=3	p=.005	

2003년도에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sup>72</sup> 39.3%나 되는 이들이 사회정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상태로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개념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세 번째가 사람들간에 갈등이 없는 상태(18.4%), 마지막이 심리적 안정상태(15%)였다. 즉, 일반인들은 평화를 개인 차원이나 대인 차원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이나 질문의 형태 그리고 조사주체가 다른 까닭에 엄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년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적극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1989년은 이미 6월항쟁과 민주주의 제도 획득의 기억이 남아있던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적극적 평화의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최근에도 이러한 의식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989년도 조사에서는 평화운동의 주체로 국민개개인(57.5%)을 꼽고 있고, 평화운동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으로서 정치민주화운동(44.9%)을 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개인의 주체적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평화운동의 선결과제가 국내적 평화정착이라는 점을 보여

<sup>72</sup> <<http://blog.naver.com/gcomuni.do?Redirect=Log&logNo=140007688777>>.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선과제는 1989년의 상황이 많이 고려된 듯이 보인다. 민주화를 쟁취하였지만 쿠데타 세력의 일원인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던 당시에는 여전히 민주화가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북한핵문제 등 새로운 반평화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민주화의 진전 정도는 훨씬 높아졌다는 점에서 유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1989년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 2. 북한의 평화인식: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 가. 북한의 평화관

북한은 계급적 관점에 기초해서 평화를 2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들의 억압에 의해 이뤄지는 노예적 굴종의 ‘부르쥬아 평화’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축출한 후 이룩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이다.<sup>73</sup> 또한 북한은 ‘진정한 평화’는 협상과 같이 구걸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며<sup>74</sup>, ‘미 제국주의’와의 투쟁<sup>75</sup>이 그

<sup>73</sup> “노예적 굴종이 가져다 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의 파괴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노예의 평화를 반대하여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521. “부르쥬아평화주의의 반동적 본질은 제국주의의 존재 자체가 전쟁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제국주의를 때려 부시지 않아도 지구상에서 영원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설교하는데 있다.”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163.

<sup>74</sup>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하는 방법으로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우리의 주체적 혁명력량을 강화하여 침략자들을 단매에 소멸할 수 있을 때 평화의 유지와 그 공고성은 담보된다. 평화를 진취하기 위해서는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견결한 반제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김일성, “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관하여,” p. 31.

<sup>75</sup>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반미투쟁은 평화를 위한 투쟁의 기본이다. 미제국주의는 평화의 주된 교란자이며, 평화의 가장 흉악한 원수이다.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평화를 수호할 수 없으며, 민족적 해방

기본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관에 기초하여 북한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이 지속하는 한(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조건하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노예적 굴종의 사이비 평화이며, 진정한 평화는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평화’는 주한미군 철수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통일수단으로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sup>76</sup> 평화적 방도란 남한 내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남한의 혁명정권을 흡수하거나 또는 남한의 현 체제가 연공정권 또는 용공정권으로 교체된 후, 이 정권과 합작통일을 실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평화적 방도를 적용한 전술이 바로 연방제 통일론이다. 그리고 비평화적 방도란 전쟁의 방법으로 남한을 공산화하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으로 무력통일론을 의미한다. 무력통일론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빠른 통일방법이므로 북한으로서는 가장 원하는 방법일 수 있다. 단지 월등한 대남 군사력 우위와 외국간섭의 배제 (특히 미국)라는 두 가지 조건이 쉽게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 동안 주저해왔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이 분단 이후 줄곧 주장해 온 주한미군 철수는 바로 비평화적 방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즉 무력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화관을 바탕으로 북한은 다양한 ‘평화통일안’ 또는 ‘평화공세’를 전개해 왔다.<sup>77</sup>

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 수 없다.” 『김일성 저작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p. 415.

<sup>76</sup> 『김일성 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 91-93. 북한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란 ①남한 당국이 인민들의 압력에 못 이겨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강령」을 접수·실현할 경우 ②남한에 반제·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거나 중립화될 경우 ③「남조선혁명」이 승리할 경우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은 ①미국이 북침하여 전쟁을 일으킨 경우 ②미국의 세력이 약화된 경우 ③남한의 혁명정세가 고양되고 남한 인민이 북한의 지원을 요구할 경우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264-271.

<sup>77</sup> 북한은 대남 정책 수단에 있어서는 무력·혁명·대화·(위장)평화 등의 방식을 상황에 따라 배합·사용하였다. 북한은 남한을 강제 점령하려는 무력해방,



그것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sup>78</sup> 첫째, 남북한 총선거안이다. 총선을 통한 남북통일안은 가장 오래된 북한의 평화통일안이다.<sup>79</sup> 북한은 총선을 제인할 때마다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거부를 유도하여,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한국임을 선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총선거안은 1960년 연방제안이 발표된 이후 크게 강조되고 있지 않다.

둘째, 원조 및 남북교류안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동시에 남한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식량·전기·철강 등 경제원조를 제공하겠다는 평화공세를 1956년부터 1962년까지 전개하였다.<sup>80</sup> 그리고 남북교류제안은 경제적 우위를 자신하던 195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북한의 평화공세중 하나이다.<sup>81</sup> 물론 북한은 경제적으로 열세임을 깨닫게 된 1970년대부터는 이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

연방제 합작통일을 추진하는 남조선혁명, 물리력 또는 혁명에 의한 통일이 불가능할 경우 공산화역량을 키우기 위한 남북대화 및 위장평화 공세 등을 융통성 있게 선택하였다. 예컨대 북한은 1950년대 초반과 1960년대 후반같이 3대혁명역량이 강화되었을 때는 무력해방전략을 과감히 추진하였고, 1950년대 중반과 1990년대 같이 3대혁명역량이 약화되었을 때는 위장평화와 공존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외의 상황에서는 대체로 선전차원의 위장평화공세(남북대화 제의 및 연방제 통일방안 제시)와 전복차원의 통일전선전술(무력도발 및 지하당 구축)을 병행·추진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였다. 허문영, “북한의 변화와 대남정책 전망,” 『전략연구』 제3권 제2호(통권 제7호)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6), pp. 112-131.

<sup>78</sup> 북한은 대남 정책 수단에 있어서는 무력·혁명·대화·(위장)평화 등의 방식을 상황에 따라 배합·사용하였다. 북한은 남한을 강제 점령하려는 무력해방, 연방제 합작통일을 추진하는 남조선혁명, 물리력 또는 혁명에 의한 통일이 불가능할 경우 공산화역량을 키우기 위한 남북대화 및 위장평화 공세 등을 융통성 있게 선택하였다. 예컨대 북한은 1950년대 초반과 1960년대 후반같이 3대혁명역량이 강화되었을 때는 무력해방전략을 과감히 추진하였고, 1950년대 중반과 1990년대 같이 3대혁명역량이 약화되었을 때는 위장평화와 공존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외의 상황에서는 대체로 선전차원의 위장평화공세(남북대화 제의 및 연방제 통일방안 제시)와 전복차원의 통일전선전술(무력도발 및 지하당 구축)을 병행·추진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였다.

<sup>79</sup> 북한은 「남북한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1차 1948. 4. 30, 2차 1948. 7. 5)에서 총선을 통일방안으로 제시하였다.

<sup>80</sup> 내각결정 제43호(1957. 5. 7), 내각결정 제60호(1959. 9. 23) 등.

<sup>81</sup>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회의 호소문」(1954. 10. 30) 등.

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경제회생 없이는 체제유지가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어, 북한은 다시 경제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에 적극적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셋째, 연방제안이다. 북한은 남한에서 1960년 4·19가 일어나자 총선을 위한 과도적 조치로서 연방제안을 제시하였다. 연방제안은 이전의 어떤 제안보다 설득력 있게 보이는 도전적 제안이었다. 북한은 이 제안을 통해 ‘한국의 현 체제를 인정한다’는 양보를 보임으로써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남한 국민의 반공주의 약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불안정한 남한 정세를 활용하여 흡수통일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연방제안은 이후 1970년대 「고려 연방제안」,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으로 이름을 달리하며 오늘날까지 북한의 통일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넷째, 대민족회의안이다. 북한은 정권 초기부터 정당사회단체대표들이 모이는 회의를 열자고 주장해 왔으며, 1970년대 남북회담이 중단되자 그 대안으로서 「대민족회의」를 제의하였다.<sup>82</sup> 북한은 민족통일의 주체가 인민이므로 당국자 대화만으로는 부족하니, 전민족적 범위에서 인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동자·농민·청년학생·지식인·군인·민족자본가·소자산계급과 같은 각계 각층의 인민들과 각 정당·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민족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의도는 남한정부를 일개 단체로 격하시키고 남한의 여러 단체와의 통일전선체를 구축하여 통일을 이루려는 것이다. 대민족회의안은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안」, 「북·남·해외 정당·단체들의 연대회의」(1997년)등의 모습으로 지속·제외되고 있다.

다섯째, 군축 및 평화협정안이다. 북한의 평화공세 중 가장 선전효과와

<sup>82</sup> 1950. 6. 7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 제의; 1973. 4. 16 「남북정치협상회의」; 1973. 6. 23 「대민족회의」; 1982. 2. 10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 1988. 1. 1 「남북연석회의」; 1989. 1. 1 「남북정치협상회의」; 1989. 9. 28 「민족통일협상회의」; 1990. 1. 1 「남북당국·각정당수뇌협상회의」; 1990. 7. 3 「민족통일협상회의」; 1991. 1. 1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1994. 4 「민족대회」; 1995. 1. 24 「대민족회의」; 1996. 1. 30 「남·북·해외 정당·단체 연대회의」 등.

설득력이 높은 방안은 상호감군·상호군축·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것들이다. 상호감군안은 1954년 6월 제네바회의에서 당시 북한외상인 남일이 제안한 이래, 1957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10만 감군안’으로 정형화되었다. 한편 평화협정안은 1955년 8·15 경축사에서 김일성이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제의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북한은 1962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 연설을 통해 ‘북남평화협정’체결을 제의하였고, 1974년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북남평화협정’체결을 철회하고 ‘북미평화협정’체결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체결되자, 북한은 남북간에 불가침 및 화해·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후 1994년 4월 북한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북측 관계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면서 정전기구를 대체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대미협상을 제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sup>83</sup>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당사자에서 남한을 배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남한은 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가 아니고 미국의 「괴뢰국」으로서 자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조국통일’을 위한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북한의 대미정책 목표 중 전 시기를 거쳐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단지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만 다소 변화가 있었다.<sup>84</sup> 예컨대 한국전쟁 이전 시기에는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군대의 동시철거 대상으로, 한국전쟁 이후에는 6개월 이내 철거 대상으로, 70년대에는 평화협정체결 이후

<sup>83</sup> 북한은 1991년 3월 유엔사(UNC)측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에 한국군 장성(황원탁 소장)이 임명된 후 군정위 본 회의를 중단한 이래, 중감위 체코대표부 철수(1993. 4), 군정위 북한대표단 철수(1994. 4),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1994. 5), 군정위 중국대표단 철수(1994. 12), 중감위 폴란드대표단 철수(1995. 2), 판문점 중감위 건물 폐쇄조치 발표(1995. 5) 등 현 정전협정체계 외해를 지속하고 있다.

<sup>84</sup> 허문영, 『북한의 대미국정책 변화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47-48.

철거 대상으로, 80년대 후반(1987)에는 평화통일의 선결조건으로서 단계적·점진적 철수의 대상으로, 90년대 초반(1990)에는 남북군축에 상응하는 비율로의 단계적 철수 대상으로, 90년대 초·중반(1992) 이후부터는 통일 전까지 철수의사 표명·통일이후 단계적 철수의 대상으로 제기되었다.<sup>85</sup>

또한 북한은 주한미군을 조국통일의 근본적 장애물로서만 아니라, 북한 체제에 위협을 주는 제1차적 군사·안보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70년대 중반에 「조미 평화협정」과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제의하였고, 80년대에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평화지대 창설」과 「다국적 군축협상」 「포괄적 평화방안」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평화 보장 체계」 수립 등을 제의함으로써 안보상 두려움의 해결을 모색하였다.<sup>86</sup>

한편 최근 상황변화 속에서 북한지도부는 체제유지를 최우선적 과제로 인식하는 정세관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은 경제난과 안보난에 대한 위기감을 표출하였다.<sup>87</sup> 이에 북한지도부는 '97년 '충돌격진, 3대진지 강화론'을 제시하였고, '98년 '경제건설'이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할 주되는 전선'임을 강조하고,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에 즈음해서는 '강성대국론'을 주창하였다. 그리고 '99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도 경제강국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김일성시대의 통일정책을 고수할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김정일은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현장」으로 재강조하고, 이를 통일의 강령적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sup>88</sup> 또한 그는 「민족대

<sup>85</sup> 홍용표, 『김정일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29.

<sup>86</sup> 허문영, 『북한의 대미국정책 변화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26-48.

<sup>87</sup> 김정일, “비공개 연설(1996. 12. 7),” 『조선일보』, 1997년 3월 19일.

<sup>88</sup>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 8. 4,” 『로동신문』, 1997년 8월 20일.

단결 5대방침」<sup>89</sup>을 새로 제시함으로써 김일성시대의 통일정책의 계승·심화발전을 시사하였다.

요컨대 과거 북한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으며, 다만 공산화통일과 체제유지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이나 평화보장체계의 수립 등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90</sup>

북한은 이 같은 평화와 통일관을 분단이후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는데,<sup>91</sup>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비평화성이다. 북한은 남한 정부를 타도해야 할 ‘미제의 괴뢰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란 무의미한 것이다. 북한이 평화통일방도의 전제조건으로 남조선혁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결코 평화적 방법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비민족성이다. 물론 북한은 통일문제를 ‘외세에게 빼앗겼던 민족적 자주권을 되찾는 문제’이자 남북이 함께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로 줄곧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는데 있어서는 회의가 있다. 남한에도 잘못이 있지만,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망이후 줄곧 남한배제적 대미접근전략을 추진하였고, 주변4국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민족의 운명을 국제사회에 내던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sup>89</sup> ① 민족자주의 원칙, ② 애국애족의 온민족 단결, ③ 북남관계 개선, ④ 외세·반통일세력 반대, ⑤ 내왕·접촉·대화·연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정일, “온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조선중앙방송』, 1998년 4월 29일.

<sup>90</sup> 여인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한·중 workshop 발표논문, 1999. 10. 25).

<sup>91</sup> 북한은 최근에 발표된 김정일 논문을 통해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그리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현장」으로 강조하고, 이를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강령적 지침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 8. 4” 『로동신문』, 1997년 8월 20일.

## 나. 북한 통일정책의 변천과정

2000년 6월 제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북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 지난 50년 동안 남·북한은 상호간의 통일방안을 외세의존적 또는 비현실적이라며 비난해 왔는데, 이제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합의점을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방안에 완전 합의한 것은 아니다. 조기통일에 합의한 것은 더욱 아니다. 남북공동선언 제2항은 남북한이 이제 평화공존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고, 동시에 상호간의 통일방안을 존중할 것과 이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점차 협의·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하였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남북한은 통일지향적 평화공존에 합의한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북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이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평화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이 추구해 온 통일정책의 검토를 통해 북한의 평화관과 평화구축방안 그리고 평화통일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추구해 온 통일정책은 국제혁명역량·북한혁명역량·남한혁명역량의 편성 상황과 이에 따른 전개양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5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sup>92</sup>

### (1) 무력통일 시도기 (1945~1953) : 혁명적 민주기지론

이 기간 북한은 냉전 고착화의 국제환경, 주한미군 철수(1949.6) 및 남한 군사력의 미약,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정비 및 군사력의 대남 절대우위 확보 등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강화 상황 가운데 무력통일을 준

---

<sup>92</sup> 허문영, “북한의 통일정책,” 양성철 외,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pp. 131-172.

비·시도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sup>93</sup>노선에 기초한 통일전략으로서 「민족통일전선」사업과 ‘무력통일’ 전략을 선택하였다.<sup>94</sup> 남북한에 별개의 정권이 수립된 이후 북한은 통일방안으로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전제로 한 ‘남북한 총선거’통일 또는 ‘남북한 국회연합’을 제시하였다. 1949년 6월 28일 「조국통일민주전선」결성대회에서 북한은 통일방안으로서 선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조선위원단 해체 후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와 전조선입법기관 수립 등을 포함한 8개항의 통일방안을 채택하였다.<sup>95</sup> 그리고 1950년 6월 7일 「조국전선」 확대중앙위원회는 남북한 총선거와 이를 위한 남북한 전정당 사회단체대표협의회의 조직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평화적 조국통일방책추진에 관한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남북한 총선거’ 통일방안은 당시 남한의 ‘북한만의 총선거’ 통일방안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한편 동년 6월 1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를 단일한 전조선입법기관으로 연합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평화적 조국통일추진에 관하여’ 라는 결정서를 채택, 한국 국회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평화공세는 「민주기지」노선에 근거한 ‘조국해방전쟁’의 준비를 위장하기 위한 전술적 제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무력통일을 위장하기 위하여 전쟁도발 직전에 위장평화 공세와 더불어 환상적 통일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sup>96</sup>

<sup>93</sup> 혁명적 민주기지만 “혁명하는 나라의 한 지역에서 승리한 혁명을 공고히 하여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담보하는 책원지”를 의미한다.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pp. 1235-1236.

<sup>94</sup>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노동계급과 농민뿐만 아니라 민족자본가도 포함한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이 참가하는 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합니다. …공산당은 우리 나라의 통일독립을 주장하는 당파와는 서슴치않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김일성 저작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p. 4-5.

<sup>95</sup> 『조선중앙년감 1950』, p. 234.

<sup>96</sup> 1950. 6. 10 조만식 선생과 김삼룡·이주하 교환 제의; 1950. 6. 19 『전조선입법기관』 구성 제의.

## (2) 평화통일 공세기 (1954~1961) : 두가지 전도론

이 기간 북한은 동서평화공존과 중·소 갈등의 국제환경,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1953.10 서명, 1954.11 발효), 중공군의 단계적 철수(1954.10; 1958.10)에 따른 군사적 불안감 등 3대혁명역량의 약화상황에 처하여 위장 평화통일을 전면에 내세우고, 한국전쟁으로 와해된 체제를 재정비하는데 주력하였다. 북한은 ‘선 건설·후 통일’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북한은 통일방법으로서 평화통일과 무력통일의 「두가지 전도론」을 제시하고, 선전적 차원에서는 전자를 강조하였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은 첫째 전도 즉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염원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투쟁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민주기지로 강화하는 동시에 남반부에 대한 정치사업도 잘할 것을 강조하였다.<sup>97</sup> 한국전쟁을 통해 무력통일의 한계를 절감한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방법을 즉 평화를 위장한 혁명 통일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평화통일’전략에 기초한 통일방안으로서 「선 외국군(미군)철수·후 남북한총선 통일」을 주장하였다. 휴전이후 북한이 제의한 통일방안은 1954년 4월 27일 제네바 회담에서 외상 남일이 제안한 3개항의 평화통일안이다.<sup>98</sup> 그는 남북한 총선거를 위한 ‘전조선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외국군의 철수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 그리고 극동 해당국가들의 협조 등을 주장하였다. 이후 북한은 선 외국군대 철수, 후 자유선거 또는 남북한총선 통일을 거듭 주장하였다.<sup>99</sup> 이같은 북한의 통일방안

<sup>97</sup>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선집 1』, p. 573.

<sup>98</sup> 안명일·정철만, 앞의 책, pp. 232-233.

<sup>99</sup> 1956. 4. 28 ‘남북총선거에 의한 통일민주연합정부 수립’ 제의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평화통일을 위한 선언’ 제5항); 1957. 9. 20 ‘일반·평화·직접적 비밀투표 방법과 전국적 선거에 의한 남북통일’ 주장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회의에서 김일성 연설); 1959. 10. 26 ‘일체 외국군대 철수후 전조선의 자유선거’ 제의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 회의의 부수상 남일 연설).



은 ‘남북한 총선거’ 통일방안이라는 점에서 한국전쟁 이전기의 통일방안과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유엔 감시하에 선출된 남한 국회의 존재를 전면 부정하지 않은 점에서 한국전쟁 이전기의 통일방안 보다는 다소 유연해졌다.<sup>100</sup>

### (3) 혁명통일 추진기 (1961~1979) :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강령」

#### (가) 1960년대 : 「남북연방제안」

1960년대 전반기 북한은 중·소 분쟁 격화 및 베트남전쟁 확대의 국제 환경, 남한에서의 학생혁명과 군부쿠데타에 따른 강력한 반공정권 등장, 북한의 성공적인 전후복구사업 수행과 4대군사노선 채택 등 국제 및 남한 혁명역량의 약화, 북한 혁명역량의 강화 상황 가운데 「남조선혁명」노선을 은밀히 추진하였다. 그리고 김일성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고 「국방·경제 병진노선」 추진의 결과 북한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이르는 1960년대 후반기에 북한은 무력도발의 강경노선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시기 북한은 통일방안으로서 ‘남북총선거’방안을 지속하되, 4·19 이후 남한상황이 불안정하게 되자 ‘연방제’와 같은 선선선동용 통일방안을 새로 제의하였다. 김일성은 1960년 8월 14일 ‘남북연방제’를 남북총선거가 불가능할 경우의 통일이전 과도적 대책으로서 처음 제의하였다.<sup>101</sup> 북한이 교류·협력에 기초하여 즉 일종의 기능주의적 통합론에 기초하여

<sup>100</sup> 북한은 남북한 총선거를 위한 회의 명칭을 ‘전조선위원회’ ‘대표자연석회의’ ‘남북한공동회의’ 등으로 바꿔 제안하였다. 김명기, 『남북한 통일정책』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5), p. 115.

<sup>101</sup> “우리가 말하는 연방제는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조선인민의 민족적명절 8.15 해방 15주년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선집 4』, p. 214.

연방제 통일안을 제시한 것은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성을 확보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약 1년여에 걸쳐 연방제안과 남북교류 통합론을 계속 주장하였다.<sup>102</sup> 그러나 당시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던 남한의 제2공화국으로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북한은 1961년 9월 17일 제4차 당대회 선언을 통하여 ‘미군 철수 및 미제국주의 식민지통치 철폐’의 혁명지향적 통일방안을 다시 제시하였다.<sup>103</sup> 그리고 1968년 9월 7일 ‘공화국 창건 스무돛 기념 경축대회 보고’를 통하여서는 ‘선 주한미군철수 및 남조선혁명(인민민주주의 혁명) 후 (민주주의적 남북총선거를 통한)남북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sup>104</sup> 이 보고에서 김일성은 통일이란 구체적 방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며, 주한미군 철수 및 남조선혁명 완수가 없는 한 이룩될 수 없는 것<sup>105</sup>임을 주장함으로써 혁명지향적 통일관을 거듭 보여주었다. 북한이 이 같은 「선 혁명·후 통일」 자세로 다시 돌아서게 된 것은 남한에서 강력한 반공·군사정권이 출범하여 정치적으로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외교적으로 한·일국교정상화 및 월남 파병을 통한 한·미관계 강화를 이루어간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4대군사노선의 성공적 추진 및 대 소련 관계회복에 따른 군사원조의 확보 결과 군사력이 강화되자, 북한은 1967년 이후 무장침투적 대남 정책을 선택하였다. 즉 운수봉지구 작전 (1967.6.23~6.24), 정읍 내장산

<sup>102</sup> 1960년 11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망록; 1960년 11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교류의 협조를 실현하여 남조선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할 데 대한 의견서”; 1961년 3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비망록 등.

<sup>103</sup> 『조선중앙년감 1962』, p. 91.

<sup>104</sup>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1968. 9. 7),” 『김일성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p. 197-198.

<sup>105</sup> “그 구체적 방도가 어떻든지간에 조국통일은 미제침략자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고 남조선 괴뢰정권을 때려부신 다음에야 비로소 이룩될 수 있습니다,” 위의 책, p. 199.

작전(1967.7.18~19), 청와대 기습사건(1968.1.21), 푸에블로호 나포(1.23), 서귀포 간첩선 침투(8.20), 울진·삼척지역에의 120명 무장공비 침투(10.20~11.3), EC-121기 격추(1969.4.15), KAL 여객기 납치(12.11) 등 대남강경노선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게릴라전을 통한 대남통일정책 또한 남한 국민의 반공의지에 따른 비협조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 (나) 1970년대 : 「고려연방공화국안」

이 기간 전반기 북한은 미·소 데탕트와 미·중(1972.2) 및 일·중 관계 개선의 국제환경, 남한의 평화통일 정책과 지속적 경제발전,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대두 등 북한의 정치·군사적 역량을 제외한 3대혁명역량이 대체로 약화되는 상황 가운데 이에 대한 적응차원에서 남북대화에 임하였다. 그러나 중반기에 월남의 패망(1975)과 제3세계에서의 반미성향의 증대,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에 따라 국제혁명역량과 남한혁명역량이 다시 강화되자, 북한은 남북대화를 중단한 뒤 대민족회의 등 위장 평화통일 방안을 선전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동시에 지하당 조직 구축 및 박정희 대통령 저격기도, 판문점 도끼만행, 땅굴 구축 등 무력도발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통일방안에 있어 허담의 연설<sup>106</sup>과 김일성의 연설을 통하여 1960년대의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주한 미군철수”와 “남북연방제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남북 총선거” 주장을 삭제하고, 연방제 통일국가의 국호를 “고려연방공화국”으로 제시한 점에 있어 다소 변화가 있었다.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은 구스타프 후사크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일행의 북한방문 환영

<sup>106</sup> 197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 회의에서의 외교부장 허담의 연설에 따른 8개항의 통일방안 : 미군철수후 남북한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감군, 남북총선거 통한 중앙정부 수립,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 실시, 남북한정치협상회의 진행 등.

평양시 군중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조국통일 5대강령(방침)」을 제시하였다.<sup>107</sup> 조국통일 5대강령을 통하여 제시된 「고려연방공화국안」은 1960년대 「남북연방제안」을 지속하는 부분과 수정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북과 남에 현존하는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연방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고려연방공화국’도 ‘남북연방제’와 마찬가지로 과도체제임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 총선거’에 의한 통일 주장을 일단 철회하고 「고려연방공화국안」을 ‘조성된 조건에서…가장 합리적인 방도’로서 주장하였다. 이는 1960년의 남북연방제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한 자유로운 총선거안을 남한이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의 차선택 차원에서 제시되었던 것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남북연방제안에서 남북정부의 동수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가 오직 경제, 문화문제만 다를 것으로 제의되었던 것에 비해, 「고려연방공화국안」에서는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가 경제, 문화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문제 까지도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제의되었다.

이같은 변화는 1960년대 초반에 북한이 대남 우위적 국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데 비해, 1970년대에 들어와 남북한의 국력이 균형에 이르게 되고 미·중·일·중 관계개선에 따라 동북아에 데탕트 기운이 만연하게 된 데 영향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자, 북한은 교류·협력을 통한 흡수통일에서 위장평화(외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을 전제로 한 고려

<sup>107</sup>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하신 김일성 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1973. 6. 24.; 김일성,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1973.6.25.),” 『김일성 저작선집 6』, p. 448. ①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긴장상태 완화: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남북한 평화협정의 체결, ② 다방면적(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 협력과 교류의 실현, ③ 대민족회의 소집 : 각계각층 인민(북:로동자, 근로농민, 근로인텔리, 청년학생, 병사 남: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 ④ 남북연방제 실시: 남과 북에 현존하는 두 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고 ‘고려연방공화국’ 단일국호 사용하는 연방공화국 창설, ⑤ 단일국호(고려연방공화국)에 의한 유엔가입 및 대외관계에서 공동보조: 유엔 분리가입 반대, 통일 이전 유엔가입하려면 고려연방공화국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가입하였다.

연방공화국안)와 전북(남조선혁명)의 이중전략을 통한 합작통일로 통일전략을 전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4) 연방통일 선전기 (1980~1987)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이 기간 북한은 미·소간의 신냉전 대두(1979)와 남한의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강제적인 체제안정, 북한의 김정일 후계체제 공식화(1980.10) 등 국제혁명역량 및 북한혁명역량의 강화와 남한혁명역량의 약화 상황 가운데 ‘연방통일’ 전략과 테러·군사도발 전략을 동시에 전개하였다. 북한은 이를 통해 북한 체제의 공고화와 한반도 적화통일을 함께 추진하였다. 그리고 버마 랭구운 테러사건(1983.9)으로 국제혁명역량이 약화되자, 북한은 제2기 남북대화(1984~1985)에 임하였다. 이후 민주화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남한 정세가 혼미하여지자, 북한은 남북대화를 중단하고 다시 ‘남조선혁명’ 추진을 위하여 지하당 구축과 통일전선사업(1989년 각종 밀일북 사건 주도)에 나섰다.

1980년 10월 10일 제 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사업총화보고를 통하여 새로운 통일방안으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sup>108</sup> 이 방안은 3대 선결조건과 연방국가의 특징 그리고 10대 시정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3대 선결조건으로서 남한에서의 ‘군사파쇼통치’ 청산과 사회의 민주화(반공법과 국가보안법 폐지·‘폭압통치기구’ 철폐·공산당 활동 보장) 실현,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제거(주한미군 철수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미국의 「두개조선」 조작책동 및 내정간섭의 저지를 제시하였다.<sup>109</sup> 그리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형성하기 위하여 ①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②「최고민족연방회의」

<sup>108</sup> 『김일성저작선집 8』, pp. 364-382.

<sup>109</sup> 위의 책, pp. 369-371.

의 상설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정치, 외교, 군사를 관장케 하며 ③사상과 제도를 상호 인정·용납한 기초 위에서 남과 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연방정부의 지도하에 지역자치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sup>110</sup> 그리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시행할 ‘10대 시정방침’을 제시하였다.<sup>111</sup>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은 기존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다소 수정하고,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1960년과 1973년의 「연방제안」이 ‘과도적 조치’로서 국가연합(confederation)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반면에, 이 방안은 ‘통일국가의 최종적 형태’로서의 연방(federation)적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띠게 되었다. 종전의 ‘1국가 1체제 완전통일’ 방안을 완전 폐기하고, ‘1국가 2지역자치정부 연방국가 창설 방안’을 새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대 시정방침 또한 새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당시 정권초기 상황에 있던 전두환 정부를 ‘군사파쇼’정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연방통일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sup>112</sup>

<sup>110</sup> 위의 책, p. 373.

<sup>111</sup> 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함, ②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 실시 및 민족의 대단결 도모함, ③ 남과 북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 실시 및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함, ④ 과학·문화·교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킴, ⑤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연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함, ⑥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 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킴, ⑦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민족연합군 조직,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 보위함, ⑧ 해외 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옹호·보호, ⑨ 남과 북이 통일이전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 옳바로 처리, 두 지역정부의 대외 활동 통일적 조절, ⑩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 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 발전, 평화에호적인 대외정책 실시함. 위의 책, pp. 374-382.

<sup>112</sup> 위의 책, p. 369.

### (5) 공존통일 모색기 (1988~현재) :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이 기간 북한은 소련의 변화와 해체(1991.12.30) 그리고 냉전체제의 붕괴, 남한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문민정부의 출범(1993.2) 그리고 전향적 북방 및 대북정책 추진, 북한의 경제적 및 안보적 위기 심화 등 북한 정권의 창설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인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에 처하였는 바, 체제유지를 위해 수세적 방어차원에서 남북대화에 임하였다.

북한은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고려민주연방제」를 보다 공존지향적 또는 체제수호적인 것으로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김일성은 1988년 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통일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남북공존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sup>113</sup> 이후 1988년 11월 7일 북한은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의하였다.<sup>114</sup> 여기서 북한은 ‘평화보장 4원칙’<sup>115</sup>과 ‘포괄적 긴장완화방안’<sup>116</sup>을 제의함으로써 공존지향적 입장을 거듭 표명하였다. 또한 1990년 10월 18일 김일성은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 남북대표단과의 회견시 처음으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제의하였다.<sup>117</sup> 이와 같은

<sup>113</sup> 『조선중앙년감 1989』, pp. 1-7.

<sup>114</sup> 이 제안은 1988년 10월 19일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내용(남북정상 회담의 실현, 동북아평화협의회 구성,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에 대한 북한의 대응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sup>115</sup> ① 통일지향(조선반도의 평화는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여야 함), ② 외군철수(주한미군), ③ 남·북군축, ④ 당사자협상(조선반도의 평화는 긴장격화에 책 임있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함: 미국과 남·북한)

<sup>116</sup> 한반도의 평화실현 방안: ① 미군무력(핵무기 및 주한미군 병력)의 단계적 철수, ② 남북무력(병력·군사장비·군사조직)의 단계적 감축, ③ 미군무력의 철수와 남북무력의 감축에 대한 통보와 검증, ④ 북한·미국·남한 사이의 3자회담, 남북한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완화방안: ① 정치적 대결상태완화(상호비방 중상 중지, 정치행사중지 및 법제도 철폐, 합작·교류실현), ②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대규모군사연습 중지, 군사행 동중지, 고위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개시), ③ 남북사이의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진행, 『북한군사문제 제의자료집(1948~1988)』 (서울: 평화연구원, 1989), pp. 921-925.

수정적 연방제안은 1991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천명되었다.<sup>118</sup> 북한은 제도통일의 위협성을 강조하면서, 1980년의 최종 완성형적 연방제론을 잠정적·단계적 연방제론으로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sup>119</sup> 즉 남북한 지역정부가 잠정적으로 외교 및 군사적 권한을 보유하는 국가연합적 통일을 제시한 것이다.<sup>120</sup> 이같은 변화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흐름으로부터 현존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의 대남수세적 입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은 통일원칙으로서 ‘민족대단결’<sup>121</sup>을 강조하면서 「조국통일 5대방침」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제시하였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김일성은 5대방침으로서 ①평화적 환경 마련 ②자유 내왕 및 전면개방 ③유리한 국제적 환경 조성원칙에 입각한 대외관계 발전 ④대화발전 ⑤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을 제기하였다.<sup>122</sup> 북한은 1991년 8월 1일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라는 김일성의 담화를 통하여 민족대단결을 거듭 강조하였고<sup>123</sup>, 드디어

<sup>117</sup> 『로동신문』, 1990년 10월 19일.

<sup>118</sup>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조선중앙년감 1992』, p. 5.

<sup>119</sup>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선중앙년감 1992』, p. 6.

<sup>120</sup> 북한의 국가연합적 성격의 연방제안은 그 후 주요인사들에 의해 거듭 천명되었다. 1991년 윤기복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은 “남북한의 2개정부가 일정 한도내에서 잠정적으로 외교·군사권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1992년 6월 하와이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이삼로 북측대표는 “남북지역정부가 외교권·군통수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두개 제도와 두개 정부”를 주장하였다.

<sup>121</sup> “전체 조선 민족은 계급적 차이와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오직 민족 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단결해야 한다”

<sup>122</sup> 『로동신문』, 1990년 5월 25일.

<sup>123</sup>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또한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룹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



는 1993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그동안의 통일관련 주장들을 종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으로 채택하였다.<sup>124</sup> 북한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채택함으로써 ‘패권적 혁명통일’ 전략으로부터 ‘체제수호적 공존통일’ 전략으로의 전환을 정당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북한 평화통일안의 특징

### (1) 상호인식

북한은 분단이후 남한을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침략적 군사기지”<sup>125</sup>로 선전하고, 남한 정부를 “미제의 식민통치를 가리우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으며, 역대 괴뢰정권은 모두 그 어떤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정권이었으며, 식민지적이고 예속적이며 지주·매판자본가들과 반동관료배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반인민적 반동정권”<sup>126</sup>으로 규정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스스로를 “인민이 창건하였고 전체 인민의 통일되고 단

---

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조선중앙년감 1992』, p. 45.

<sup>124</sup> ①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②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③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④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⑤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⑥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가야 한다. ⑦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⑧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⑨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⑩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조선중앙년감 1994』, pp. 8-10.

<sup>125</sup> 『정치사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211.

<sup>126</sup> 허중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리론』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975), p. 36.

결된 역량에 의거하고 있으며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가장 공고한 국가”<sup>127</sup>로 자평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조선’ 논리를 주장하였고, 남한을 그들의 체제에 흡수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정책 추진 그리고 1990년 독일통일에 따른 한반도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이라는 최대 목표보다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유지라는 최소목표에 보다 비중을 두게 만들었다.

그 결과 북한에게 있어 이제 남한은 ‘혁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흡수 통일과 관련한 ‘경계의 대상’이자 동시에 북한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의 대상’이라는 인식들이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통일개념

북한의 통일개념은 ‘사회구성체론’<sup>128</sup>에 기초한다. 북한은 사회구성체론에 기초하여 남한 사회의 성격을 ‘미제국주의의 강점’하에 있는 농업중심의 사회 즉 ‘식민지 반봉건사회’<sup>129</sup>로 규정하고, 통일논리로서 「민족해방투쟁론」과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식민지 통치’를 민족분단의 원인으로 강조하고, 통일

<sup>127</sup> 『김일성저작선집 5』, p. 135.

<sup>128</sup> 사회구성체란 맑스주의자들의 사적 유물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경제적 토대와 그것에 의해 규정된 상부구조의 총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유기체’를 의미한다. 맑스주의자들은 사회의 역사적 발전을 원시공산제사회에서부터 사회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 5개의 사회구성체로 구분하며,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북한은 남한사회를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혁명의 방향으로서 ‘반제 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강조하였다. 조용범·박현채 감수, 『경제학사전』 (서울: 풀빛, 1988), pp. 44~45. 북한은 ‘사회구성체’라는 개념보다 ‘사회경제구성태’(역사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상부구조의 총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정치사전』, pp. 527-528.

<sup>129</sup> 최근에 와서 북한은 남한사회 성격을 반봉건사회에서 반자본주의사회로 전환된 것으로 규정한다. 『평양방송』, 1995년 3월 12일.

을 분단된 민족의 재통합이 아니라 ‘미제’ 때문에 성취하지 못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완성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은 1960년대 이후 ‘미제를 타도하기 위한 민족해방투쟁’과 ‘반동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달성하면 남한에서 ‘인민정권’이 수립될 수 있으며, 이후 남북한의 ‘인민정권’이 ‘합작(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제 1단계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1974년 3월 이후부터는 대미 평화협정 체결 → 주한미군 철수 →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의 순서/ 1988년 이후부터는 신뢰구축 → 북남무력감축 → 주한미군 철수 → 평화협정 체결)를, 제 2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60년대 ‘통혁당’같은 전위당 구축과 통일전선체 형성 → 남조선혁명 → ‘인민정권’ 출범의 순서를, 제 3단계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정치협상회의」 개최를 통한 연방제 통일의 순서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해 왔다. 북한은 이같은 통일관을 분단 이후 지금까지 지속해 오고 있다.<sup>130</sup>

### (3) 통일방안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북총선 통일’에서 ‘연방제 통일’로의 변화가 있었다. 연방제의 내용 또한 과도적 조치에서 최종형태로 그리고 다시 국가연합적 성격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철수’와 ‘민주정권의 출범’과 같은 선결 조건들은 변함없이 주장되었다. 예컨대 북한은 1970년대 초반까지 주로 「남북총선을 통한 통일정부수립」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1960년대 초반부터는 「연방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방제」도 1960·70년대의 총선을 위한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제」 및 「고려연방제」 방안에서 1980년대의 통일국가 최종형태로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연합적 성격을 지니며 공존지향적인 수정적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 제시

<sup>130</sup> 허문영, “북한의 대남 및 통일정책,”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pp. 131-172.

되었다.

한편 연방제 방안의 성격은 시기별로 변화가 있었다. 3대혁명역량이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시점인 1960년대 초반에 제시된 연방제는 흡수통일 방안으로 평가되며, 남한의 혁명역량만이 강화된 시점인 1970년대의 연방제는 패권적 합작통일 방안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3대혁명역량이 점차 약화되는 시점인 1980년대의 연방제는 동등적 연방통일 방안으로 평가되며,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에 따라 체제유지에 있어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 시점인 1990년대에 제시된 연방제는 공존지향적 통일 방안으로서 형식만 통일방안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김일성·김정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분단관리방안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총선’에서 ‘연방제’로의 통일방안의 변화는 통일노선이 「민주기지노선」에서 「지역혁명노선」으로 변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연방제’방안 내부에서의 변화는 3대혁명역량의 편성상황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4) 통일정책 기초

북한은 공산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통일정책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3대혁명역량의 편성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한국전쟁 이전기에 북한은 ‘선 북한내부 및 남북한간의 「민족통일전선」 강화·후 무력통일」 전략으로 선택하였고, 1950년대에는 대외적으로 평화통일을 선전하되, 대남관계에 있어 「반제·반봉건 민주혁명」의 장기적 수행을 채택한 후 ‘선 북조선혁명역량강화·후 남조선해방’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60·70년대에는 북한 혁명역량의 강화 상황 및 남한 혁명역량의 변화에 따라 「패권적 혁명통일」 전략을 선택하였는 바, 1960년대에는 ‘선 남조선혁명(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후 조국통일(완전통일)」 전략을, 1970년대에는 ‘선 남조선혁명(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후 합작통일(과도적 연방제)」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 남북한간의 국력격차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자, 북한은 선진적 차원에서 「패권적 혁명통일」 전략을 포기하고 「동등적 연방통일」 전략

을 제시하였는 바, ‘선 민족자주정부수립·후 연방국가창설’ 전략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는 3대혁명역량의 전반적 약화 상황 가운데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존립자체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자, 북한은 체제수호를 위한 공존통일 전략으로서 ‘선 남북공존·후 연방통일’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수정적 연방제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민족대단결’ 논리를 강조함으로써 ‘전민족적통일전선’<sup>131</sup> 구축 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대남정책의 비중을 「남조선혁명」을 위한 ‘남한체제 전복’ 정책으로부터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남한체제 약화’ 정책으로 점차 이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북한의 대남정책은 ‘공세적 정책 또는 패권적 정책’으로부터 ‘공존적 정책 또는 평등적 정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북한의 지도부가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대남인식에 있어 ‘공격적 입장(무력공격의 대상)’에서 점차 ‘경쟁적 입장(체제경쟁의 상대)’으로 그리고 1990년대에는 ‘방어적 입장(흡수통일의 주체)’으로 변화를 보인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5)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분단 55년 사이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북총선 통일에서 연방제 통일로 변화가 있었다. 북한은 1960년대 후반까지 외국군(미군)철수, 후 남북한총선 통일을 주장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1960년대 초반부터 연방제 통일을 병행 제시하였고, 1980년대부터는 연방제 통일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연방제 명칭과 내용 또한 변화가 있었다. 1960년대 ‘남북연방제’, 1970년대 ‘고려연방제’,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으로 변화가 그것이다. 북한은 연방제를 1970년대까지는 총선을 위한 과도적 조치로서 제시하다가, 1980년대에는 통일국가 최종형태로 강조하였고, 1990년대 들

<sup>131</sup> 강승춘, 앞의 책, pp. 126-165.

어와서는 국가연합적 성격을 지닌 공존지향적 수정안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식적으로는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나, 그 내용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80년대 후반 냉전체제의 붕괴와 남한의 북방정책 등으로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등을 겪게 되고 체제유지에 불안을 느끼게 되자, 남북공존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88년 신년사와 9월 공화국 창건기념사에서 공존의 원칙을 제시하고, 91년 신년사에서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여야 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같이 수정된 연방제는 ’80년에 발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보다 수세적인 통일방안으로서, 통일 그 자체보다 체제보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국가연합적·과도기적·체제보존적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은 두 정부, 두 제도 인정을 강조하면서, 지역정부가 경제·문화뿐만 아니라 외교·군사권 까지도 독자적으로 행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완전 통일에 대해서는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시키지 않은 채, 후대의 숙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적극적 통일방안이라기보다는 남북한의 분단 상태 유지를 목표로 한 방안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창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남북한 같은 숫자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최고민족연방회의」의 상설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에서 정치, 외교, 군사를 관장하되, 연방정부의 지도하에 사상 및 제도가 상이한 남북의 지역정부들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즉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통일방안이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①남북한 당국·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개최→ ②통일방안 협의·결정→ ③고려민주연방공화국 선포 등의 수순으로 추진된다. 기존의 연방제안이 통일에 이르는 과도단계로 제안된 반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의 완결상태로 제안된 차이점이 있다. 또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1973년 「고려연방공화국안」 보다 연방제의 특성을 구체화하였는 바, 연방정부가 군사·외교권을 행사하고 지역정부는 내치(內治)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 (6) 남북한 통일방안 유사점과 차이점

북한의 수정된 연방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같이 연합성격의 중간단계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외형적 유사점을 갖고 있으나, 연방제 통일을 궁극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차이점을 또한 갖고 있다. 아무튼 제2항 합의로 말미암아 김정일 체제는 적어도 남한으로부터는 생존을 확고하게 보장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유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북연합안은 모두 평화적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두 안은 통일의 완성상태가 아니라 최종 통일을 향한 과도기적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수정된 연방제안에서 외교권과 국방권까지도 지역정부에 맡기는 등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안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남북 지역정부가 동등한 자격으로 연방 혹은 남북연합에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북연합안은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의의 구성을 제안하고, 연방제안은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 등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있다. 첫째,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인 반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목표로 한다. 둘째, 북한의 ‘낮은 단계’연방제는 교류·협력을 통한 기능주의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교류·협력의 확대가 초래할 흡수통합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 방안이다. 셋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를 장기간 거치면서 이질감을 해소하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연방제는 정치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넷째, 연방제는 빨럭불가담의 중립국가를 목표로 하는 반면, 남한의 남북연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지향한다. 다섯째, 연방제는 미군철수, 보안법 철폐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남북연합에서는 전제조건이 없다.

### 3. 중국인의 평화철학과 동북아의 평화<sup>132</sup>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국제질서는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양대 진영을 이루는 냉전구조를 형성했다. 이 체제하에서 이데올로기를 경계로 양 진영이 참여한 대립을 해왔다. 냉전구도가 붕괴된 후의 세계도 결코 평화롭지 못해서 민족간의 갈등, 종교분쟁 및 지역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사건은 평화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켰다.

오늘날 통용되는 ‘평화학’의 내용은 대체로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평화이론으로, 평화와 폭력의 개념·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비폭력 및 갈등 분석 등을 다룬다. 둘째는 평화문제론, 전쟁분석·사회충돌의 근원·성별과 폭력 및 관련 정치경제요소 등을 다룬다. 셋째는 평화전략으로, 군비감축과 통제·충돌해소·인권·민족자결·사회발

<sup>132</sup> 이 글은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전문가 워크샵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발표자의 동의를 얻어 수록한 것이다. 진홍상, “중국인의 평화철학과 동북아의 평화,”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전문가 워크샵』 (2004. 9. 21).



전·환경정치와 세계질서 및 평화운동 등을 다룬다. 그 외에 일부 국제적 갈등 현안에 관한 사례연구도 ‘평화학’의 범주에 속한다.

평화와 전쟁에 관한 문제는 인류역사만큼 오래되었고 고래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모색도 부단히 지속되어 왔으며 불후의 명저도 다수 출현했다. 주지하듯이 중국은 세계 문명발상지의 하나로, 수천 년에 이르는 동방 문명의 큰 흐름 속에서 중화민족은 동방문명의 특색을 지닌 평화철학을 창조했으며, 그것은 중국전통문화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세계 각 민족의 평화에 대한 이해와 비교해 보면 중국 고전철학에서 말하는 ‘和’ 사상은 광의의 평화개념임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는 조화·화목·평화·선량함·중화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단합으로 민중과 어울림(和以處衆)’·‘마음을 합쳐 곤란을 극복함(和衷共濟)’·‘정치가 잘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화목함(政通人和)’·‘내부적으로 단합하고 대외적으로 순리적임(內和外順)’ 등의 심오한 처세철학과 인생관을 담고 있다.

이 사상은 중국 역대의 철학 및 각종 전적들에 풍부하게 내포되어 있는데, 중국과 외국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고 관련 저술도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와 세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부단히 제고되고 역할도 확대되었으며 외부와의 문화교류도 심화 발전함에 따라 평화문화를 포함한 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세인들의 이해와 관심도 부단히 증대되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로 덩샤오핑(鄧小平)·장쩌민(江澤民) 및 후진타오(胡錦濤)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집단 지도체제가 지속적으로 ‘평화적 부상(和平崛起)’이라는 발전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현 지도층에 의해 더욱 체계화된 이 발전전략은 중국의 유가적 전통에서 유래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철학적 이념과 정신을 체현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대국 중의 하나인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체제구축 등의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중국인의 ‘평화철학’이란 프리즘을 통해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문제의 장래를 투시해 보고 ‘동북아의 평화문화’의 구축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 가. 유교의 ‘화이부동(和而不同)’·‘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과 그 영향

중국 역대 사상가들의 ‘화(和)’ 사상에 대한 논술이 종적인 면이라면 횡적인 면에서도 유학, 불교, 도교 등 종교도 ‘화’ 사상에 대해 각기 독특한 논술을 했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유교의 ‘화이부동’과 ‘천인합일’의 사상에서 체현된 평화철학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 (1) 중국 전통철학의 삼대 명제와 세 가지 체계

중국의 전통철학은 타민족의 철학과는 다른 일련의 특수한 개념범주로 이루어져 있고 세 개의 기본명제가 있다. 즉, ‘천인합일’·‘지행합일(知行合一)’·‘정경합일(情景合一)’의 세 기본명제는 중국전통철학의 진(眞), 선(善), 미(美)에 관한 특수한 관념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들 특수관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서구철학 그리고 인도철학과도 다른 이론체계를 형성한다.

세 가지 체계로는 정치화한 유학, 도통(道統)의 유학 및 학통(學統)의 유학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학통으로서의 유학의 의의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 (2) 유학의 발전단계

先秦유학이 유학의 제1기라고 한다면 宋·明유학, 즉 신유학은 유학 발전의 제2기이고 유학 발전의 제3기 발전이 가리키는 것은 근 백년 이래로 서구사상의 충격 하에서 발전해 온 현대 신유학이라고 할 수 있다. ‘5·4운동’ 이래로 ‘민주와 과학’이 중국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 현대 신유학의 대표들은 ‘內聖’의 학문이 현대 민주정치의 요구에 부합하는

‘外王’의 도리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중국 전통철학 중의 ‘내성외왕(內聖外王)’의 구도를 수호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는 것과 동시에 ‘심성(心性)’의 학문이 ‘양지의 결함(良知的缺陷)’을 거쳐 과학의 인지체계를 열 수 있음을 증명하여 중국철학도 서양철학과 병립하는 지식론 체계를 갖출 수 있게 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가 반드시 이 길을 통해서만 중국철학의 가치와 의의를 고려해야 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 (3) ‘화이부동’과 ‘천인합일’ 사상

학문적 전통으로서의 유학에는 다수의 매우 합리적인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이부동’의 관념은 인간관계 및 국제관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모두 훌륭한 역할을 한다.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지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국제무대에는 많은 서로 다른 국가들이 각기 다른 역사적 배경, 종교 및 관념을 갖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이 어떻게 지내야 할까? 물론 그러한 차이성을 인정하여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하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문화를 상호 존중해야 한다. ‘천인합일’의 관념은 오늘날의 생태계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대한 의의를 갖는다. 서양철학에서는 천인이 이분되어 있다. 러셀의 『서양철학사』에서는 정신과 물질은 그 중 한가지만을 연구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인간을 연구하면서 하늘을 연구하지 않을 수 있고, 하늘을 연구하면서 인간을 연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전통문화는 그와 달라서 인간을 연구하면 반드시 하늘을 연구해야 하고 하늘을 연구하면 반드시 인간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희(朱熹)는 “하늘이 곧 인간이요, 인간이 곧 하늘이다(天卽人, 人卽天)”라고 하여 하늘을 인간과 뗄 수 없고 인간도 하늘과 뗄 수 없음을 표현했다. 이는 오늘날의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대한 의의를 갖는다. 다시 말해 인류가 자연을 무제한으로 개발하고 무정하게 침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학의 관념은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큰 의의를 갖는다.

‘화이부동’과 ‘천인합일’ 사상은 현시대의 평화와 발전과 같은 주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철학들이 중국철학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철학은 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서 인류사회에 공헌을 했다.

역사적으로 모종의 문화가 확실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현상이 있는데, 오늘날의 서양문화는 의심의 여지없이 강세의 문화이다. 열린 사고를 가진 사상은 자신의 문화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보아야 한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문화는 다원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대화를 주창하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함께 발전해야만 한다.

소위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차이점을 인정하고 그 차이점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조화라야만 사물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화이부동’의 사상에 의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각자의 의견이 달라도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 종교, 이데올로기를 가진 다양한 국가들과 민족들이 상대방의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평화공존 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화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문명 간의 모순과 갈등은 역사상의 어떤 시대보다도 현저하고 격렬해지고 있다. 이것이 헨팅턴(Samuel P. Huntington)이 ‘문명 충돌론’을 주장한 이유이다. 그러나 문명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코 일시적으로 우세를 점한 특성의 문명으로 다른 문명을 동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문명충돌의 해소는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현실 세계에서 ‘화이부동’의 정치문명관을 주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천인합일’의 사상은 현재 당면한 생태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즉 인류가 자연계를 무한대로 개발하고 무정하게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깨워 줄 것이라는 것이다.

#### (4) 유교의 ‘화이부동’과 ‘천인합일’ 사상의 영향

유가사상은 중국 역대 왕조의 지도이념이자 주류사상으로, 중국의 역사 발전과 전통문화 가운데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특히 ‘화이부동’ 사상은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 및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방식 그리고 상업 관습 등 각 영역에 있어서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천인합일’을 강조했는데, 인간은 대자연이 조화를 이룬 전체의 일부이면서 또한 능동적인 주체여서, 인간은 자연을 개조하기도 하고 자연에 순응하기도 하면서 서로 거리가 없이 융합하여 공생·공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화목하게 지낼 것을 요구하는데, 타인을 진지하게 대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줄 알고 서로 단합하고 도우며 사랑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집단의 화합과 민중의 구제(和群濟衆)’를 숭상해야 하는데, 사회는 개인들로 구성되고 개인은 사회를 떠나 살 수 없지만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추구하고 창조를 격려하면서도 반드시 집체에 융화되어 개인의 목표를 사회적 수요와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의 화합을 창도(協和萬邦)’하여 국가간에 선린과 신뢰, 그리고 예의로 교류해야 하고 대국이 소국을 괴롭히거나 강국이 약소국을 깔보거나 부국이 빈국을 억압해서는 안 되며 국제적 분쟁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각국간에는 서로 평등하게 대하며 서로 존중하는 기초위에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각종 문명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해와 포용(善解能容)’을 주장하는데, 각종 문명은 인류문명의 구성부분으로 모두 인류문명에 공헌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배척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피차 존중해야 하며 서로 배우고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것 등을

주창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의 세계화가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각국과 지역간의 연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세계의 면모가 더 빠르게 복잡다양해지면서 서로 다른 문명 간에 상호 융합하기도 하고 충격을 주기도 한다. 또 서로 다른 이익집단 간에 상호 의존하기도 하고 마찰도 하며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도 갈수록 많아져 인간과 자연 사이의 모순도 갈수록 첨예해졌다. 인류가 오늘날처럼 많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한 적은 일찍이 없었으며 또 오늘날처럼 많은 컨센서스를 응집시켰던 적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고 협력하여 함께 전진하는 일은 더욱더 전 인류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어떻게 공업사회의 발전이 불러온 각종 사회적 폐단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생활방식을 창조하는가와 어떻게 경제와 사회, 인구와 생태계, 자원과 발전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각국간, 각종 문명간의 복잡한 갈등과 충돌을 유효하게 해결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인류의 공동이익을 가치지향으로 삼아 각종 세계적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세계 각국이 심사숙고하고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현실적 과제들이다. 중국의 ‘화’사상을 이해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때 유익한 실마리를 얻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중국의 평화외교 역사

본 절에서는 중국의 평화외교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개괄하면서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특징들을 귀납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 (1) 고대 중국의 강성과 ‘조공화목(朝貢和睦)’외교정책의 피동성

2000여년에 달하는 강성기 동안 중국은 대부분의 시기에 선린외교, 즉 ‘조공화목’의 피동적 외교정책을 실행했는데, 이 ‘조공화목’의 피동성 외교란 중국 주변의 번속국들이 정기적으로 중국조정에 예물을 바치는 것을 상징으로 하는 일종의 ‘외교제도’였다. 그 특징으로는 중국과 외국 간 교류의 평화성, 호혜성 및 명목상의 불평등성을 들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그 외교정책의 본질적 특징이 피동성에 있었는데, 주변의 소수민족이나 소국이 침입했을 때 중국이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 ‘조공화목’ 외교정책을 취하거나 혹은 이들 소수민족이나 소국이 중국의 지원과 도움을 얻기 위해 주동적으로 조공외교를 실시한 경우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중국 외교상의 조공은 방어적, 비침략적 체제이며 조공의 목적은 중국의 농업문명을 보호하기 위한 평화적 환경의 조성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시황 이래의 만리장성의 구축과 정비, 한대에 시작된 화친(和親)정책 등은 ‘조공화목’ 외교정책의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중국이 장기간에 걸쳐 ‘조공화목’의 피동성 외교를 실시한 이유로는, 첫째, 폐쇄적인 자연환경의 제약, 둘째, 유가의 ‘화’ 사상문화 방면의 영향, 셋째, 중국이 장기간 동안 강성기를 누렸고 주변 지역에서 그에 대적할 만한 대국이나 강국이 출현하지 않았던 것들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중국문제 전문가 페어뱅크는 이러한 ‘평화목린’ 외교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2천년에 달하는 안정된 국제질서를 창조했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서 속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응용했던 관념이 서구의 ‘민족’이나 ‘주권’ 혹은 ‘국가평등’ 등의 관념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 국제질서는 문명모델이자 전략체제로서 고대 아시아의 많은 복잡한 갈등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해결했다.

### (2) 근대 중국의 쇠망과 부득이한 ‘이이제이(以夷制夷)’외교의 실시

중국은 19세기 중엽부터 현저한 쇠망의 길로 접어들는데, 이러한 근대

중국의 쇠망이 부득이하게 ‘이이제이’ 외교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이다. 소위 ‘이이제이’ 외교정책이란 중국이 자신의 쇠약해진 지위로 인해 부득이하게 한 대국과 연합하여 중국에 위협이 더 큰 다른 대국에 대항함으로써 중국이 손실을 비교적 적게 입도록 했던 것이다.

또한,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이 영·불·미 등 서방국가들로 하여금 먼 저 해양이나 고산준령, 광활한 사막 등의 한계를 극복하였음과 중국의 장기적인 쇠국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은 막대한 이익을 위해 전함과 대포로 중국을 침략했고, 중국은 강제적으로 열강들과 교류를 시작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이이제이’의 피동적 외교를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아가 사상·문화적 전통 면에서 중국이 자신보다 강한 나라나 자신과 비등한 국가와 교류를 함에 있어서 전통문화와 2천년 전의 전국시대에 썼던 ‘합중연횡’ 혹은 ‘원교근공’ 등의 외교 전략으로 회귀하게 된 것이다.

‘이이제이’ 외교의 연원은 한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후에 양한과 당도 사용했었다. 그러나 강성했던 고대 중국에서는 ‘조공화목’이라는 기본 외교전략 만으로도 남음이 있었으므로 ‘이이제이’외교는 시종 주도적인 국가 외교 전략이 되지는 못했으며 일종의 보충전술의 역할에 그쳤다.

아편전쟁을 전후하여 당시 중국의 통치자는 여전히 중국을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으로 여겼다. 1860년에 이르러 서구 열강들과 일련의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서야 중국의 황제는 더 이상 서구인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음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서구 열강을 오랑캐의 나라로 보았다. 쇠락의 길로 접어든 청 정부는 부득불 ‘이이제이’ 전술을 다시 쓰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국가정책으로서의 ‘이이제이’ 정책은 사실상 약한 나라의 정책인 것이다.

### (3) 신중국 외교와 평화공존 외교정책

신중국이 건립된 후 마오쩌둥(모택동)은 중국을 평등하게 대하는 세계



모든 국가와 우호관계를 맺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서구열강, 특히 미국의 대중 적대정책으로 인해 신중국은 대소일변도 외교정책을 채택하여 사회주의 진영에 가담했고, 그 결과 서방국가들과의 긴장관계가 고조되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제3세계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맺게 되었다.

1954년에 저우언라이(周恩來) 당시 총리 겸 외교부장이 인도·버마 정부와 공동으로 ‘평화공존’ 5개항 원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국가간의 관계를 처리하는 기본 준칙으로 삼았다. 그 때부터 많은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가 대대적으로 강화되었다. 처음에는 이 원칙들이 중국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국가들과의 관계를 처리하는 데에만 적용되었으나, 그 후 중국정부는 그것을 사회주의 각국과의 관계 및 자본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를 처리하는 데도 운용하였다. 마오쩌둥은 ‘평화공존’ 5개항 원칙이 일시적인 전술적 조치가 아니라 사회주의 신중국의 장기적인 평화외교정책의 기본원칙으로서 각국과의 관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50년대 말에 중·소 관계가 악화되고 게다가 중국 국내의 좌경화 사상이 만연했다. 특히 20세기 60-70년대의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무산계급 국제주의와 세계혁명의 사상이 중국 외교정책의 지도이념이 되어 미·소 양대 패권국가에 대항하는 국제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두 주먹으로 적을 치는’ 외교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를 ‘한 통속(一條線)’이라 부른다. 중국은 이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렀으며 중국의 경제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기본국책으로 실시하면서 국내외의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화공존’ 5개항 원칙이 다시 한 번 중국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선포되어지고 1982년에는 당헌(黨章)에 명기된다. 그 후 20여년간, 특히 냉전 종식 후 변화한 국제환경에 의거하여 외교정책을 조정하여 이데올로기와 각종 차이의 장벽을 넘어 각종 유형의 국가들과 광범위하게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미·일 등 대국과 수교하고 소련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가속화했다. WTO에

가입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15년간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2001년에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다. 이는 중국이 ‘평화공존’의 참여적 외교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두드러진 실례라고 할 수 있다.

#### (4) 외교 ‘신사고’와 ‘평화적 부상(和平崛起)’정책의 추진

20세기 1980년대 말에 덩샤오핑은 국내외 정세, 역사적 경험과 미래의 추세에 근거하여 ‘도광양회(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爲)’의 외교방침을 제시하면서 국내의 일을 잘 처리하고 서방의 봉쇄로 인해 형성된 난관을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개혁개방의 20여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9.5%의 발전 속도를 유지했고, 2002년에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6위를 차지했으며 신속히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개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경제세계화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미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즉, 중국이 현 세계의 후발 대국으로서 평화적으로 부상하는 길이 그것이다. 바로 경제의 글로벌화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조건하에서 독립 자주적으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세계 사회주의 역사상 유래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길이다. 중국의 부상은 평화적인 부상이며 이러한 중국은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건설한 역량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평화적인 부상’의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외교의 신사고를 제시, ‘유소작위(有所作爲: 일정의 역할을 하는)’의 공영성 외교를 실시했다. 중국은 발전도상의 대국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화이부동,’ ‘화위귀(和爲貴)’ 등의 평화철학과 중국인이 고대로부터 추구해 온 ‘천하위공(天下爲公)’의 ‘대동(大同)사회의 가치이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 다. 중국의 ‘평화적인 부상’ 전략과 외교의 신사고

21세기 초반 20년 동안의 국내외 환경은 중국의 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중국과 세계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러한 기회를 주목하고 있다. 중국인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중화민족의 부흥과 창성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이며, 국제사회의 관점에서는 이 기회가 중국의 부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부흥’이 자아발전의 과정을 주로 강조하는 것이라면 ‘부상’은 중국과 기타 국가간의 관계, 중국의 발전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갖는 관심은 주로 세 가지이다. 첫째, 중국이 부상할 것인가의 여부, 둘째,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부상할 것인가, 셋째, 중국의 부상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것인가 등이다. 그 중에서 핵심은 두 번째 문제, 즉 중국이 어떻게 부상하는가이다. 국제사회는 보편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이미 각국이 당면해야 할 기정사실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또 그것의 국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이 부상하는 방식이 중국의 부상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목표보다 더 현실적 의미를 갖는 듯하다.

중국의 발전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중국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므로 비록 중국에 있어서 현대화 건설사업의 목표와 출발점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창성을 쟁취하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지는 대국으로서 타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어떻게 부상할 것인가’라는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주목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해 던지는 대명제로 여겨 해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가 중국의 평화적 부상 전략을 이해하여 협력해 나가는 데 유의할 것이다.

## (1) 평화적인 부상 전략의 제시

### (가) 국제적 배경과 새로운 평화관

냉전종식 후 지금까지 중국의 국내외 환경에는 모두 심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그 총체적인 추세는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건설이라는 중심을 견지하여 사회와 경제의 신속하고도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여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국 부상방식의 길을 걸어가는데 유리하다.

안보환경 면에서는 평화와 발전이 현 시대의 주제이다. 비록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패권주의와 지역분쟁 그리고 국제테러 등의 문제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중국의 주변환경은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발전환경 면에서는 경제 글로벌화의 추세와 또 한 차례의 과학기술 혁명의 물결이 세계경제 발전과 국제협력에 거대한 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제적 경쟁도 더욱 치열하게 하여 세계 각국이 더 많은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게 했다. 중국이 현재 보유한 경제와 기술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많은 차이가 있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종합국력이 제고되며 시장경제 체제도 부단히 개선됨에 따라 중국은 전면적으로 국제사회에 편입되어 국제경쟁과 협력에 참여하게 되었다.

#### (나) 평화적인 부상과 중국의 국익

중국 국익의 첫째, 국가의 안전, 즉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전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발전, 즉 중국 경제와 사회의 전면적이고 조화로 우며 안정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양자는 상호보완적이다.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전제이며 국가의 현대화 건설 사업을 위해 필요조건을 창조한다. 한편 경제건설과 현대화 사업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는데 유리할 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는데도 불가결한 힘의 보장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관건은 국가안전과 발전 사이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데 달려있다. 이 방면에 있어서 중국은 긍정과 부정 두 방향의 깊은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갖고 있다. 먼저 부정적인 면은 국내의 극좌노선의 영향으로 중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국제정세와 국가의 안전이 당면한 위협을 너무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또한 그것을 부적절하게 국내의 정치투쟁과 연계시켰고 그 외에도 계

획경제의 각종 폐단이 중국의 국내경제 건설과 사회발전이 심각한 파괴와 충격을 받게 하였다. 중공 11기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업무중심이 국내 경제로 돌아왔고 20여 년간의 현대화 건설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홍콩과 마카오의 귀속도 실현하여 안전과 발전의 두 방면에서 국가이익을 수호했다.

안보환경이 허락하는 상황 하에서 정신을 집중하여 건설을 하는 것,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근본 이익이다. 평화적인 부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중국은 무력 확장과 국제적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 (다) 평화적인 부상은 세계 인민의 공동이익에 부합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이 부상의 방식을 선택할 때 중국 자신의 근본적인 이익에서 출발해야 할 뿐 아니라 세계인민의 공동이익도 근거로 삼아야 한다.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이 선택한 평화적 부상의 길은 국내의 현대화 건설에 정력을 집중할 것이므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 문제에 모두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세계인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 (2) 평화적인 부상 전략과 외교 신사고

중공 16차 당 대회에서는 전면적 소강사회의 건설, 조국통일 대업의 추진, 세계평화의 유지와 공동발전의 촉진 등 중국이 21세기 초반 20년간의 전략적 기회에 실현해야 할 3대 임무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이 평화적 부상 전략을 제시하는 지도이념이자 기본 근거로, 중국의 독립자주적 평화 외교정책에도 새로운 함의를 부여했다.

첫째, 주변국들에 대해 ‘이웃을 파트너로 하고 이웃과 선린을 도모할 것(以隣爲伴, 與隣爲善)’과 ‘목린, 부린, 안린’의 방침을 제시하여 중국의

전통적인 목린외교를 풍부히 발전시켰다.

중국은 ‘평화적인 부상’을 추구하는 전략 아래 주변 국가들의 ‘중국위협론’을 불식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주변국들에 대해 파트너 관계와 선린관계, 그리고 목린(睦隣), 부린(富隣), 안린(安隣)의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목린정책에서 발전한 새로운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중국 자체의 발전과 그것의 인접국에 대한 영향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간주함으로써 개방성과 협력정신을 가미시켰고, 둘째, ‘공동안보’와 ‘공동발전’을 ‘안린’ ‘부린’이란 구체적 방침으로 전환시켜 목린정책의 기초로 삼은 것 등이다.

둘째, 신사고와 신안전관을 힘써 창도하여 평화적인 방식으로 외부위협을 해소하고 국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방식과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중국의 신안전관은 이미 정책적 실천으로 전환되어 양호한 효과를 거두었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 간에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3자회담과 6자회담을 성사시켰다.

셋째, 새로운 국제협력의 이념을 적극 주창했다. 외부의 압력에 대해 점차 경직된 관념에서 출발하여 간단하고 어설피게 대응하는 것을 지양하고 개방적 태도, 포용하는 심리 및 이성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주권관, 인권관 및 우환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중국의 주권관은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세계관, 발전관과 결합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국제협력 이념은 더욱 많은 보편적인 가치관을 부여한 인권관과 결합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민족 우환의식은 더욱 이성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넷째, 적극적으로 새로운 국제관계 이념을 모색하여 세계체제의 다극화를 추진하여 세계인민의 공동이익을 수호한다. 평화적인 부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국제문제에서 정책을 조정하고 이념을 갱신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정의와 관련된 중대문제들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강화하여 국제무대에서 평화적이고 공정하며 안정되고

책임을 지는 이미지를 수립했다.

다섯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정치경제 신질서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것은 어렵고 장기적인 과업으로, 중국과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 (3) 중국의 평화적 부상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중국이 평화적인 부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각 방면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는 주로 아래의 세 가지 방면에서 체현된다.

첫째, 중국은 아직 통일을 완성하지 못했고, ‘대만독립’의 분열세력이 양안 간에 부단히 위기상황을 만드는 상황 하에서 평화적인 부상을 해야 한다. 중국은 결코 그 어떤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가장 큰 노력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과 자신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대만 독립의 분열세력을 방임하면 중국의 평화통일 사업을 파괴하게 될 뿐 아니라 중국이 순조롭게 평화적인 부상을 하는 것도 방해하게 되고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여 세계 각국의 공동이익에 위배된다.

둘째, 중국은 여전히 발전수준이 매우 낮고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거대한 인구부담을 짊어진 상황 하에서 부상의 역정을 개시하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영향력이 날로 증강하는 지역대국이지만 앞으로 장시간 동안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기도 할 것이다. 이 이중적 특징은 중국이 세계인민의 공동이익을 수호할 책임을 지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국제 의무를 맡아야 할 것을 결정지었다. 중국의 세계에 대한 공헌은 무엇보다 먼저 세계 5분의 1의 인구가 빈곤을 탈피하여 점차 소강생활을 누리는 데서 실현된다. 이 방면에서 중국은 세계 각국의 이해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자신의 발전노선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많은 오해와 압력에 직면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직·

간접적으로 중국 내부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한다. 중국이 순조롭게 평화적인 부상을 하게 하려면 중국이 개혁개방을 계속 확대하고 국제사회로 편입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중국의 사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필요도 있다. 평등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중국의 물질문명·정신문명 그리고 정치문명의 부단한 진보를 촉진해야 한다.

## 라. 동북아 평화협력 문화의 구축

제2차 세계대전 후 20세기 말까지 동북아 각국의 문화는 장기간에 걸쳐 상호 단절되고 각자 서방세계에 경도된 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은 차례로 개방형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각자 독특한 ‘흡수’와 ‘적응’의 특징을 지닌 개방형 문화를 형성했으며 그로 인해 동북아 경제협력의 문화방면에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동북아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역내의 경제적 연계가 강화된 것도 동북아 문화의 발전 및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 단절되고 배척상태에 있던 동북아 문화가 민족과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넘어 점차 접근하면서 서로 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과 포용의 의의는 그것이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에 문화적 자양분과 기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중·한·일 삼국은 모두 유교문화권과 한자문화권에 속한다. 비록 그것들이 중국에서 발원했지만 한국과 일본에 전해진 후 그들의 고유문화라는 나무에 각자 민족의 독자성을 지닌 꽃을 피웠다. 중·한·일 삼국은 유구한 문화교류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문화적 유대를 지니고 있어서 ‘화이부동’ 및 ‘상생(相生)’의 이념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동북아 문화를 재건하기에 유리하다.

과거 반세기 동안 중·한·일 삼국은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기적을 번갈아 이뤄 왔으나 동북아의 세계화와 지역집단화에 있어서는 EU나 NAFTA보다 뒤쳐졌다. 또한 중·한·일 삼국은 아직 냉전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영토분쟁과 역사분쟁이 상존하고 있다. 비록 무역과 투자는 확대되고 있지만 동북아는 세계의 주요지역들 가운데서 유일한 지역연합의 공백지대이다. 이 세 나라의 학자, 국민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를 쌓는 일일 것이다.

동북아국가들은 그 동안 정치와 종교,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서구문명의 성과를 적잖게 흡수했고, 거기에서 얻은 수확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각자의 민족문화와 동북아문화를 대체할 수 없다. 동북아문화는 개방과 동시에 반드시 회귀되어야 하고 진흥되어야 한다. 동북아문화가 부흥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면 동북아의 사상 및 문화적 판도는 틀림없이 서구문명을 뒤따라가며 모방하는 대신 창조적이고 개방적이며 동서 문화를 융합시킨 동북아문화의 회귀와 승화로 전환하여 눈부시고 다채로운 21세기의 특색을 지닌 문화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중·한·일 삼국은 협력을 강화하여 동북아문화에 대한 연구를 전개해야 하며 거기에는 고대 문화유산의 발굴, 동북아의 특색을 지닌 문화, 언어 및 기타 정신적, 물질적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 동북아에 관한 각종 지식정보를 전파시켜 역내 국민들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기초위에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역내 각국의 공동발전을 이끌어내어 ‘동북아 의식’을 형성한다면 그 기초위에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 4. 아시아의 평화와 일본의 역할<sup>133</sup>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빈도는 일본인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중국인이다. 저녁때쯤 서울 중심부에 있는 갈비집에 가보면, 서울시민들 옆에서 일본인, 중국인 관광객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즐거운 듯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 길가에서도 동북아시아 서민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교류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에는 서울에서 중국 관광객은 거의 보지 못했다. 지금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서로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되었다. 일본 도쿄에는 역간판이나 안내문에 일본어 이외에도 영어, 중국어, 한글이 쓰여져 있다. 유명한 관광지에 가보면 중국어와 한글로 된 팸플릿이 준비되어 있다.

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은 국가간 인적교류가 이상적인 모습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은 제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각각이 그리는 나라의 안정과 평화의 목표는 다르다. 경제의 상호의존이 지극히 큰 현대 동북아시아의 3개국은 어떻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협력과 평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의 대아시아 외교의 성격과 아시아의 평화에 대응하는 일본의 역할에 대한 고찰은 일본의 평화인식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 가. 테러방지를 위한 일본의 외교적 노력

2001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를 계기로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

---

<sup>133</sup> 이 글은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전문가 워크숍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발표자의 동의를 얻어 수록한 것이다. 야마모토 유우지, “아시아의 평화와 일본의 역할,”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전문가 워크숍』 (2004. 9. 21).

한 적 없는 곤란한 문제에 직면했다. 테러리스트가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고 전장이 아닌 평화스러운 대도시에서 무차별적으로 테러를 일으켜 어른·아이의 구별 없이 살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특정한 나라의 국민뿐만이 아니다.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항공기 테러에서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다수가 희생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금융이나 무역 등 세계경제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9·11 이후, 테러는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에서는 미국인이나 미국기업을 노린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호주의 대사관을 노렸다고 보여지는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2년 전에는 발리섬에서의 폭탄 테러로 호주인이나 서구,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관광객이 다수 사상했다. 러시아에서는 체첸 독립투쟁이 무차별 테러로 발전하고, 북오세치아의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는 인질구출을 위해 러시아 특수부대가 돌입했을 때 범인 그룹과 총격전이 벌어지고, 장치해 있었던 수제폭탄도 폭발하여 300명이상이 사망했다. 대부분은 어린 아이였다. 테러는 수도 모스크바에서도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테러에 말려드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각국에서 테러와의 싸움이 외교의 큰 과제가 되었다. 일본도 테러와의 전쟁을 외교의 가장 큰 주안점으로 삼고 있지만, 일본의 역할은 민생부문과 경제원조를 통해서 테러리스트가 있던 나라가 안정한 체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9·11테러 후,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부흥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영국군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을 때, 난민구호의 목적으로 이 지역에 자위대의 함정과 유송기를 파견하고 난민에게 보내는 텐트나 모포를 지원했다. 신 정권이 탄생한 후에는 도로나 학교건설을 위한 자금을 제공했다. 비정부조직(NGO)의 활동도 과거에 예가 없을 만큼 활발해져서 탈레반에 의해 폭파된 바미안의 석불복원에 학자 그룹이 협력하고 있다.

도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부흥 회의도 있었다. 민생이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하면 테러리스트가 등장하는 원인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칼자이정권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라크를 향한 재건 지원은 더욱 본격적인 것이 되었다. 고이즈미 수상은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시작했을 때 재빨리 지지를 표명했다. 국회도 「이라크 특별조치법」을 가결하고, 이라크에서의 전투 상태가 안정된 시점에 전투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해서 재건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위대로서는 사실상 전시 지역으로의 첫 해외 파견이었다. 파견 기간은 2003년 12월 18일부터 2004년 12월 14일까지였다.

이라크에는 육상, 항공, 해상의 각 자위대가 파견되어 있다. 육상자위대는 남부 사마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의료, 급수, 공공시설의 건설 등 인도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인도물자나 미국·영국군의 물자를 수송하지만, 무기, 탄약은 나르지 않는다. 해상자위대는 페르시아만의 이라크 움카슬과 퀘토지역에서 육상 부대의 파견이나 보급 활동을 한다. 이라크 부흥을 위한 자금제공은 2004년분으로 15억 달러, 학교나 병원의 건설, 또 경찰차를 600대 이상 기부하고 있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에는 「이라크 인도지원 특별조치법」이 버팀목이 되고 있다.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은 “이라크 재건을 맞아 우리나라가 주체적,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결의 1483호와 1511호를 따르고, 인도부흥 지원 활동과 안전확보 지원 활동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자위대가 파견되는 지역은 ‘전투 행위가 행해지지 않고, 그곳에서 전개되는 활동기간 동안 전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받는 지역’으로, 현지에서 자위대의 행동도 ‘무력에 의한 위협 또 무력행사를 행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파견 결정에 큰 걸림돌이 된 것은, 과연 이라크에 전투 행위가 없는 지역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과, 자위대의 무장이 어디까지 인정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였다. 일본정부는 몇 번이고 현지조사를 해서 남부 사마와로의 파견을 정하고, 자위대의 휴대 무기는 ‘단총, 소총, 기관총, 무

반동포, 개인휴대의 대전차포'가 되었다. 캄보디아에서 평화유지 활동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지원 활동은 자위대의 무장이 소화기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라크에서는 확실하게 무장을 강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라크에서의 자위대의 활동을 제한하고, 시내순회나 경비 등의 위험한 임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자위대 내에서 사망자는 없다. 고이즈미 정권의 생각은 절대로 자위대원의 사망자를 내지 않는 것이며, 만약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다면, 여론은 일제히 이라크에서의 철군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위대의 공헌도 한정되어 있다. 육상자위대의 임무는 시민에게 공급할 수도시설의 건설이지만, 사마와에 있는 주둔 지역에서 밖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어, “안전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다. 대신에 사마와 시내의 경비는 네덜란드군이 담당하고 있어 무장 세력의 공격에 의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전수방위를 방침으로 하는 일본국 헌법을 위반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일본이 자주방위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테러와의 싸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핵무기나 핵물질, 생물·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무기가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결속해서 관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지역만을 보더라도 북한의 핵문제가 이 지역의 불안정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핵의 비확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되풀이되어 논의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최근 문제가 된 한국이 과거에 실시한 핵물질 관련 실험에 대해서 논하겠다.

1980년대와 2000년에 실시한 실험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견해는, 실험은 소수의 과학자가 독자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국가가 관여한 핵개발 계

획이 아니라는 점, 분리 혹은 농축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지극히 미량인 점,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누락은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전체적으로 IAEA와의 보상조치협정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신문이나 텔레비전은 외신 미디어가 과잉반응을 하고 있다든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과거 실험이 왜 이정도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 한국인들은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원자력발전을 위한 핵연료는 모두 수입하고, 국내에서는 재처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핵물질은 아무리 미량이어도 실험을 행하는 단계에서 IAEA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자세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다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IAEA가 가장 주력해서 감시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나 연구소 등 핵시설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핵관련 물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IAEA는 년 예산의 25-30%를 일본의 사찰에 투입해서 자세하고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아시아 전체를 말려들게 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전후에는 거대한 경제 대국이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보면 일본은 충분히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가진 나라이며, 게다가 핵물질이나 관련 기술이 위험한 각국이나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IAEA는 일본의 핵 활동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본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통해서 학자·연구자가 원자력에 관련된 연구 대상을 확대해 왔다. 일본인의 대부분은 일본은 세계에서 단 하나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나라이며 앞으로도 절대로 핵병기를 가질 일은 없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IAEA의 엄격한 사찰에 대하여 항상 투명성 있는 회답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에도 해당한다. 한국이 행하는 것은 핵의 평화적 이용뿐이라고 하는 점에 이해는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IAEA에 충분

한 정보공개를 하고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일한양국과는 사정이 다르지만,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향후 핵군축의 길을 가기를 희망한다.

## 나. 역사는쟁은 상호이해를 위해서

일본은 한국, 그리고 중국에게 과거사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일본은 한국을 35년에 걸쳐 식민지 지배하고, 중국을 침략해서 민간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살상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근대사를 이야기할 때 일본은 반드시 가해자로서 그려진다.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직접 모르는 나로서도, 일본이 아시아의 이웃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준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한국과 중국에 계속 관심을 두고 싶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어떻게 쌓아 갈 것인가, 거기에는 우선 서로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다음 단계에서 쌍방이 공통적인 역사인식을 가지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시간을 들여 검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실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그것은 상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이해를 깊게 하고 미래를 향한 협력관계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현재 역사는쟁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다. 내년 3월에는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작업이 시작되므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교과서는 국정이 아니라 몇 개의 출판사가 교과서를 편집해서 문부과학성에 제출하고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정을 받는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서의 집필자나 편집자와 직접 만나고, 내용의 수정을 지시하고,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만이 학교 교재로서 채택

된다. 현재,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역사 교과서는 8개 출판사가 편찬한 8 종류다.

3년 전의 교과서검정에서는 후소샤가 편찬한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일본의 신화를 역사적 사실처럼 기술한 점, 특히 근대사 속에서 일본의 아시아 진출에 대해서는 침략이 구미 제국의 식민지였던 각 국의 민중에 대하여 새로운 희망을 주고 독립 운동의 기운을 주었다라고 기술한 점, 한국에 대한 식민지통치에 대해서는 일본은 철도를 부설해 학교를 세우는 등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문부과학성은 이 교과서에 대해서 대폭적인 수정을 지시했으므로, 지금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내용을 수정해서 검정에 합격한 것이다. 나는 3년 전에 시판된 교과서의 초안을 읽어 보았지만, 이 교과서는 국제감각이 없고 전쟁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한심한 책이라고 느꼈다. 교과서 집필자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일본인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긍지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나치게 강해 역사적 사실도 상당히 틀리고 자기들 형편에 맞추어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단지, 일본에서도 이러한 자기주장이 강한 교과서가 출판된 것은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현상이다. 2001년 당시, 한국 정부는 후소샤의 교과서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이렇게 한 쪽으로 치우친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망하고, 교과서 기술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상세하게 지적했다. 더욱이 수정 내용이 불만스럽다고 해서 당시의 한국 일본주재 대사를 소환했다. 한국 정부는 교과서문제를 정치문제, 외교문제화 한 것이다. 한일의 정치, 경제 회의가 잇달아 중지되어 지방자치제도 일본측과의 교류 행사를 그만 두고 중학생이나 고교생의 상호방문 행사도 중지되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 대응에 대해 무척 화를 냈다고는 하지만, 일본과의 각종교류까지 그만둔 것은 과잉반응이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앞으로는 학술 수준의 토론회를 통해서 시간을 들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내년 3월에 다시 일본 교과서의 검정이 있고, 한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



는 것은 이해하지만 교류 중단 등 보복 조치 같은 것은 하지 않았으면 싶고, 이러한 행위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득이 되지 않는다. 한편, 후소샤의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전체 중학교의 0.039%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7종류의 역사교과서가 어떠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적어도 후소샤의 교과서보다 우경화, 왜곡화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역사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일본과 한국, 일본과 중국이라고 하는 도식으로 일어났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구려를 둘러싼 역사논쟁이 일어났다. 서울에 사는 일본인으로서, 아마 처음으로 일어난 한중의 논쟁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고구려라는 1500년부터 2000년이나 이전에 존재한 국가에 대해서 왜 논쟁이 일어난 것인지 잘 알지 못했고, 한국 친구에게 물어봐도 ‘고구려는 현재의 한국 그리고, 한민족의 뿌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없었다. 나는 한국 신문에서 7월부터 8월에 나온 고구려에 관한 기사를 많이 읽어 보고, 연구자나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삼국사기』의 고구려 제왕의 일대기도 일본어판으로 읽어 보았다. 그 결과, 고구려가 한반도에 출현한 나라 가운데 최초로 국가로서의 통치 체제나 법제도를 갖추고, 후세의 한반도의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 고구려는 한반도에 출현한 국가 중에서 최대의 영토를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당시의 수나 당과 같은 중국의 나라와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 한국인에게 큰 긍지가 되는 것도 알았다.

한편, 중국 정부는 고구려 문제에 관해서는 대부분 공식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중국 외무성의 홈페이지에서 한국 역사를 소개한 부분이 삭제된 것, 중국의 신화사나 인민일보가 ‘고구려는 당시의 중국의 지방 정권’ ‘고구려는 역대 중국 왕조와 예속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보도한 것은 한국측의 보도를 통해 알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매우 궁금하다. 중국의 우다웨이 외무차관이 8월 하순에 한국을 방문해, 외교통상부 고관과 회담하고 고구려 논쟁을 정치 문제화하지 않기로 합의

했다. 한국 측의 발표에 의하면, 양국은 역사문제로 인해 우호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학술 수준으로 문제의 해결을 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양국이 현명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고구려가 한중 어느 나라의 영토였다고 하는 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논쟁의 대상이 되겠지만, 한중 양국의 무역,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관광객과 유학생의 증가를 생각하면, 지금은 일단 사태의 수습을 꾀하고 앞으로도 교류, 협력을 진전시킨다고 하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번의 고구려 문제는 아시아 각국에서 일어나는 역사논쟁에 대해 1개의 힌트를 주고 있다. 최초로 이야기한 것 같이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목적은 상호의 이해를 깊게 하고, 미래를 향해서 협력 관계를 쌓는 것이어야 한다. 최근 나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은 뉴스를 보았다. 중국에서 열린 축구·아시아 컵에서 중국의 많은 젊은이가 일본팀을 매도하고, 일본인 팬을 향해서 일본의 과거 역사를 비난하는 듯한 욕을 되풀이해 말했다는 사건이다. 아무리 중국팀을 응원하고 싶어도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일본 선수는 어디에 가도 매도되어 올림픽을 보러 가는 일본인 팬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80년대까지는 서울에서 축구나 복싱 시합이 있을 때마다 한국 팬이 얼마 되지 않는 일본 팬을 매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현재는 그런 상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일 양국은 각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고 월드컵이라고 하는 큰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며, 동반자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시합에서는 응원하는 사람도 페어플레이를 추구한다. 역사를 둘러싼 논의가 스포츠 응원과 같지 않은 것은 물론이지만, 논의할 때에는 상대측 주장을 잘 들은 후에 작은 부분이라도 공통 인식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페어플레이를 닮았다.

일본과 한국의 약 40여 학자가 공동역사연구를 하고 있고, 2년 후에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한다. 그 내용은 테마별로 한일 쌍방 학자의 논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한일 전문가의 해석이 어

떻게 다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 이 작업은 이미 7년이 경과하고, 당초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는 중단될 것 같았지만 드디어 공동 연구를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 사실은 상호이해와 협력을 진전시킬 목적에서 역사에 대한 논의 혹은 논쟁을 할 경우 끈질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 다. 일본 외교의 변천과 과제

한 나라의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함께 변화되어 가지만 일본의 경우에 과거 약 10년간의 변화를 보면, 일본이 아시아 이웃나라와의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오면서도 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해명하는 열쇠를 찾아볼 수 있다. 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생각할 때 일본 외교정책의 변화를 알 필요가 있어 그 흐름을 요약한다.

1993년 7월의 총선거를 계기로 일본신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권이 탄생하고, 자민당이 39년 만에 집권여당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에서부터 일본의 정치, 외교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 후 4년간 특정정당 단독으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어 세 개의 연합정권이 되었다. 특히 40년 이상 여·야당으로 대립 관계에 있었던 자민당과 사회당이 연립 정권을 조직, 사회당의 무라야마 정권이 탄생함으로 일본의 정계는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실상의 여당이 되어버렸다. 무라야마 정권은 사회복지를 충실하게 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정책을 실행했지만, 한편으로는 연립 여당의 파트너였던 자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외교정책은 서서히 현실노선으로 전환했다. 94년 7월의 사회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자위대가 합헌이라고 인정하고, 미일안보조약을 견지하고 일장기와 기미가요를 일본의 국기와 국가로 인정했다. 또 원자력발전의 추진도 당론으로 정했다. 사회당은 야당시절에는 이들 현안에 모두 반대하며 일본의 내셔널리즘 강화를 막고 있었지만, 자민당의 지원이 없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잇따라

정책을 바꾸었다. 현재 고이즈미 정권이 진행시키고 있는 정책, 특히 우경화라고 여겨지고 있는 정책은 사회당의 무라야마 정권시대에 하나의 기원이 있다. 한편, 무라야마 수상은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와의 협력 증진을 진전시켰다. 무라야마 수상이 95년 8월 15일에 발표한 아시아 이웃 나라에 대한 호소인「무라야마 담화」는 현재에도 일본정부나 많은 정치가들이 한중 양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자주 인용된다. 다소 길어지지만, 중요한 문헌이므로 그 요점을 소개한다.

“평화스럽고 부유한 일본이 된 지금, 우리들은 자칫하면 이 평화의 귀중함, 고마움을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 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이웃나라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나라와 깊은 이해와 신뢰에 근거한 관계를 가꾸어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 생각에 근거하여 특히 근현대에 있어서 일본과 이웃 아시아 나라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연구를 지원하고, 각국과 교류의 비약적인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기둥으로 한 평화우호교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대응하고 있는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각국과의 신뢰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지금, 전후 50주년의 고비에 즈음하여, 우리들이 명기해야 할 것은 지나간 일을 연구해서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미래를 바라보고,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에의 길을 그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한 때, 잘못된 국책으로 인해 전쟁으로의 길을 걸어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리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국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잘못을 미래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의심할 도리도 없는 이 역사의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여기에 다시금 통절한 반성의 뜻을 나타내고 마음속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하겠습니다. 또, 이 역사가 초래한 국내의 모든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바칩니다.

패전의 날로부터 50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나라는 깊은 반성을 하며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을 배제하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협조를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 평화의 이념과 민주주의를 널리 퍼뜨려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는 유일한 피폭국으로서의 체험을 근거로 핵병기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 등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속죄가 되고 희생된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평화를 추구한다는 담화를 발표한 무라야마 수상이 한편으로는 미일안보의 견지를 확인하고, 미래의 자위대 해외파견에의 길을 연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단, 당시의 무라야마 연립정권에서는 자민당이 정국·정책의 대부분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민당이 사회당이 이상으로 하는 과거사의 반성과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이라는 정신을 무라야마 담화에서 인정하고,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자민당 우파의 정책을 확대한다고 하는 결과가 된 것 같다. 그 후, 자민당이 총선거에서 승리해 하시모토 정권이 탄생하고, 이후 7년간 외교정책은 서서히 변화되어 간다. 우파체질이 강한 고이즈미 수상에 의해 그것은 한층 가속화되어 가지만, 외면적인 요인으로는 9·11테러에 의한 중동정세의 변화와 북한에 의한 핵 문제, 납치 문제가 크다.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이것은 전후 일본이 안고 있는 큰 과제이며, 1990년대 초에는 국교정상화 교섭도 8회 있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계속되고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공작기관에 의한 일본인의 납치가 밝혀지자 북한은 일본에 있어서 사상이나 체제가 다른 이질적인 나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못 본 체할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많은 일본 국민들이 가지게 되었다.

2002년 9월, 그리고 올해 5월에 2회에 걸쳐 고이즈미 수상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고 북일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납치된 일본인을 모두 귀국시키고, 핵무기 개발도 중지하도록 요구했고, 이것이 실현되면 관계 정상화에 돌입, 국교 정상화가 되는 시점에서 경제지원을 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체제유지를 위한 핵개발을 쉽게 단념할 생각이 없고, 납치를 전면적으로 해명한다면 일본이나 한국으로의 스파이 침입 활동을 밝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핵문제는 6개국 협의를 통해 해결을 꾀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국인 중국과 남북교류가 활발해져 있는 한국의 역할이 크다. 또 북한이 경제를 재건하고 미사일 등 무기수출에 의지하지 않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탈북자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핵포기를 요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경제개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주변국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서 한 번 더 일본 외교, 안보 현상을 요약해 본다. 우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 공헌한다. 특히 고이즈미 수상이 미국의 이라크 파병을 지지하고 미국의 요청을 받아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견한 것으로 미일관계는 한층 강화되었다. 유엔에 대하여도 한층 더 공헌할 생각이며, 유엔이 주도하는 경제, 문화, 환경 등 많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도 유엔 안보리결의를 받아서 실행되었다. 장래에는 안보리상임이사국을 목표로 한다는 의사도 명확히 표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본이 유엔에 많은 기금을 내고 있는 이상 유엔 활동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이다. 세 번째가 국방의 강화로, 미국에게만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보위성을 보유해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핵개발이라고 하는 사태로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위 구상에도 참가했다. 일본이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웃나라인 한국과 중국이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불안정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으로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목표로 한다면 아시아 이웃나라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에서는 헌법개정의 여론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견해를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 현 세대는 헌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워 온 것만큼 개정 이론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일본국 헌법 9조는 ‘국권이 발동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영구히 포기한다'고, '전항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자위대라고 하는 세계유수의 장비를 가지는 군대가 거의 반세기동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헌법의 규정과 어떻게 정합성을 가지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로 복잡하다. 만약 헌법개정을 한다면 자위대의 존재와 활동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와 같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현실과도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 라. 동북아 교류의 필요성

일본인이 아시아의 이웃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후반부터라고 생각된다. 198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에서 보도되는 한국과 중국의 뉴스는 정치이야기 뿐이었다. 당시의 일본인은 한국의 군사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뉴스만을 듣고 있었다. 한국인들이 평소에 무엇을 먹고 어떤 일을 하고 휴일에는 어떤 레저활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서민의 생활이 일본의 미디어에 소개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직전부터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문화대혁명 후 정치투쟁만이 보도되었고, 중국의 경제나 서민 생활, 사고방식까지 소개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일 것이다. 일본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것을 계기로, 일본인이 보통의 중국인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미디어의 중국보도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동북아시아 3국은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만큼, 현재 교류가 왕성해졌다. 관광객의 수, 무역액, 투자액은 물론, 문화의 상호교류도 활발해졌다. 한국드라마 '겨울연가'는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이고, 중국고전악기를 연주하는 젊은 여성들의 악단인 '십이악방'의 콘서트는 어디에 가더라도 만원이다. 일본의 NHK가 방송하고 있는 외국어 강좌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영어이지만, 교재의 판매부수는 중국어나 한국어

가 불어, 독일어보다 많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교류까지 포함시킨 교류안에서 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행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는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또 일본, 중국, 한국이 경제발전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지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전되면 정치, 외교 분야에서 대립이 나올 것이다. 역사인식, 영토문제, 그리고 각국의 안보, 국방에 대한 문제에서는 항상 불씨가 존재하고 있다. 이번에는 일본의 외교 안보를 중심테마로 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쌓는 것은 결국 국민들끼리의 교류라고 생각한다. 3개 나라의 국민이 상대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속에서 상대의 언어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국가와 국가의 이해가 대립하더라도 서로 이해를 하고 반드시 대화로 해결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고 있다.



# IV

## 유럽 평화문화의 시사점 : 독일의 탈근대적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 1. 유럽의 평화개념

인류 역사상 (비교적) 평화로웠던 것으로 평가되는 시대로는 “Pax Romana”와 “Vienna 체제”(1814~1913, Concert Of Europe Era)의 두 번 정도 있었다. 그러나 “Pax Romana”는 군사력, 즉 무력적 평정에 의해 강요된 국제체제로서, 특히 로마에 대한 전쟁이 억제된 상태에서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Vienna 체제” 역시 단지 유럽 내 여러 국가들의 군주들 및 상류층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강요한 체제에 불과한 것이었다.

유럽에서 평화 개념의 내용은 사회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라틴어 pax는 원래 모든 생물들이 신과 화합하는 최종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학적 개념으로서 라틴어 pax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사회과학적 평화(friede) 개념이 형성되었다. 이 개념 가운데 우선 공공의 평안과 안전을 의미하는 pax civilis 용어는 근대국가가 형성됨에 따라 국가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평화 형태를 의미한다. 그 후 국가간 전쟁이 빈발함에 따라 유럽에서의 평화개념은 국가 사이에 폭력 행사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휴전상태를 가리키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간 휴전상태는 국민국가간 조약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평화상태가 되기 쉽다. 따라서 독일 등 유럽에서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이성에 의거하는 영구평화론이 등장한다. 이러한 영구평화론에는 인류의 발전을 신봉하는 발전적 역사관이 자리 잡고 있다. 이성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국가간 전쟁도 인간 이성의 발현으로 회피될 수 있는 것으로 독일 관념철학자들은 생각하였다.<sup>134</sup> 이성이 발현되어 인간의 제 권리가 확보된 상태가

---

<sup>134</sup> 이러한 영구평화론은 근대유럽에 와서 명백한 형태로 나타난다. 쾰리어나 J.J.루소 등 여러 사람이 이러한 세계평화의 달성과 유지에 관해서 말해 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칸트의 평화론이다. 그는 《영구평화를 위하여 : Zum ewigen Frieden》(1795)라는 책에서 전쟁의 되풀이가 인류를 멸망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와 같은 참극을 막기 위해서는

평화 상태인 반면, 전쟁 상황은 인간권리가 침해된 인간생활의 일시적인 상태로 간주하였다.<sup>135</sup>

이러한 평화개념 발전에 의거하여 독일어 평화(Friede)는 사랑과 관용이 넘치는 상태로서 인간의 공동체적 생활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된다. 이러한 평화개념은 폭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게 되었다.<sup>136</sup> 즉 최근 유럽에서의 평화 개념은 국가간 전쟁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말 뿐만 아니라 사회내부에 자유, 정의, 행복 등이 넘치는 상태를 지칭하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다.<sup>137</sup>

따라서 유럽사회에서 평화란 보통 인간집단간에 전쟁이나 폭력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다. 평화는 정치적 성격만을 지닌 개념이 아니라 유럽사회의 가치합리적으로 자리 잡은 중요한 문화적 구성요인이다. 문화는 모든 사회기계에 기본적으로 체화되어 있는 가치정향성, 생활양식 및 정치·경제·과학기술적 체제의 물적 논리에 대응하는 이념적 규범체계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는 사회의 심층구조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 조정을 위한 핵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제도, 관습, 법칙, 규범 등 문화적 양태에 상응하는 질서정연한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체현되어 있는 가치정

---

각국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여 전쟁을 막는 국제조직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전쟁의 불씨가 되는 비밀조약 및 상비군 등의 폐지와, 폭력에 의한 타국에의 간섭 금지 등을 역설하고, 영구평화를 위한 세계공민법의 확립을 주장하였다.

<sup>135</sup> Fichte, J., *Die bestimmung des Menschen* (1800), SW Bd.2 (1845), p. 307.

<sup>136</sup> *Geschichte Grundbegriff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Brunner, Bd. 2, Otto(Hg.), Stuttgart: Klett-Cotta (1992), p. 543.

<sup>137</sup> 히브리(Hebrew)인들의 언어인 Shalom은 “평화”를 의미한다. 이 경우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하느님 아래에서 통일되어 완전해지고 또한 안정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러시아 언어에서 “평화”를 뜻하는 Mir라는 언어의 의미도 “전체의 통일성”을 또한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중국어에 있어서의 “화평”(和平)의 경우는 “부드럽고 온순하며 고요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좁은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이며, “넓은 의미”로는 “개인, 사회, 국가, 그리고 자연의 모든 사물들이 평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한다.

향성은 부지불식간에 문화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정향성은 한 사회의 집단적 문화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인이다. 정치·과학기술·사회경제적 하위체계 이외에도 일반 도덕률, 규범, 관습, 가치관 등 문화로서 정의되는 사회의 이념적 하위체계도 논의되어야 한다.

유럽은 과거 나폴레옹전쟁, 제 1차 세계대전, 제 2차 세계대전 등의 전쟁 참화를 겪으면서 반전의식은 물론, 전쟁방지를 위한 국제적 연건 형성 및 국내적 제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평화문화 연구도 상당 정도 추진하였다. 그러나 동서냉전 종식 후 유럽은 유럽대륙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저하되면서 전쟁에 대비되는 평화문제 연구에 매달리기 보다는 각종 사회적 갈등이 빚어내는 폭력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특히 근대성(das Moderne)의 위기로서 복지국가 위기, 구조적 실업문제, 빈부격차, 생태위기, 성문제 등이 사회적 위기로서 폭발할 경우 빚어내는 폭력적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양한 제도, 규범, 가치 등의 연구가 평화문화 연구로서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패전이후 서독에서 진행된 정치교육은 탈근대적 방식을 통해 평화문화를 형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정치교육은 교육이라는 실천적 노력을 통해서 평화문화를 정착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적극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2. 평화교육으로서의 독일정치교육

### 가.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내용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서독은 히틀러 나치 정권의 도래와 이에 따른 전쟁은 무엇보다도 독일국민들의 민주주의 및 평화 의식의 결여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독국민들을 갈등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치교육은 독일인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사회주의의 막강한 영향력을 제거하고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민주적·평화적 생활양식을 창출하는 평화문화를 창출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하였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시민들에게 정치·사회적 상황을 바르게 인식·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발전을 촉진시키거나 가능하게 하는 의식, 행동방식, 태도 등을 형성·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 정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마다 다르나 기본방향은 유사하다. 예컨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교육부의 정치교육 기본방향<sup>138</sup>은 전통적인 사상과 가치체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sup>139</sup> 즉 독일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의 기본목표는 시민들이 사회적 생활환경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치교육은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재적 지식의 획득, 사회에 대한 인지능력 배양, 근거를 가진 판단력 제고, 행동에 따른 결과 평가, 책임감 있는 결정과 행동의 수행 등에 두고 있다.<sup>140</sup>

이러한 목표에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교육은 정치기구, 정치과정에 관한 지식, 헌법상의 국가관, 정치·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식 등을 인식하도록 교육시킨다.<sup>141</sup> 또한 독일 정치교육은 시민들의 정치의식 형성을 촉진·저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실시하는 한편, 수업의 주제는 구체적·실재적인 경험 및 관심과 더불어 미래의 생활환경을 전제로 선택되어진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인간의 존엄성, 인권,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 연방

---

<sup>138</sup>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정치교육지침은 한국교육개발원, 『독일의 교육통합』, p. 81~122에 수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교육정책이 주마다 상이성을 지니고 있으나 상세한 비교분석은 다음으로 미루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정치교육지침에 의거하여 독일학교 정치교육의 목표를 분석한다.

<sup>139</sup> 한국교육개발원, 『독일의 교육통합』, p. 82.

<sup>140</sup> 위의 책, p. 83.

<sup>141</sup> 위의 책, p. 88.

의 통치구조 등의 기본법의 기본원칙을 존중한다. 독일 기본법 내에서 정치교육이 실시된다는 점은 정치교육의 영역이 기본법에 의해 제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은 정치적 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의 법적·제도적 질서는 정치교육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정치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의 과제는 법규범의 타당성과 변화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한편, 이미 획득한 권리 및 제도들을 지키기 위해 진력하고 기본법이 규정한 정치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 및 규정을 변경시키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에서는 정치의 개념을 단순히 권력투쟁으로 보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측면으로만 보지 않고 정치의 형식, 정치적 행동의 내용, 대상, 목표,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정, 정치제도 등을 포괄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정치·경제·사회적 질서가 갖는 강제와 지배관계를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의미 및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고 지배질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관계, 규범 및 가치관 등을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즉 정치교육은 사회의 탈정치적 경향을 억제하고 정치적 결정이 자주 가치방임적인 과학 기술적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치·사회적 규정, 제도, 지배관계 등의 의미, 목적, 필연성 등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다.<sup>142</sup>

모든 사회적 질서는 사회 성원들의 행동과 태도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 행동방식, 규범 등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 정치교육은 현재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탐색하도록 시민들을 교육시킨다. 현실의 「비판적 탐색」이란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정치·경제·사회 질서에 대한 관점에 근거하여 기본법의 테두리 내에서 현실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교육을

<sup>142</sup> 위의 책, p. 97.

받는 시민들은 정치현실과 이상적인 정치형태간의 갈등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한편, 권력남용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대항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독일의 정치교육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며 개선책을 계획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탈정치화는 물론 극단적 무력화 모두를 배제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정치적 문제의 분석과 아울러 해결 모색을 추구하도록 교육시킨다. 그러나 정치교육은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규범적 지식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적 상황<sup>143</sup>에 대한 쟁점 이해능력을 배양시켜 자신의 이해관계 및 입장을 개선하고 자신의 입장에 부응하는 정당을 지지하도록 교육시킨다. 특히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자신의 이해관계 및 입장을 개선할 경우 다른 사람은 물론 전사회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시민들은 정치교육을 통하여 특정 이해관계가 어떤 경우 사회를 위해 유보되어야 하는가를 평가하며, 어느 이해관계가 공익으로 위장한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독일 정치교육은 개인의 행복관을 발전시키고 이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능력과 자세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행복이란 정치적인 것은 아니지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인 조건을 필요로 한다. 특히 민주사회에서는 전체주의 사회와는 달리 다양한 행복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의 행복관을 강요하거나 이를 정치적인 권위를 통해 절대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치교육은 보편적인 규범을 지닌 행복관을 강요하지 않고 타인의 관점도 존중하면서 자신의 행복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독일 정치교육은 국제적으로 다른 민족의 생존권과 독립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제적 안전과 정당한 국제질서를 위해

---

<sup>143</sup> 갈등은 사회생활의 보편적 현상이다. 정치교육은 갈등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한편,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 이해관계 및 권력관계의 대립 등의 갈등의 근본원인을 인식하는 능력, 헌법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갈등 해결 형식을 교육시킨다.



공헌하는 자세의 함양을 추구한다. 따라서 다른 사회의 삶의 형태, 사고, 습관, 가치척도를 배척하지 않는 자세의 함양, 다양한 발전상태에 있는 국가간의 이해관계 갈등을 인식하는 능력과 아울러 국제정치의 구조적 토대와 분류를 인식하는 능력의 배양은 정치교육의 주요목표가 된다.

정치교육은 환경문제와 같은 미래의 생활여건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갈되어 가는 자원문제, 날로 악화되는 환경문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 문제 등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들이다. 이외에도 노동의 위상도 정치교육의 대상이 된다.

독일 정치교육은 시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의 비판력 및 판단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토대로 정치참여를 통한 사회의 민주화 및 인간화에 기여함으로써 독일 사회에서 폭력을 순화시키고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 평화교육으로서 독일문제 교육

분단 이후 서독은 독일 통일의 평화적 실현을 위한 각종 정치·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정치교육의 일환으로서 평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러한 평화교육의 실행은 평화문화를 정착시켜서 서독국민들의 양육간의 민족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도였다. 특히 서독의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은 탈나찌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공고화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발전된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구축과 미래 사회의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의 양성을 정치교육의 관건으로 삼았다.

학교 정치교육에서의 독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정치교육에 대한 목적, 내용, 방법 등과 관련된 학술논쟁이 가열화 되면서 약화되었으나, 70년대에 들어서서 시민당정부에 의한 신동방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1978년 서독연방의회 내독관계위원회는 독일문제에 관한 정치교육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학적·정치학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sup>144</sup> 이 결

과 독일문화교육성 협의회(Kulturministerkonferenz: KMK)는 독일민족의 통일의식을 계몽·발전시키려는 목적하에 독일문제 교육지침(Die deutsche Frage im Unterricht)을 합의·발표하였다. 독일문제 교육지침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달성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로 인간의 존엄성과 내면생활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은 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한 동방정책에 따라 동독정부의 실체만은 인정한다는 합리론에 기초하여 독일 내 두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한다.<sup>145</sup>

과거 독일문제를 독일위주로만 생각하던 사고방식은 독일분단이 유럽평화와 안보가 지속되는 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사고로 전환되었다. 동서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독일의 분단은 양진영으로 유럽의 분단을 의미하므로 통일로의 접근은 유럽에서의 평화유지와 긴장완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sup>146</sup>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독일문제 교육지침은 서독의 독일정책이 유럽의 평화정책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교육의 주안점으로 인지시켰다.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은 서독의 신동방정책과 아울러 독일정책의 핵심적 명제를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서독의 독일정책에 따르면 서독이 통일로의 접근방법은

<sup>144</sup> 연방의회, 연방정부, 대통령 및 연방헌법재판소 등은 독일민족의 자결권 행사를 통해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독일 연방의회는 1972년 5월 10일 공동결의문에서 무력의 포기, 현존하는 국경선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 민족통일의 평화적 달성 등을 선언하였으며, 독일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조약, 즉 동방조약, 기존조약, 모스크바조약 등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문제 해결을 위한 궁극적인 조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서독 대통령 Walter Schell은 독일민족의 존속과 독일통일은 역사가 독일민족에게 제시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독일통일의 출발점은 민주적인 사회적 법치국가의 틀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독일통일에 관한 사고는 자유에서 출발해야 하며, 더 이상 타민족을 지배하려는 권력지향적 사고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개발연구원, 『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연구』(서울: 교육개발연구원, 1993), p. 110.

<sup>145</sup> KMK, *Die deutsche Frage im Unterricht* (Bonn, 1978), p. 4.

<sup>146</sup> 김학성,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40.

우선 첫째로 통일을 위한 외부적 환경을 조성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유럽평화가 유지되는 외적 조건하에서 양독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마지막으로 독일민족으로 하여금 체제비교를 통하여 통일독일의 정치경제 체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데 있었다.

『작은 걸음의 정치』를 구사하여, 동방정책의 실질적 구상자인 에곤 바르가 시사한 것처럼 『접근을 통한 변화』를 꾀하여 『공산주의는 극복되어 지지 않고 다만 변화 되어진다』는 서독의 동방정책은 아주 실제적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신동방정책은 안정된 양독관계를 보장하는 가운데 체제의 우위를 자연적으로 증명하여 독일국민이 자결권을 행사하여 궁극적인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다.<sup>147</sup>

독일문제 관련 교육지침은 독일분단의 원인을 히틀러 국가사회주의로부터 찾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국가사회주의의 패망과 더불어 연합군의 진주로 인해 독일의 분단은 시작되었지만 민족통일을 위한 독일민족의 노력은 정당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있다.<sup>148</sup> 이 지침에서는 국가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하고 타민족을 강점하는 팽창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서독의 독일정책은 종족의 우월성을 토대로 통일을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화 속에서 민족통일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은 동독인들도 독일민족으로 공통의 역사, 언어, 문화 등을 통해 서독인들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수업시간에 주지시키고 있다.<sup>149</sup> 역사, 언어, 문화 등에 대한 공동의식은 하나의 국가민족(Staatsvolk)을 이루고 있지 못하였으나, 1913년 7월 22일자 독일 국적법에 따라 단일독일 국적 입장을 존속시켜 서독인들의 통일의를 고취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

<sup>147</sup> 1983년 이래 집권하고 있는 기민당의 콜수상도 사민당이 착수한 통독정책과 동방정책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동독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1983, 1984년의 두차례의 차관공여, 경제협정 및 문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독과 접촉·교류의 폭을 확대하였다. 김학성,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p. 91 참조.

<sup>148</sup> KMK, *Die deutsche Frage im Unterricht*, p. 8.

<sup>149</sup> 위의 책, p. 9.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은 수업시간에서 동독의 정치·경제·사회체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동·서독체제 비교를 서독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가치기준으로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sup>150</sup> 따라서 서독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은 서독자본주의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민주적 법치 국가의 형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체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서독정치체제에서는 자유, 인권, 정의 등에 입각한 법치국가적 질서가 보장되고 민주적 정치문화의 기반 위에서 정치·사회세력간의 정치적 갈등이 성공적으로 관리되었던 반면, 동독정치체제에서는 동독의 지배층이 당에 의한 관료주의적 권력독점을 고수하여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는 면을 학생들에게 인시시켰다. 또한 정치교육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체도는 동독의 계획경제체제와는 달리 고도의 생산력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자유경쟁의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측면의 체제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은 동독지역에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서독인들의 인도주의적 의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시시킬 것을 가르치고 있다.<sup>151</sup> 동독도 서독과 마찬가지로 유엔의 인권협정 및 헬싱키 협약 등에 가입한 바 있지만 거기에 명시된 본질적인 인권보장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서독인들이 동독인들이 당하고 있는 비인도적 처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독일 기본법상의 민족적 목표 설정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더욱이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은 인권문제 제기가 구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긴장완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은 정치교육이 동독정부 독일정책 및 통일정책의 폐쇄성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152</sup> 동독 공산당 서기장 호

<sup>150</sup> 위의 책, p. 11.

<sup>151</sup> 위의 책, p. 15.

<sup>152</sup> 위의 책, p. 10.

네커는 체제대결에서 점차 수세적 위치로 전락하면서 서독 및 서방세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1971년 6월 동독사회주의통일당 제8차 전당대회에서 동독민족을 「사회주의적 독일민족」으로 강조하는 반면, 서독민족을 「자본주의적 민족」으로 각인함으로써 2민족 2국가체제를 상정하였다. 이러한 동독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교육은 동독정부의 독일정책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한편, 동독주민들이 동독사회주의체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독일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sup>153</sup>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은 동독인들도 동독의 발전에 대해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있으며, 서독이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는다.<sup>154</sup> 이러한 교육지침은 동독인에 대한 서독인들의 심리적 우월성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으며, 또한 서독인과 동독인과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이바지하였다. 독일문제 관련, 정치교육은 시민들에게 독일분단의 문제는 물론 독일문제의 국제적 차원을 인지시켰다.<sup>155</sup> 시민들은 독일문제 관련 정치교육을 통하여 독일문제에 관한 현실 인식, 문제해결 시도, 미해결 문제 등을 인식하고 미래의 성숙한 시민으로 독일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여기에서 방법론적인 기본법칙으로 사실의 기술보다는 과정상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독일문제의 원칙으로 냉전적 관계를 청산하고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동서독 관계를 친구·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피해졌다. 이러한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평화교육은 교육방법론적 시각에서 볼 때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평화문제에 대하여 인식하게 하고 토론의 동기를 부여하는 문제 제기 교육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의 배양으로 청소년들의 주변환경과의 갈등을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의 평화”(Frieden im Alltagsleben)를 이룰 수

<sup>153</sup> 이에 대한 사례로는 1953년 6월 17일 동독주민들의 반체제시위는 무력으로 진압되었으며, 400만 명을 상회하는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탈출한 것을 들 수 있다.

<sup>154</sup> KMK, *Die deutsche Frage im Unterricht*, p. 17.

<sup>155</sup> 위의 책, p. 20.

있도록 하였다.

### 3. 탈근대적 평화문화 형성의 의의

유럽에서의 탈근대적 평화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는 실현가능한 미래의 비전과 폭력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힘으로 지향할 것을 원칙으로 지니고 있다. 이러한 평화문화 구축을 위한 제 원칙으로는 국가에 의한 폭력독점, 법치국가 원칙 준수, 사회적 역할의 상호의존성에 의한 감정통제, 사회변화에 따른 이해관계 변화의 민주적 참여, 사회정의 유지, 생태계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탈근대적 평화문화가 사회화되고 내면화된 정치문화로 기능한다면 현대 사회의 사회적 갈등은 민주적으로 해소되고 관리될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성숙한 정치문화로 체화되어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관용, 합의자세, 타인 존중 등을 지니고 정체성 및 이해관계상의 갈등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한다. 더욱이 평화문화의 과제는 정체성 및 이해관계상의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회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정치문화의 창출에 있다.

서구의 근대성은 문화규범적 요인과 더불어 이러한 요인에 조응하는 사회적 구조를 평화문화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이해되었다. 민주주의는 평화를 보장하는 자유와 평등의 보편적 원칙이고, 시장경제는 모든 인간들에게 높은 복지를 가져다주는 경제체제이며, 과학기술은 인류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유일무이한 평화적 진보에 속하는 것으로 당연시했다. 권위주의국가들이 정당성 위기로 인하여 폭력적 상황이 연출되고, 과학기술 발전은 모든 세계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며,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서구의 근대성이 평화문화를 창출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의 평화문화를 구성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과학기

술 등은 서구체제 특유성으로부터 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탈근대 사회에서 여러 종류의 위기현상이 노정되었기 때문에 평화문화와 문화적 근대성 사이에는 일정 정도의 차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서구의 근대적 문화모델이 서구 탈근대사회의 평화문화적 제 형태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구사회 이외의 세계사회에 전파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소지하고 있다. 더욱이 탈근대적 평화문화의 창출에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평화문화의 체제적 한계로서 경제적 논리가 정치·문화적 논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사회적 갈등은 물론, 자연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체제가 존재해야 탈근대적 평화문화의 창출 및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세계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종족, 민족, 인종, 문화, 역사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내전, 국가간 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별성을 인정하는 문화다원주의 아래에서 국가의 물리력을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세계국가의 구성도 탈근대 세계사회에서 평화를 유지·발전해나가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

동북아 평화문화 인프라 실태 분석



## 1. 동북아 다자 외교안보 협력구도의 실태 분석

### 가. 다자 외교안보 협력의 의의

#### (1) 현대 세계체제의 특징: 안보의 상호의존

수많은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사라지지 않은 염원은 항구적인 평화(peace)와 안보(security)를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와 안보를 실현하는 일이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다. 국제사회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수많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들간의 분쟁과 적대관계를 조절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각 국가들은 자국의 군사적, 경제적 힘을 육성함으로써, 또는 이웃국가들과의 협상, 동맹 등을 통한 이른 바 “세력균형” 또는 “집단안보”를 통하여, 그리고 때로는 국제연합(UN)과 같은 국제조직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지역 안보조직에 의존함으로써, 자국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확보하기위해 노력한다.

과거의 국제체제에서는 국가들이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적으로는 스스로의 군사력에 의존해야 했고, 경우에 따라 앞서 언급한 동맹(alliance)을 통해 대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국제사회가 그만큼 섬처럼 고립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국제관계도 주권(sovrenign rights)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군사 관계가 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적 차원의 중앙권력의 결여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여론 및 인식이 형성되지 못한 것도 국가중심 국제사회(state-system)의 중요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이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통·통신망의 획기적인 발달과 비정치적 분야(경제·사회·문화 등)에서의 상호교류 및 상호의존의 증대는 국제사회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세계는 더 이상 ‘국가체제(state-system)’가 국제사회의 유일한

조직원리는 아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간의 정치적 영역을 무너뜨리는 많은 요인들이 작동하여, 세계를 하나의 “기능적 통합(functional integration)”의 새로운 질서로 변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sup>156</sup> 그러므로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국가간 정치적 제한과 영역을 넘어서서, 상호이익과 효율성(efficiency) 증대를 중심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 점은 경제적 분야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통합의 이면에 국가간, 조직간, 비정부기구간, 광범한 상호교류와 협력의 확대, 상호의존의 심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분야에서의 상호의존성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이며 ‘협력안보’ 또는 ‘안보의존’의 시대이다. 특히 테러전쟁의 시대로 접어들며, 국제적 협력이 절실한 시대가 되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또는 분쟁·갈등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안보의 상호의존의 시대에 종래의 집단안보 뿐만 아니라, 지역을 구성하는 국가간 다자간 협력안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i)UN이 그 대표적 기관인 집단안전보장(collective security) (ii)NATO와 같은 집단자위동맹(collective self-defense) (iii)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안보유형을 보완하는 의미에서의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또는 ‘공동안보(common security)’ 등이다.<sup>157</sup>

## (2) 다자간 안보협력의 의의

상기 언급된 다양한 다자간 안보협력의 유형 중에서, 동북아 곧 한반도

<sup>156</sup> Joan Edelman Spero,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St. Martin's Press: New York, 1985).

<sup>157</sup> 홍규덕,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전망과 대응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1993).

주변에서 작동 중인 안보협력의 유형은 한반도 정전협정 이후 존속하고 있는 UN사령부 체제, 한·미 동맹 및 미·일 동맹,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제가 있고, 북한 측에 북·중 동맹, 북·러 동맹 등이 있다. 이들 안보협력 유형은 집단안보 또는 집단자위동맹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에서 협력안보 또는 공동안보에 해당하는 유형은 이제 모색단계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동북아에서는 공동의 협력안보보다는 쌍무관계를 축으로 하는 집단안전보장 유형의 동맹이 보편화 되어왔다. 오랫동안의 냉전구도를 겪어 온 동북아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협력안보란 집단안보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 대신 구성국가들간 정치적·군사적 신뢰를 쌓아 회원국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곧 직접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외교적 활동에 치중한다.

따라서 협력안보는 억지나 봉쇄 같은 집단 안보적 방식이 아닌, 관련 당사국들 간 대화와 협의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되, 문제 해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대화의 제도화를 추구한다. 공동의 적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집단안보와 구별된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 안보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증대시켜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국가의 의도를 완화시키고 사전에 예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협력안보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CSCE(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회의)를 들 수 있는 바, 1975년 헬싱키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안보 및 협력을 위해 창설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구속력 없이 안보협력을 이끌어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므로, 협력안보는 집단안보 또는 동맹 형태의 안보협력 체제의 토대 위에 보다 느슨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분단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처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

과 UN사령부 체제하에서 기본적인 안보체제를 확고히 하는 토대 위에, 중, 일, 러 등을 포함하는 협력안보 개념을 상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실성이 있을 것이다.

## 나. 다자 외교안보 협력의 이론적 배경

### (1) 안보의 새로운 인식과 다자주의

냉전기로부터 탈냉전기로 넘어오면서, 안보에 대한 개념과 인식도 변화하여왔다. 첫째, 국제관계에서 군사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간의 관계에서 압력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가간의 관계가 냉전시대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에서 비제로-섬 게임(non-zero-sum game)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치, 국방, 외교 등 고위정치(high politics) 중심이었던 냉전시대와 달리, 탈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제, 문화, 사회복지 등 저위정치(low politics)로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sup>158</sup>

국가안보 개념 역시 단순히 군사안보 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측면 곧 경제, 교육, 환경 등의 사안들을 포괄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비군사적인 분야의 이슈들은 끊임없는 세계화 과정의 결과로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는 까닭에, 국가간 협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따라서 국제관계에서의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상호의존 시대의 안보의 새로운 개념 곧 ‘협력안보’를 뒷받침하는 다자주의의 개념은 3개국 이상의 국가간 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형성된 협력구조를 의미한다.<sup>159</sup> 다자주의를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은 ‘국제제도’이다. 곧 다자주의는 일반적으로 국가간 협력을 국제제도를 통해 구현하는 것

<sup>158</sup> 김유남·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다자간 안보협의체와의 상호보완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1999).

<sup>159</sup> 위의 글.

을 전제로 한다. 광범하게 고찰하면, 정치적으로 UN도 다자주의의 한 형태이며, 경제적으로 WTO 등도 다자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기능적 통합을 토대로 하는 국제안보에서의 다자주의는 앞서 언급한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협력안보는 상호의존(interdependence), 상호신뢰(mutual trust), 그리고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sup>160</sup>

따라서 다자주의에 바탕을 둔 협력안보는 참가 국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며, 공동규칙 및 규범을 제도화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 점이 공동의 적을 상대로 공동의 안보를 위해 조약이나 협정의 형태에 의해 결속하는 ‘동맹’이나 ‘집단안보’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

## (2) 국제레짐 이론과 안보레짐

전통적인 국제정치 이론은 국제사회를 무정부상태로 파악하여, 힘의 추구와 힘의 증대를 통해 자국의 국가안보를 확보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을 기본전제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주의 이론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간 밀접하게 증대되고 있는 상호의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상호의존 현상에 의하여 설명력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국제레짐 이론은 바로 이러한 국가간 증대되는 협력관계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형태의 규칙, 의사결정과정으로 개념화하여, 이러한 국가간 협력 행동을 일정한 원칙 및 규범 등으로 조정 또는 촉진시키는 권위적인 역할을 보편화하고 이론화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제레짐은 “국제관계의 주어진 문제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에 의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원칙들, 규범, 규칙과 의사결정 과정의 총체”라고 정의된다.<sup>161</sup> 따라서 비교

---

<sup>160</sup> 위의 글.

<sup>161</sup> Stephen D.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in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적 국제레짐이 현실화하기 용이한 분야로서는 국가간 기능적 협조체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여, 상호이익과 이해의 정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대될 수 있는 경제 분야를 들 수 있다.

레짐(regime)은 제도(institution)나 협약(agreement), 또는 조약(treaty) 등의 형태로 국가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결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간 상호이해, 상호 동의(同意) 등 비교적 강제성이 낮은 형태로 국가간의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려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 그만큼, 정치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레짐의 적용 범위는 좁고, 그 사례도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안보레짐은 형성하기도 어렵고, 붕괴되기는 쉬우며, 변화에 대한 유연성·적응성도 약한 편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이슈들을 다루는 까닭에, 국가간의 갈등 정도가 경제 등의 분야에서 보다 훨씬 첨예하고, 그 만큼 협력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 안보레짐이란 국가간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을 두고, 상호이해와 동의를 바탕으로 규정한 ‘협력’ 방식 또는 양태를 지칭하며, 이러한 ‘협력양태’로서의 안보레짐이 동맹이나, 집단안보 등의 안보형태와 비교할 때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한계라고 하겠다.

## 다. 동북아 다자 외교안보 협력의 의의와 실태

### (1) 동북아 다자 외교안보 협력의 의의

동북아는 유럽과 달리, 각 국가간 역사적, 민족적, 문화적 상이점이 분명하여, 회원국간 이해 조정과 공동 이익의 추구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다. 따라서 협력안보체제를 조기에 실현하기에는 아직 결속력이 약하고 실제로 공동의 행동 규범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아직은 이상적이고,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냉전구조가 해체되는 가운데, 동북아의 경우에도



긴장완화·협력·화해 추세가 일어나고는 있으나, 동시에 갈등과 위기, 그리고 긴장요소가 잔존하여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동북아국가간의 역동적인 발전에 힘입어, 역내 국가들간 상호의존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동아시아지역은 세계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지역에 속한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역내 국가들 간 경제협력 및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있다. 물론 군비경쟁도 아울러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동북아 국가들간 어업분쟁, 영토분쟁, 환경문제 등 현안 이슈의 다양화로 인해, 과거 정치·군사적 상황에 국한되었던 안보이슈를 다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동북아에서 협력안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하는 부분이다.

다만, 동북아에서는 역내국가들간 NATO와 같은 집단동맹 개념이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진 양자동맹 관계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양자동맹 관계에 대한 대체(代替)나 대안(代案)으로서보다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자간 안보협력 대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곧 역내 국가들간 ‘대화의 습관’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동북아에서, 국가들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다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 동북아에서 다자간 협력안보를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곧 동북아 국가들간 공동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공동안보(common security)” 의식을 공유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sup>162</sup>

냉전종식 이후 아세안지역포럼(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아시아안보대화(Shangri-La Dialogue) 등 아·태 지역을 범위로 하는 大지역 안보 협력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동북아 지역을 범위로 하는 小지역 차원에서의 안보 협력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sup>163</sup>

<sup>162</sup> 이서향, 『동북아의 아태지역 다자간 안보협력 추진방향: 개념 및 접근방법』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3); 김유남·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다자간 안보협의체와의 상호보완성 연구,” 참조.

<sup>163</sup> 외교안보연구원,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위한 워크샵, 2004. 10. 23. 이서향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실장, 이석수 국방대학교 교수, 최강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하고, 10여명의 관련 연구자가 참석, 토론함.

현재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예방하고, 역내 국가간 신뢰 구축을 위해 다자안보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동북아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평화와 안정을 제도화 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력체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2) 동북아 다자 외교안보 협력구도의 현황

### (가) 집단안보 실태

#### 1) UN司 체제

UN군사령부는 1950년 6월 27일 체결된 UN안보리 결의 제1511호(UN의 대북한 군사제재 결의)와 1950년 7월 7일 UN안보리 결의 제1588호(유엔군 통합사령부 설치 결의)에 따라 1950년 7월 24일 일본 동경에서 창설된 이후, 1957년 7월 1일 현재의 위치인 서울로 이동하였다.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21개국 중 14개국이 현재 유엔사에 연락장교를 파견하여 유엔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들 국가들은 안보리 결의 내용을 이행하기로 되어 있다. 한국전쟁 종료이후 반세기 동안 유엔군사령부는 남북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의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할 경비부대 파견 및 운영, 비무장지대 내 경제초소 운영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 2) 한·미 동맹

한·미 동맹은 6·25 전쟁직후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통해 성립되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어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간의 공식적인 군사동맹 관계가 수립되었고, 한·미 양국은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공동방위하고 미국은 한국방위를 위해 한국 내에 미군을 주둔시키게 되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한국의 국가안보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안

정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

한·미 동맹은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고, 자유체제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안보 우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에 입각한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의 실천적 조치로서, 한국의 국가안보에 상징적·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한·미 동맹을 통해 미국은 (i)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ii)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확산하며, (iii)가능하면 자유체제에 기초한 한민족(韓民族)의 통일을 지원하는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체제위기와 대남 적화전략, 그리고 핵개발을 필두로 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대처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마련에 골몰해 왔다.

최근 핵무기를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재래식 군사동향,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초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04년 5월 17일 발표된 미국의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 3,600명의 이라크 차출 결정과 6월 8일 발표된 1만 2,500명(既언급된 3,600명 포함)의 감축계획, 그리고 주한미군의 자체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조치는 미국 대한반도 정책의 부분적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sup>164</sup>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한·미동맹의 불변과 미국의 대 한국 방위공약의 지속적인 이행을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일어난 이러한 변화들은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지상군 규모는 감축하되, 장비의 개량화·첨단화·기동화를 통한 미군의 전투능력의 강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미 110억 달러 전력증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중이다. 편제 개편에 입각한 美육군의 군사

---

<sup>164</sup>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 인터뷰 내용 참조. 2004. 5. 17. 처음 2005년 말까지 감축키로 되었던 1만 2,500명의 비무장지대 주둔 2사단 병력은 200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미간 최종 합의되었다. 2004. 10. 14.

적 변환 시도도 미국측의 전력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비쳐진다. 미국은 최신 무기체제와 작전 및 군사력 운용개념에 따라 주한미군을 재편하고 첨단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미국측은 일부 핵심 전력부대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165</sup> 요컨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자 하는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방위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은 미군의 희생이 예상되는 지상군을 통한 직접 지원보다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중방어, 원거리 방어무기, 스트라이커 기동부대, 그리고 탁월한 공군력 등 전반적인 군장비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간접지원을 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3) 미·일 동맹

미·일 동맹은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전하고, 평화헌법 9조에 의거 교전권을 박탈당한 이후, 자국의 안전을 위해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1951년 조인되어 1952년 발효되었고, 이후 1960년 “미·일 신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 동조약에 의해, 미국은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지게 되었다. 미·일 양국은 1996년 4월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지역의 유사시에 대응하는 방위 협력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관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sup>166</sup> 최근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일미군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전쟁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를 극복하여,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167</sup>

<sup>165</sup> '유용원의 군사세계: "주한미군, 주일미군보다 높은 위상 유지," 『조선일보』, 2004년 8월 21일; "주한미군 핵심전력 철수 연기 검토와 전면개편 추진 내용," 『조선일보』, 2004년 8월 16일 참조.

<sup>166</sup> 전동진,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참조.

<sup>167</sup>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004년 7월 30일경 전쟁포기를 규정

최근 9·11테러와 중국의 주변 영향력 확대 움직임, 그리고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 조치와 맞물려, 미·일동맹이 강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sup>168</sup> 앞서 언급한 대로, 1996년 4월의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동맹(Japan-U.S. Joint Declaration on Security Alliance for the 21st Century)」, 1997년 9월 유사시 보다 심층적인 미·일 협력을 허용한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9·11 이후 ‘테러대책 특별법’ 및 ‘대미 지원 기본계획’ 마련, 그리고 자위대의 UN평화유지군(PKF) 참가 허용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PKO 협력법’ 개정, 그리고 2003년 유사법제(有事法制) 제정이 일련의 미·일 동맹 강화 조치들이다.<sup>169</sup>

2003~2004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미·일 동맹의 강화 조치는 한반도에서의 한·미 동맹 재정립 움직임과 맞물려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주일미군의 개편은 미·일 동맹 강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동 계획에 따라, 주일 미군기지는 대규모 병력전개의 근거지로서 전력 전개거점(PPH)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따라서 일본은 미군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력중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70</sup> 주일미군의 재편은 일본의 미국 동북아 ‘전선기지화(前線基地化)’ 작업으로 볼 수 있고, 동시에 미·일 양국의 군사적 연대의 상징으로 분석된다. 주일미군의 재편으로 일본의 전략적 위상이 제고됨은 물론, 미일동맹은 “태평양판 미영동맹 수준으로 성장·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미국의 대중 견제·봉쇄·포용 전략에 있어, 일본이 미국의 핵심 전략파트너가 됨을 의미한다.<sup>171</sup>

---

한 일본의 평화헌법 9조의 개정을 촉구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sup>168</sup> Brad Glosserman, *Korea Herald*, 2004년 10월 25일.

<sup>169</sup> 배정호, “일본의 유사법제(有事法制),”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설』 (2004. 6. 23).

<sup>170</sup> 배정호, “주일미군의 재편과 미일동맹의 강화,”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설』 (2004. 8. 31).

<sup>171</sup> 위의 글.

#### 4) 북·중 동맹

북한과 중국의 안보동맹구조는 한국전쟁에서의 중국의 참전으로 인한 혈맹관계의 바탕위에 1961년 북·중 동맹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되었다. 동 조약의 성격은 조약체결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할 경우,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상호방위조약’이다. 1992년 역사적인 한·중 수교 이후 소원했던 북·중 양국관계는 최근 다시 전통적인 혈맹관계와 “순망치한(唇亡齒寒)”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기조는 (i)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그리고 (ii)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요약된다. 현재 야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개발 과업에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중국은 북한의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대외정책을 경계하는 동시에, 그렇다고 급격한 북한체제의 붕괴나 위축을 원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의 급속한 쇠락(衰落)을 저지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을 한·미 세력의 북진을 막는 완충지역으로 간주하여, 북한체제의 생존을 지원해왔다. 중국은 「북·중 군사동맹조약」 관계에 입각, 경제적으로 북한체제에 사활이 걸린 대규모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남한과는 경제·문화 분야에서 관계를 심화시키는 한편, 북한과는 정치·군사적으로 기존의 우호관계를 일정부분 유지하는 일종의 등거리 외교정책을 추진해왔다. 현재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북한 핵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그로 인한 미국의 강경책으로 인해 한반도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특히 북한 내 급격한 변화로 인한 만주지역의 안정 저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탈북자의 만주지역 침투로 인해 이 지역의 안정과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이율배반적 입장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곧 이라크전쟁 이후 중국은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 한반도 문제에 적극 중재·개입을 시도한 바 있다. 이것이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2003년 북경 3자회담과 8월 이후의 '확대된 다자회담' 곧 6자회담에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가장 큰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의 혼미(昏迷)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이 그만큼 감소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전을 경과하면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유연성이 크게 줄어들자, 6자회담 2차회담 무렵부터, 중국의 대북정책은 또다시 과거 북한 지지 입장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하에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핵능력에 의구심을 갖는 등 북핵 저지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향후 중국은 중국이 보유한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서의 대북 지렛대를 활용, 매우 효과적인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 5) 북·러 동맹

북한과 구소련은 한국전쟁을 연합 공모한 안보동맹 관계로 출발하였다. 1961년 조·소 동맹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조약체결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할 경우, 상대방은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상호방위 조약이 맺어졌다. 1990년 한·소 수교로 북·소 관계는 크게 악화되기도 하였으나, 최근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9년 3월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이 방북하여 북·러간 새로운 '우호·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가조인하고 2000년 2월 9일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 방북시 양국정부는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조인하였다. 이어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경협문제 논의 및 선린관계 유지, 안보위협시 지체 없는 상호접촉,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지지, 미사일 문제에 대한 공동입장 등 11개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러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후 2001년 7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조·러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하였다.

구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체제 내부의 변혁 운동으로 최근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한반도에서 1990년의 한·소 수교는 소련의 대한반도정책 나아가 대북정책의 전환을 불가피하게 한 분수령이었다. 과거 북한 중심이었던 대한반도 정책은 남한과의 경제관계 심화로 크게 수정되어, 북·러 관계는 그만큼 크게 위축되었다.

남한 우위의 대북정책은 앞서 언급한 2000년 북·러간 新「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의 공식 조인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북·러 양국간 우호관계가 다소 복원되고 중·러·북한간 3각 안보협력이 긴밀히 조율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넓은의미에서, 러시아의 대북정책은 실용주의적이고,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정책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다. 신조약에서 1961년 동맹조약의 주요 내용이었던 이념적 연대조항과 자동군사개입조항은 배제되었으나, “안보위협 발생시, 즉각 접촉”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제한적 군사협력의 길은 열어 놓았다. 이는 한국과의 「한·러 기본관계 조약」제2조 규정보다 더욱 긴밀한 군사협력을 약속한 것이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i)한반도의 비핵화, (ii)한반도의 안정 유지, (iii)영향력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최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식량 등을 지원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고 있고, 북핵 등 한반도 현안문제에 있어 자국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 관련국들간의 활발한 대화의 지속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통해 신뢰구축을 이루었던 것처럼 북핵문제도 다자안보대화 형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자 회담 2, 3차 회담을 전후하여, 러시아는 북한의 안보우려 문제를 만족시키거나 또는 그 해결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괄타결 해결책(package solution)을 모색하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가 4자 회담의 경우처럼 미·중 등 일부 주요 국가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원치 않고,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 회담 곧 ‘다자안보 회담’이나 동북아 지역 ‘다자간 지역협의체’ 등을 통해 북한을 포



합하는 ‘국제안보틀’을 구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러시아가 6자회담을 환영하고 참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 (나) 협력안보 또는 안보대화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협력안보 또는 안보협력대화는 1990년 이후, 소련과 동구권 붕괴로 인한 불특정 안보불안과 우발 분쟁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1992년 7월, 미야자와 일본총리가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외무장관 회의(PMC: Post-Ministerial Conferences)와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통한 아·태 전지역 정치대화 창설을 제의한 바 있었다.

#### 1)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1993년 7월, 싱가포르 개최 ASEAN-PMC 비공식 만찬에서 1994년부터 PMC와 병행, 아·태지역 정치·안보 협력 논의를 위한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RF) 개최가 합의되었다. 아세안지역포럼은 아·태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정부 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로서, 1994년 역내 국가들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ARF에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 아세안의 7개 대화상대국, 아세안 6개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5월 ARF에 가입하였다.<sup>172</sup>

아세안지역포럼(ARF)은 1년 1회 외무장관회의와 고위관리회(ARF-

SOM: ARF Senior Officials' Meeting)를 개최하며, 신뢰구축, 재난구조, 평화유지, 수색 및 구조, 초국가적 범죄 등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중간회의 비정기적 세미나를 개최한다. 참가국간 신뢰구축조치

<sup>172</sup> 박종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3) 참조.

증진(제1단계), 예방외교 메커니즘 개발(제2단계), 갈등해결 모색(제3단계) 등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sup>173</sup>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국가들로 이루어진 아세안지역포럼(ARF)은 한반도 문제처럼 당사국간 참여한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이 이라크 사태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 바, 오는 11월 베이징(北京)에서 기존 ARF(아시아 지역안보포럼)와 별도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 등이 참여하는 ‘신안보 포럼 회의’를 출범시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ARF가 미국의 영향하에 너무 좌우됐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중국 주도로 아시아 지역 안보 이슈를 논의하겠다는 의도로 추정된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 해상감시 순찰활동과 해군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을 주장해왔다.<sup>174</sup>

ARF는 아·태 지역내 유일한 정부 차원 다자안보 협의기구로서, 군사 및 국제 정세 문제 등에 대한 국가간의 대화 습관을 훈련·축적하고, 상호 대화 및 회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관심 영역과 논의 주제가 아·태 지역 전체의 포괄적 문제와 기구 자체의 운영 및 발전 문제(사무국 설치, 의장 제도 등)에 집중되고 있어, 동북아 지역과 관련된 현안문제는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ARF를 모체로 동북아 안보대화 협의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 ARF 회원국이면서도 활동에는 소극적인 편이다.<sup>175</sup>

한편 2004년 11월 5일 아·태 지역 24개국의 안보당국자가 참석하는 ARF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금년 회의에는 남북한 대표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가했다. 2004년 회의에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북핵 문제는 토

---

<sup>173</sup> 위의 책.

<sup>174</sup> 『조선일보』, 2004년 8월 2일.

<sup>175</sup> 외교안보연구원 워크샵, 위의 글.

의되지 않았다.

2)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Asia-Pacific)

아·태지역 국가간 지역안보에 대한 민간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안보협력대화 기구로 아·태안보협력이사회가 있다. 1993년 학자, 전문가, 전현직 외교관 및 국방관료를 대상으로 설립된 이 기구에는 2003년 현재 북한을 포함한 21개국이 가입하고 있다.<sup>176</sup>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에는 신뢰구축, 포괄적 협력, 해양안보협력, 초국가적 범죄, 북태평양그룹 등 다섯 개의 그룹이 있다. 민간중심의 대화기구로서 CSCAP은 구성국의 민감한 국가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동북아협력회의(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ve Dialogue)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1994년 5월 동북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를 제의하였으나 일부 국가들의 소극적 태도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에 앞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비정부 차원의 기구로 NEACD (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가 1993년 미국 국무부의 후원하에 조직되었다. NEACD의 회원국은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 6개국이다. 동북아지역의 6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정부가 회원이 아니고, 준정부협의체로서 외교·안보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정부대표 등이 참여하므로, 이해관계가 얽히는 민감한 사안 곧 핵문제, 군비통제 등의 의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지 포괄적 신뢰구축에 관한 의제로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대신, 해상재난구조 및 안전협약체결, 방위정보교환, 군비통제 및 군수품 수출규제 완화, 긴급 통신망 구축 등의 의제를 협의한다.<sup>177</sup>

<sup>176</sup> 박종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 <<http://www.cacap.org>> 참조(재인용).

NEACD는 1993년 창설되어 2004년 4월까지 1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동북아 6개국(남·북한, 미·일·중·러)간에 비공식적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를 정례화하고, 유럽의 성공적 경험 사례인 ‘신뢰 구축 조치’(Confidence Building Measures) 대신 역내 국가·軍·사회간 상호 신뢰와 상호 재보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상호 재보장 조치’(Mutual Reassurance Measures) 개념에 입각하여 동북아 범위의 소지역적 안보 협력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개최 장소 및 안보 상황에 따라 북한의 참여가 유동적이며, 역내의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 및 의제의 다양화·전문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단시일 내에 공식적 다자안보 협력체의 출범, 즉 지역 안보 협력의 제도화 가능성이 희박하다.

### (3) 동북아 다자 외교안보 협력구도의 문제점 및 제약요인

아직까지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이란 매우 포괄적이고 이상적(理想的)인 개념이고,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모색단계에 머물러 있다. 동북아의 경우, 관련국간 전쟁을 포함하는 극심한 대립을 경험하였으므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집단안보나 집단방위 개념이 유럽보다 보편화되어있다. 곧,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미, 미·일, 북·중, 북·러 동맹 등과 같은 쌍무 군사·안보 동맹이 실효를 발휘하고 있다. 그동안 탈냉전의 영향을 받아, 이른 바 「북방 3각동맹」과 「남방 3각동맹」은 많이 느슨해졌으나, 한반도에서의 남북간 군사대치라고 하는 기본적인 대립구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구성국가의 수도 적은 편이다. 대만을 포함한다면, 미·중·일·러 등 4대 강국과 몽고 및 남북한을 합하여 8개 회원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별 역사와 문화가 각각 독특한 개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처럼 공동의 유대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

<sup>177</sup> 박종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 참조.

다. 예컨대, 한국과 일본은 한·미·일 연합방위체제에 함께 있으나, ‘독도’ 문제를 놓고 분쟁관계에 있고, 한국과 중국은 최근 수교 이후 관계발전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불거진 “동북공정(東北工程)” 이름하의 중국측에 의한 고구려사 복속정책은 한국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한국은 ‘고구려사’ 문제에 관하여 북한과 공동보조를 취하길 원하나, 북한은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고려하여 쉽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협력안보를 추구하는 한국의 입장은 동북아 국가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구축, 군비통제, 지역 안정과 평화,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로서,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지·압박·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적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안문제가 해결될 때, 좀 더 광범하게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와 평화체제 정착, 그리고 평화통일 환경 조성 같은 기본 문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계속하고 대남 군사정책 등 기본적인 대남전략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다자간 협력안보 노력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집단안보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국가들간 이해와 신뢰증진, 안보협력 분야 확대, 한반도 안보상황 홍보 등을 통한 협력안보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결국 현 상황에서, 다자간 안보에 임하는 한국의 입장은 집단안보로서의 동맹정책과 협력안보로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정책을 병행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맹정책은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협력안보 정책은 우발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제약요인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역내국가들간 기초적 신뢰결여 및 수교상태 부재는 다자간 협상의 가장 큰 난제로 남아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 미수교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대량살상무기 문

제와 인권 문제를 놓고, 북한은 미국, 일본, 한국과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도에 효율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미·북, 북·일 관계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으나, 북한이 핵·인권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 해결 자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사적, 민족적으로 상이한 전통과 독자적인 관습을 유지해 온 것이 동북아 국가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공동의 목표와 이해의 결여, 문화와 가치에 대한 동질성의 결여가 정치·군사·안보 측면에서의 신뢰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 복잡하게 얽힌 영토분쟁—한·일간 독도 문제, 러·일간 북방도서 문제, 중·일간 센카쿠 열도 문제 등—이 다자간 안보협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제 조차 합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협력안보의 ‘제도화’에 따르는 기구유지나 비용문제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정착시키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sup>178</sup> 역내국가들간 신뢰구축 조치를 위해 군비통제나 군비감축을 시도할 경우, 국내산업구조 재조정 문제, 실업문제 등이 해결해야 되는 새로운 과제로 부상될 것이나,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4) 동북아 다자 외교안보 협력의 추진방향

##### (가) ‘제도화’보다는 ‘조화된 협력’의 추구

상기 고찰한 바, 동북아시아가 갖는 구조적 장애 요인으로 인하여, 타지역에서 발견되는 ‘제도화’된 안보협의체 형식의 다자간 안보협력 구도보다는 ‘레짐’ 형태의 상호 ‘조화된 협력’ 방식의 안보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타지역의 안보협의체가 회원국가의 행위를 제도화된 틀 속

---

<sup>178</sup> 김유남·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다자간 안보협의체와의 상호보완성 연구.”

에서 조정하고 국가간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바,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즉 국가간 협력의 제도화는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을 통한 국가간 협력의 최종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이한 제도와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동북아의 경우,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므로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 최소한의 안보측면에서의 공감대, 예컨대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출발점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안보 협력을 출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나) 공동 안보 관심사항 발굴 및 공동 대응방안 모색 필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식적(정부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의 제도화 추진을 위해서는 ‘협력 안보’와 ‘공동 안보’에 대한 역내 국가간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양자 관계나 동맹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동북아에는 기존의 국가간 양자 안보체제(한·미 방위조약, 미·일 방위조약 등)가 존재하여, 이들 쌍무적 방위체제가 안보유지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다자안보 협력구도는 이들을 무리하게 대체하거나 갈등을 빚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 (다) 대화·협력을 향한 습관 형성 필요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기회 요인과 제약 요인이 병존하는 바,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되, 제약 요인은 적극 억지하여, 대화와 협력의 습관을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 요인으로서 지역 안보의 불투명성·유동성,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 중국과 북한의 안보협력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 전환, NEACD·6자회담 등 비공식적·공식적 다자안보 논의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제약 요인으로서 역내 국가들간 공동위협 인식의 부재, 상기 고찰한 바 역내 국가간 역사적 반목(적대 감정) 및 영토 분쟁 문제, 안보협

력의 리더십 부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은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상대자와 분야로부터 출발,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습관화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sup>179</sup>

## (라) 참가범위의 설정

아울러,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구도정착을 위해 참여국가들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일반적으로 다자협력 구도에 있어서는 참가국가들의 수(數)가 적을수록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참여국가 수의 증대는 의사결정 구조의 복잡화를 야기하여, 기능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동북아를 지역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sup>180</sup>

구체적으로 남북한과 미, 중, 일, 러, 몽고 등 7개국이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구도에 포함되는데 이의가 없으나, 대만과 캐나다의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국체(國體) 정통성 논란, 캐나다의 경우는 지역적 원(遠)거리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라.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외교안보 협력구도

### (1) 4자회담

2차대전 종결과 이데올로기에 의한 민족과 국토의 분단, 그리고 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은 한반도의 국제화를 촉진시켰다. 2차대전이 끝나기 이전에 이미 한국의 장래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담으로서, 카이로 회담, 알타회담, 모스크바 3상회의 등이 개최된 바 있다. 한국전쟁을 마무리하는 정전협정에서 남한측에서는 UN참전국을 대표하여 미국이, 북한측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각각 서명하였다. 한국은 전쟁당사국이지만, 협정당사국에

---

<sup>179</sup> 외교안보연구원 위크샵, 위의 글.

<sup>180</sup> 김유남·노경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다자간 안보협의체와의 상호보완성 연구.”



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점을 북한은 집요하게 지적하며, 한국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에서 배제시키려 노력해왔다.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 한반도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대한 다자협상의 첫 역사적 사례는 4자회담일 것이다. 4자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와 미·북 단독평화협정 체결 기도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논리로서 제시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 이후의 정전체제에서 남한을 배제하고 미·북간의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북한의 기도에 대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주변 관련 국가들의 협조와 국제적 보장 속에서 성립되도록 하는 2+2 형식의 4자체제를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본구도로서 북한에 제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4자회담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립하려는데 있었다.<sup>181</sup>

그러나 1996년 4월 제안된 4자회담은 남북간 신뢰회복과 긴장완화가 결여된 상태에서, 북한의 소극적 태도와 중국의 방관적 태도로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화된 상태이다. 4자회담의 목표와 의제가 한반도 안전과 평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북한 핵문제는 다루어지지 못했다. 북한 핵문제는 1994년 제네바핵합의에 의거, 미·북 쌍무협정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 곧 6자회담이 열리고 있으나, 다자회담 구도에 참가하는 국가의 수(數)에 대하여는 논란이 남아있다. 한반도 문제 논의를 위한 참가국들의 ‘불가피성’과 ‘최소필요성’을 고려할 때, 4자회담을 선호하는 의견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곧 국제적 보장의 실효를 위해 한반도 주변 주요국가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지나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예방하기 위해 그 수는 최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sup>181</sup> 홍관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동북아 안보,” 『동북아 안보·경제협력 체제 형성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2)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구도: 6자회담

북한 핵문제는 1991년 남북간 「비핵화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도하의 해결에 실패하였다. 그 원인은 남북한간 기본적으로 신뢰가 결여되어 있어서 핵문제에 대한 남북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는 1993년 이후 미·북 협상 위주로 진행되어 오게 되었다. 이후 북한 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다자간 협상 틀로 옮겨가게 된 것은 2002년 10월 이후 우라늄농축(HEU)을 이용한 북한의 비밀 핵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미국이 개입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북한핵이 갖는 국제적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핵이 갖는 국제평화에 대한 도전과 위협적 성격으로 인하여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한편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핵합의」를 기본축으로 했던 클린턴행정부의 ‘유화적(有和的)’ 북핵 접근방식에 강한 불만과 비판을 표출해왔다. 「제네바핵합의」를 통해 북한에 경수로건설을 지원하고, 매년 다량의 중유(重油)를 제공하여 왔음에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하였다는 평가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2003년 1월 켈리(James Kelly) 국무차관보에 의해 북핵 문제의 ‘다자간 접근’ 해결방안이 언급된 이후, 다자간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강조해왔다.<sup>182</sup> 2003년 봄 미국, 북한, 중국이 참가하는 베이징 3자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은 3자회담 틀의 지속보다는 한국과 일본,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확대 다자회담’ 곧 6자회담을 강력히 선호해왔다.<sup>183</sup> 이는 2003년 5월 15일 한·미 정상회담과 5월 23일 미·

<sup>182</sup> 부시 대통령 (1. 15), 파월 국무장관 (2. 9, 3. 13)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2. 16, 3. 11), 볼튼 국무차관 (2. 24) 등 다자간 협상 틀을 선호하는 일련의 의사표명이 있었다.

<sup>183</sup>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2003년 5월 27일 북한의 선(先)쌍무회담 후(後) 다자회담 제의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다자회담을 고수한다”면서, “그것은 확대 다자회담이며 만일 앞으로 대화가 있으려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

일 정상회담에서 각각 북핵 대책이 조율된 이후 나온 결론이다.<sup>184</sup> 6자회담으로 표현된 다자회담 구도가 갖는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북한 핵 저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 공동연대의 형성이다.

6자회담이 2003년 후반기 시작된 이후, 현재는 3차회담을 2004년 6월 마무리한 상태이나, 북한 핵문제는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6자회담 3차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단계별 협상안 곧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북핵 저지를 위해 고심해 온 미국으로서, 일단 북한을 협상구도로 유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북한이 소극적이거나 거부태도를 보일 경우, 6자회담 구도 대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으로 보여진다. 곧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두고, 북한이 핵폐기를 선언하면 단계별로 대북지원과 핵폐기를 위한 검증·사찰을 실시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북한 핵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종래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북한의 ‘동결-보상 동시행동’안(案)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새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북한에 대한 물적지원과 사찰과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되게 될 것이지만, 그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편이다. 대외전략에서 최근 유연(柔然)의 度를 더해가고 있는 북한은 미국이 제안한 새 협상안의 ‘준비단계’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시간 벌기를 기도하는 한편, 미대선 결과를 주시하고,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를 고려하면서, 결국 핵보유를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sup>185</sup>

---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sup>184</sup> 한·미 정상회담은 “다자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의 성공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에 한국과 일본이 필수적이며, 러시아와 여타 국가도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북핵 문제를 둘러싼 향후 회담에 한국과 일본이 포함돼야 한다는데 합의했다”는 성명이 나왔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확대 다자회담’ 언급은 이미 한·일 양국과 충분히 협의한 뒤에 준비돼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sup>185</sup> 홍관희, “3차 6자회담 종결과 북한 핵문제,”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설』 (2004. 6. 28) 참조.

다자 외교안보 협력구도 곧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게 되자, 미국내에서는 다자구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책공약으로서 미·북 양자회담을 천명한 데 이어, 현 부시행정부도 미·북 접촉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집권 2기에 성공한 부시행정부가 ‘6자회담 재개’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북핵 문제 해결을 다짐하고 있어, 당분간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동시에, 북한이 결국 핵포기를 거부할 경우,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거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강화로 대북제재 및 봉쇄 조치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군사적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 선택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재 실현단계에 있는 PSI를 강화하여 북한을 압박하면서, 핵포기를 유도하려 할 전망이다.

4자회담에서는 분명히 남북한이 관련 당사국으로서 회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져 있었으나, 6자회담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사라지고,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의 ‘중재(仲裁) 역할’ 자임(自任)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남았다. 또한 중국을 개입시켜 그 대북영향력을 활용하려 시도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6자회담은 개념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半民半官 차원에서 추진돼 온 NEACD와는 달리 특정 이슈(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역내 6개국(남·북한, 미·일·중·러)이 한 자리에 모인 최초의 다자 안보 협의·협상체로서, 참가국들간의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위기와 접근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참가국 모두 대화 모멘텀의 유지와 과도기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유지 가능성은 존속하고, 또한 그 진전과 결과의 성격에 따라서는 기타 관심 사항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화 및 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의제 및 해결 방식 등에 관한 참가국들의 異見으로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조기 해결 가능성

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미국이 다자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다짐하고 있어, 지역적 접근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되고, 향후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6자회담을 통한 동북아 차원의 안보 문제 해결 가능성이 제기된다.

## 마. 양자적 관점과의 비교 분석

### (1) 다자회담 구도의 출현 배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초의 접근은 남북한간 양자 접근이었다. 남북한은 1991년 핵의 평화적 이용을 골자로 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는바,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 문서이기도 하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그러나 이후 북한의 태도가 보여준 바와 같이 선언적 의미 이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후 북핵 문제는 한국의 해결 영역을 벗어나게 되었다.

그 근본원인은 무엇보다도 핵문제가 갖는 국제적 성격과 남한에 대한 신뢰부족 및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에서 찾아져야 할 것 같다. 먼저, 핵이 갖는 국제적 성격은 최근 더욱 증대되는 현상을 보여왔는바, 곧 북한 핵개발이 일차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위협임과 동시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특히 9·11테러 사건 이후 WMD(대량살상무기)의 테러리스트와의 연계 가능성으로 핵문제의 국제적 성격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다.

남북대화의 지연은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북 군사대치라는 현실과 함께 북한의 대남전술·전략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보다는 아직도 남한을 고립·우회하고, 최근의 혼란된 남한정세를 이용하여 적화전략을 실현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안보의 부진은 기본적으로

남북간 상호불신에서 배태되는 바 크고, 남방·북방 3각구도가 느슨해졌다고는 하나, 남북의 국가안보가 각기 미·일 또는 중·러와의 집단안보를 통해 확보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2002년 10월 미·북간 고위 회담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계획을 시인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구도의 출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양자적 접근과 다자적 접근의 근본적 차이는 양자적 접근이 핵심 관련국간 심층적이고 긴밀한 논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반면, 다자적 접근의 취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역내 국가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들의 참여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해 보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중국의 다자구도 참여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북·중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한, 북한과의 핵 협상이 쉽지 않으리라는 판단에서 미국은 중국의 참여와 도움을 요청했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강경한 태도로 미루어, 북핵 문제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 현재의 자국경제의 고속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여, 對북한 설득에 나서게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2003년 후반만 해도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전망은 밝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다만, 중국이 다시 ‘순망치한(唇亡齒寒)’으로 표현되는 북·중 혈맹관계를 견지하고 유연한 태도로 돌아감에 따라, 4차 6자회담을 앞에 두고 있는 현재 북핵문제 해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편이다.

북한으로서도 중국의 지원 없이는 북한체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미·북 양자 해결만을 고집하던 입장에서 후퇴,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자구도에 참여하게 되었고, 2003년 4월 북경에서 개최된 ‘미·북·중 3자 회담’이 바로 다자회담 구도의 시작이다.

이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참가를 요청하고 북한도 러시아의 참여를 원하게 되자,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6자 회담’이 개최되게 된 것이다. 이는 4자회담 이후 재현된 동북아 다자 안보회담으로서, 1988년 10월 노

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6자 평화 협의회’를 제안한 지 15년만에 개최된 것이기도 하다. 비록 그 의제가 북핵 문제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북아에서는 최초로 열린 지역 차원의 다자 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3자 회담’과 이후 개최된 ‘6자 회담’을 수용하면서도, 아직도 다자 틀 내에서의 미·북 양자 회담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핵 문제는 이미 남북한 문제, 미·북간의 문제를 벗어나 동북아의 지역 문제, 더 나아가 세계문제로 그 성격이 비화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로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금지에 적극적인 임을 감안할 때, 북핵 문제를 더 이상 양자문제로만 접근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 (2) 다양한 형태와 의제의 협상 가능성 증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이 구체화되고 실현됨에 따라, 회담 참가국들의 다양한 입장이 상호 타협·절충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자 협상의 틀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회담 의제도 비록 북한 핵문제가 그 중심의제로 채택되었지만, 회담의 경과와 진전에 따라 다양한 의제가 거론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예컨대, 일본이 그 동안 북·일간의 양자 문제로 취급하던 일본인 납치 문제를 6자회담에서 회담의 의제로 제시한 것은 앞으로 회담의 의제가 매우 다양하게 될 수도 있으리라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양한 것이 다자 회담의 특징인 만큼, 의제에 대한 관심도 참가국들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조정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참가국들의 견해가 망라될 수 있는 포괄적 의제가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이외의 의제가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북핵 해결과정에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미·북, 북·일 등 다양한 쌍무관계의 정상화, 대북 경제적 지원, 교류·협력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협상을 통해 순조롭게 해결된다면, 협상의 진전에 따라 점차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 등 제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상 의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현 상황에서 이직은 희망 단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군축 및 경제 협력 문제가 거론되면, 이는 ‘6자 회담’을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CSCNEA)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남·북한간 교류 협력도 ‘다자틀 내에서의 양자 협력’이라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EU가 KEDO 사업의 당사자로서 ‘6자 회담’에 참여하는 문제가 제기될 경우, 북한도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EU의 반대 입장을 고려, ‘7자 회담’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게 되면, EU의 추가적 회담 참가로 인해 다자회담은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곧 협상 그 자체는 복잡한 모습을 띠게 될지 모르나, EU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회담에 참가하게 될 경우, 유럽에서의 안보현안 해결방식 곧 WMD 비확산, 마약, 테러 등 新안보 위협 통제 등의 문제들을 동북아 안보 질서에 적용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다양한 형태의 의제상정과 논의, 관련국간의 광범한 상호 의견교환과 교류·협력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신뢰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안보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동북아 평화 NGO의 실태분석

### 가. 동북아 국가별 NGO의 성격과 ‘평화’의 위상

최근 비국가적 행위주체들의 활동범위와 영향력 확대는 시대적 조류인 바, 민간과 비정부기구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문화의 확립을 위해서도 NGO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 체제와 평화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 NGO들의 역할과 현황, 실태의 분석이 필요하다. NGO의 활동과 관련 ‘동북아’는 한국을 비롯, 중국과 일본 등 한국이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뿐 아니라, 지역 특성상 소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대만과 홍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의 평화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중요성 인식, NGO의 분포 양상, 이슈 설정과 인식에서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한 양태가 나타난다. 우선 이러한 국가별 지역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와 관련된 NGO의 협력 현황, 앞으로의 가능성과 양태를 전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 각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NGO는 처해진 역사적 발전 과정, 국가 및 시장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간의 관계 등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양태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각 국가별, 지역별 NGO의 자기이해, 주요 활동분야 및 활동방식 등에서 여러 차이를 보여준다.

동북아의 다른 국가 및 지역과 비교할 때, 한국의 특수성은 두드러진다.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는 대부분 NGO가 국가와 공생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복지 부문에서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을 보조하는 활동에 특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서 NGO의 주류는 정부 정책에의 비판과 대립,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권익주창형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동북아 주요 국가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등에서 NGO 활동의 특징을 간략하게 서술하면서, 가장 친근하고 자명한 한국 NGO의 현황과 비교한다.

## (1) 중국

중국에서 NGO와 NPO 같은 단어는 최근 등장한 외래어인데, 중국어에서는 각각 비정부조직, 민간비영리조직 등으로 번역되고 있다.<sup>186</sup> 또는 이를 총괄하여 민간단체 또는 민간조직으로 부르고 있다. 이러한 외래어가 도입되기 이전, 중국에서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사를 총칭하여 사회단체라는 단어를 사용해왔다. 사회단체의 주요 특징은 민간성, 비영리성, 조직화라는 3가지인데, 실제로는 관제 사회단체로부터 비공식적인 결사까지 그 조직형태는 다양했다. 개혁 개방이 진전함에 따라, 사회단체라는 구래의 개념과 NGO라는 새로운 개념이 상호 경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지향하는 일련의 체제개혁에 수반하여 국가가 독점해왔던 사회경제적 기능이 서서히 개방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경제성장과 함께 분출하기 시작한 여러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부는 스스로의 조직능력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조직의 힘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 중에서 다양한 형태의 민간조직이 NGO로서 활동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NGO 섹터를 구성하고 있는 민간조직은 1) 사회단체형 NGO, 2) 사업체형 NGO, 3) 풀뿌리 NGO, 4) 국제 NGO의 네가지 유형이 발견된다. 사회단체형 NGO는 중국에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며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로 1980년대 이후 새로이 설립된 사회단체에서 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1가정 1자녀 운동을 주도하는 중국계획생육협회, 빈곤 구제와 관련한 중국인구복리기금, 중국청소년발전기금 등의 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관련부분의 간부와 유력자를 중심으로 조직되며, 정부관련부분 사업을 보완하는 등 반관반민조직으로서 정부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 사업체형 NGO는 사회서비스의 자유화와 수요의 증대로

---

<sup>186</sup> 大冢健司, “中國,” 中富眞一 編著, 『アツアの國家とNGO』(東京: 明石書店, 2001), pp. 272-298; Jude Howell, “NGO-State Relations in Post-Mao China,” David Hulme, NGOs, States and Donors- Too Close for Comfort?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7), pp. 202-295에 의거 서술.

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생겨난 학교, 병원, 양로원, 커뮤니티센터, 연구소, 법률상담소 등이다. 풀뿌리 NGO로서는, 환경보호분야에 있어서 ‘자연의 친구’(1994년)와 북경지구문화촌환경문화센터(1996) 등이 대표적 단체이다. 이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로, 통상의 전형적 NGO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NGO는 체제 내에 탄탄한 활동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소수이다. 국제NGO로서는 세계자연보호기금(WWF), 국제가축증식프로젝트(HPI) 등이 있다.

중국에서 국가는 NGO가 반정부·반사회적 활동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지만, 다른 편에서 「작은 정부, 큰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회섹터의 구성조직으로 활동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다양한 민간조직의 발흥이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정부는 단체등기를 규제하는 등 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틀 바깥에서 활동하는 NGO를 묵인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 운동, 인권문제, 민족문제, 종교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련의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NGO 활동에서도 금기사항으로 남아 있다.

## (2) 홍콩

홍콩에서는 현재 NGO를 직접 지칭하는 용어로서 비정부조직이라고 하는 영문 직역어를 사용하고 있다.<sup>187</sup> 그러나 이 단어가 정착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는 주로 ‘자원봉사기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2차대전 이전부터 다수의 자선단체, 사회서비스단체가 빈민구제활동과 복지사업에 종사해왔기 때문이다. 이 단체들은 중국 대륙으로부터 홍콩에 유입하는 가난한 이민자들에 대한 빈민구제, 의료, 교육, 주택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영국 식민지 하의 홍콩 당국은 홍콩 주민의 정치적 활동은 엄격히 억압했지만, 이러한 사회봉사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리하여 민간 사회봉사단체들을 사

<sup>187</sup> 澤田 ゆかり, “香港,” 中富眞一 編著, 『アツアの國家とNGO』 (東京: 明石書店, 2001), pp. 299-329에 의거 서술.

실상 홍콩 정부의 행정을 보조하는 행정예이전트로 만들어 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84년 홍콩반환이 결정되고 나서 부터이다. 반환이 완료된 1997년까지 홍콩 당국은 주민자치와 민주화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과거 홍콩 지배에 협조했던 중국인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대중과 직접적 연계를 맺고 있던 노동조합과 변호사, 교원조직,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자원봉사기구 관련자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 때문에, 홍콩 NGO의 다수를 구성하는 것은 빈민 지원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이며, 정치문제와 사회문제를 다루는 NGO는 역사도 짧고 그 수도 한정되어 있다.

### (3) 대만

대만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정치 영역에서 국민당의 일당독재를, 경제활동을 제외한 사회의 모든 부문에까지 관철해왔다.<sup>188</sup> 1987년 계엄령 해제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민간사회단체, 직업단체, 정치단체 등을 일괄하여 ‘인민단체’로서 취급하면서 엄격히 규제했다.

정치적으로 억압받던 대다수의 대만인은 경제활동에 집중함으로써, 경제전체가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소득분배도 개선되었다. 정부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그다지 열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활동과 자선사업에의 잠재적 수요가 존재했지만, 상호부조와 자선단체도 정부의 단체규제 대상이 되었고 활동의 제약을 받았다. 민간단체의 활동은 국민당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든가, 비공식적 활동 범위에 머무르든가 하는 선택만이 있었다.

---

<sup>188</sup> 寺尾忠能, “臺灣,” 中富眞一 編著, 『アツアの國家とNGO』(東京: 明石書店, 2001), pp. 330-351; Hsin-Haung Michael Hsiao, “The new reformism: The private philanthropy in Taiwan in the 1980’s,” Barnett F. Baron (ed.), *Philanthropy and the Dynamics of Change in East and Southeast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91), pp. 113-126에 의거 서술.

1980년대 후반으로부터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의 연계에 의한 정치적 자유화, 민주화가 발전하여, 단체규제가 해제되었다. 다수의 사회단체가 새로이 창출되었고 활동 내용도 다양화되었다. 현재 사회단체의 흐름에는 적어도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첫째,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보완하는 형태로, 사회복지 활동, 자선사업 등을 행하는 단체이다. 민주화에 의해 활동이 자유화되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가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

나머지 두 흐름은 사회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그 일부는 운동단체로서 조직화되어 정부의 개발정책과 사회정책에의 대안을 제시하는 권익주창형 단체로 변화했다. 권익주창형 사회단체의 대다수는 민주화 이후에도 적어도 국민당 정권하에서는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다. 정부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운동과 사회에 대한 홍보활동이 구체적 활동의 주요 내용으로써, 정부에 대한 포괄적 정책제언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회운동의 다른 하나의 흐름은 지역에서 사회운동의 일부가 각지의 전통문화의 재평가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재생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변화했다. 이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 자유를 추구하는 정치운동, 사회운동이 대만민족주의를 구심력으로 하고 있다는 것, 다른 편에서 국민당정권도 중국의 정당한 통치자라고 하는 허구를 버리고, 대만 사람들의 지지로부터 정통성의 근거를 찾는다는 '대만화'라고 하는 배경이 존재했다. 2000년에는 최초의 정권교체를 실현한 민진당의 천수이볜 총통이 취임했고, 정부의 대만화가 결정적으로 진척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운동의 일부가 대만의 새로운 정체성으로서 문화 부흥을 통하여 지역사회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 (4) 일본

일본에서 NGO라는 용어는 민간국제협력단체를 총칭하는 한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189</sup> NGO라는 용어보다는 시민활동단체가 보다 일반적으

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활동영역도 사회정치운동 분야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의 취약점을 보조해주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전후 경제 부흥기를 거치는 가운데 국가가 사회서비스의 공급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체제가 정착되었다. 행정 측에서도 사회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충족해주는 자세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행정이 완전히 충족해주지 못하는 잔여부분을 메꾸어주는 일종의 ‘외관단체’로서의 공익법인의 활동이 제도화되었다. 동회, 자치회 등의 주민 자치 조직은 행정이 담당하지 못하는 지역 독자의 문제와 욕구를 대처해 가면서, 말단행정기구와 제휴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운동 단체 형태로 발흥했던 시민단체가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각종 요구와 반대의견의 표명이었으며, 행정에 대한 진정과 그 시책에 대한 반대운동 등이 활동의 중심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발생한 것은 1970년대였다. 국제 NGO의 활동이 일본국내에서도 인지되었고, 특히 국제협력활동의 분야에서 선구적인 조직화 움직임이 일본에서 탄생했다. 그 후 1970년대 말 인도차이나 난민문제, 1980년대의 아프리카 기아문제 등을 계기로 하여, 대중매체가 시민활동을 취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큰 변화가 발생한 것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다양화 세분화하는 국민의 욕구에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 것, 그리고 행정의 비효율 등이 국민의 불만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풍조는 국제적인 NGO 활동에의 주목과 더불어 활성화되고 있던 시민활동단체를 촉성하는 압력이 되었다. 그리하여 시민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요구가 높아져 NPO(비영리단체) 법 성립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의 NPO는 행정에 대하여 어떤 요구를 하는 단체가 아니라, 행정이 충족해주지 못하는 시민의 요구를 스스로 충족시켜주는 단체이다. 그 담당자에게는 시민운동가보다

---

189 望月克哉, “日本,” 中富眞一 編著, 『アツアの國家とNGO』(東京: 明石書店, 2001), pp. 381-395; 吉田信雄, “行政(政府・地方自治體)と NPOの關係 - 支援から協働へ,” 日本NPOセンター編, 『日本のNPO2000』(日本評論社, 1999), pp. 85-94에 의거 서술.

는 경영자로서의 능력이 요구된다.

## (5) 한국

한국에서 NGO의 존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며, 그 절대수도 많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간 그 수가 급증하여 최근에는 제5의 권력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영향력이 증가했다.<sup>190</sup>

NGO라는 용어가 정착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지만, 그 범주가 아직까지도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양적 증가를 추정하기 위해, ‘친목단체,’ ‘구성원의 권익추구를 우선하는 공익단체’ 등을 포함한 ‘민간비영리단체’의 수를 보면, 1991-1996년에 3배 증가하여, 지부를 포함할 때 약 9,500단체, 1999년에는 배로 증가하여 20,000단체에 이른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공익추구를 우선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NGO는 대부분 정치적 이슈에 관하여, 정책제언과 정부에 대한 비판·감시를 행하는 권익주창형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NGO의 양적 증대 및 그 기본 성격으로서의 권익주창형 활동 지향은 1)권위주의 체제의 성격, 2)민주화 이후 NGO의 과제 설정과 국가와의 관계 등에서 그 이유를 구할 수 있다.

원래 냉전의 최전선에 선 분단국가로서 성립한 한국은 국가가 사회에 군림 통제하는 ‘강한 국가’의 전형이었다. 특히 1961년 군사 쿠데타에 의해 성립했던 박정희 정권 이후, 1)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정치 통제가 강했으며, 2)경제분야에 있어서도 국가가 자원을 장악하고 ‘위로부터의 개발’을 추진했으며, 3)관계 사회운동을 조직하는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도 국가가 통솔했다. 결국 정치·경제·사회복지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국가가 자원을 총괄하고, 그 분배를 관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체제하에서는 NGO의 활동영역은 매우 좁았으며 자율적 활동은 큰 제약을 받았다.

---

<sup>190</sup> 조대엽, 『한국의 시민운동: 저항과 참여의 동학』 (나남출판, 1999); 조희연 편,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2001) 참조.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개발,’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는 체제에의 비판이 증대했다. 재벌을 육성하는 ‘위로부터의 개발’에 의한 경제적 분배,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변단체’를 통한 분배의 불공정도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에는 이들 모든 문제가 ‘민주화’의 문제에 집약되었으며, 환경문제와 여성문제 등에 종사하는 단체도 그 활동을 체제변혁의 일부로 이해했다. 그 이유는 개별의 문제가 모두 국가가 일원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를 통제하는 것에서 유래했으며, 권위주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모든 근본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반정부적 단체’의 활동을 국가가 억압할 수 없었던 큰 이유는 활동의 힘이 강력해졌기 때문이지만, 행정기관 중에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이 체제는 1987년의 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큰 변동을 겪었다.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감소했고, 여러 사회단체 설립 붐이 일어났다. 정권이 나름대로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하기 시작했던 1990년대에는 NGO도 ‘민주적 절차와 토론에 의한 개혁’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재벌에의 경제 집중과 분배의 불평등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법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조화 되어버린 사회경제적 문제는 법이라고 하는 강제력으로 시정될 필요가 있었다. 권위주의 체제를 지탱하던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현재 발견되고 있는 여러 문제는 구체제가 발생시킨 왜곡으로부터 탄생한 것으로서, 기득권층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입법부인 국회가 구태의연하여 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었다. 따라서 NGO가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여론을 환기하고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권익주창형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모든 문제) 통합형 NGO의 존재라고 하는 한국적 특징이 형성되었다.

김영삼 정부 이후, 대통령이 권력 기반을 ‘국민의 지지’에서 찾았으며, 이를 위해 NGO와의 동반관계를 시도하면서, 정권과 NGO가 새로운 관



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NGO도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면서도 정책형성에 관여하기 위해 협력하는 방향성도 구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NGO의 영향력이 증가했다. 그러나 정권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 활동의 자율성에 관한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 후에도, 1)정당정치의 기능부재, 2)중앙정부의 대규모의 권한, 3)권위주의시기에 형성된 NGO의 국가 대립형 행동패턴이 남아있기 때문에, NGO의 활동이 중앙정부에 대한 권익주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집권형이었던 국가의 권력구조가 변화되어 감에 따라, NGO도 최근 국회와 정당을 행동목표로 삼고 전개하는 행동을 늘여가고 있다.

## 나. 한국과 일본의 주요 평화 NGOs의 성격과 활동

동북아 각 국가의 시민운동과 NGO 활동의 역사를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평화’라는 이슈가 시민사회의 안건으로 존재하고, 관련 NGO가 호소력과 동원력을 발휘한 곳은 한국과 일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차이 및 당면 과제의 차이 때문에, ‘평화’라는 주제에 관한 인식 및 관련 NGOs의 활동 내용과 양상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 (1) 한국의 평화운동과 NGO

물론 전세계적으로 정부 불신은 일반적이며, 그 틈새에서 NGO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중에서도 좀 특이하다. 한국은 NGO의 정치와 정책과정 참여의 역할이 가장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sup>191</sup> 이는 한국에서는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의회에 대한 신뢰가 심각한 수준에까지 후퇴해 왔다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1981년 68%수준에서 1990년대 30%대로, 그리고

---

<sup>191</sup> 주성환 외, 『한국 NGO 리포트 2004』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p. 19.

2002년 13% 수준에까지 추락했다.<sup>192</sup>

이와 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볼 때, 2000년대 들어, 한국 NGO의 주요 활동이 정치 참여와 정부정책 반대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부와 NGO 관계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정치 개혁 등의 정치민주화 의제뿐 아니라 환경문제와 핵폐기장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NGO와의 관계는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변화했다. 이밖에도 국제적 이슈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정부와 NGO와의 대립 관계의 전선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이슈에는 아프간 및 이라크 전쟁 및 대테러 대응, WTO 자유무역 협상과 농산물, 교육·의료시장의 개방, 미군과 SOFA 개정 문제 등이 있었다.

정부와 NGO가 대립하는 여러 의제들 중에서, 평화 및 안보와 관련된 의제는 해마다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왔다. 2000년에는 노근리와 매항리 사건들과 미군부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면서 SOFA 개정 문제, 2001년에는 미군부대 유류 오염문제와 미군기지 반환문제, 2002년에는 여중생 사망과 반미운동 그리고 SOFA 문제가 핵심의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평화 및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보다는 미군과 한국민 사이의 민군관계에 속하는 생활환경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평화 안보 차원의 문제가 핵심의제로 등장한 것은 2003년 이라크 파병 반대 문제가 불거지면서였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말 두 여중생 사망으로 촉발된 반미운동은 2003년 초 전쟁반대와 평화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이어서 3월에는 미군의 이라크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반대와 한국군 파병 반대로 이어졌다.

2003년도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되어서 전개된 NGO의 정부에 대한 반대는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었기 때문에, ‘운동’이라기보다는 ‘투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그 규모와 방식에 있어서 1987년 민주화 투쟁, 2000년 총선연대의 맥을 잇는 ‘시민참여 혁

---

<sup>192</sup> 위의 책, p. 21.

명'으로 일컬을 수 있다는 평가까지 제기되었다.<sup>193</sup> 이라크 파병 반대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활동이나 개별 활동을 통해 참여했다. 전국적으로 주요한 연대기구로는 아프카니스탄 침공 때부터 활동해 온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2001년 결성, 700여 단체 참가), 9·27 국제반전공동행동조직위(2003년 9월 결성, 410여개 단체 참여), 이라크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2003년 10월 결성, 350여 단체 참여)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연대기구에 참가한 단체의 숫자에서도 시사되고 있듯이, 이라크 파병 반대와 관련해서는 각 지역, 각계각층의 다양한 단체와 개인이 참가하고 있었다. 참여 방법도 다양화되었는데, 평화적 비평화적 집회와 시위, 성명서 발표, 모금운동, 서명운동, 동맹휴업 등 전통적 방법 이외에도, 1인 시위, 촛불시위, 공익소송, 인터넷에서 항의 댓글 달기 등이 도입되었다. 이밖에도 인간방패 파견 등 국제 연대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진보' 단체의 반전 평화 운동에 대한 '보수' 단체의 대응도 증가했다. 2003년 그 중심에는 '반핵반김자유통일국민연대'가 있었다. 여기에는 114개 단체가 참가했으며, 이 단체는 주한미군철수 반대, 북한 핵개발 저지 등을 주장했으며, '이라크파병지시국민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의 NGO들은 다수는 복수 이슈를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라는 주제는 대체로 통일, 민족, 군사, 국제문제 등과 결부되어 상정되었다. 대표적으로 평화운동 전문단체라고 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활동 목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sup>194</sup> 즉,

첫째,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군사적 충돌을 막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한다.

둘째, 전쟁위기와 군사적 갈등을 끊임없이 조성하고 이산가족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남북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통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

셋째, 분단으로 조성된 적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군사주의 문화를 평화문

<sup>193</sup> 위의 책, p. 25, p. 45.

<sup>194</sup> < www.peacewomen.com.>

화로 전환시키기 위해 일한다.

넷째, 여성들을 평화의 힘으로 세우고 통일, 외교, 국방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며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일한다.

다섯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동북아질서와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일한다.

조사에 따르면, ‘안보 유관’ NGO는 평화, 통일, 민족 그리고 국제문제와 관련 있는 NGO를 포함하여 2000년 현재 144개에 달했다.<sup>195</sup> 이들 단체의 주요 주장은 정부와 대체로 갈등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의 입장에서 ‘안보관련 NGO’의 주장을 요약한 민진의 견해를 중심으로, 이들의 주장을 분야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군사정책 분야 군비축소와 국방예산 감축, 군사작전, 대인 지뢰 제거>

관련 NGO의 대부분은 평화를 지지하고 평화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NGO의 지향은 국방을 튼튼히 하며 평화를 확보하려는 국방부의 입장과는 대체로 다르다. 군비 팽창을 억제하며, 군비축소를 주장하는 NGO들은 국방예산의 감축을 동시에 주장한다.

<국방관리 및 국방행정분야>

NGO들은 국방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주장한다.

<주한 미군관련>

NGO의 주요 관심 사항은 미군 주둔 자체에 관한 사항, 한미행정협정(SOFA), 미군의 환경파괴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다.

첫째, NGO들은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성을 제기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국내의 환경 NGO들과 미군 주둔지역 NGO들이 미

---

<sup>195</sup> 민진, “국가안보관련 국내·외 NGO 현황과 협력방안 연구,” 신환철 외, 『군과 NGO의 협력관계 활성화 방안』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연구 용역과제 보고서, 2003), pp. 37-41 재인용.

군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한미 양국간에 합의 노력이 추진되었다. 셋째, 미군의 주둔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 방위비 분담금의 축소를 요구한다. 넷째, 주한 미군의 작전과 관련, 사격장 폐쇄, 부대이전, 피해보상에 대해 NGO들의 관여가 강화되고 있다.

#### <전쟁 참전 등 과거사 문제>

한국전쟁, 월남파병 등 전쟁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하여 NGO들이 그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4.3사건과 관련한 진상 규명, 피해보상, 명예회복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 <군내 인권문제>

군 의문사 문제, 군 양심수 등과 관련하여 NGO들의 연대를 통한 진상 규명, 명예회복, 보상,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진보적 평화’ 단체들의 영향력이 2001년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이후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시기 이후, 전쟁 없는 세상, 평화인권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비폭력평화연대 등의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이와 같은 단체들은 대중단체라기 보다는 소수 활동가 단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별 단체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것은 ‘이라크 파병반대비상국민회의’와 같은 임시 결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체는 이라크에 전투병의 추가파병에 반대하기 위해 2003년 9월 23일 전국적으로 35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결성되었다. 2003년에는 원래 평화와 관련성이 없는 업무에 특화했던 NGO들도 ‘반전 평화’를 당해연도 중점 사업으로 내걸었거나, 새로운 관련 하부기구를 결성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한국 여성 민우회 등이 2003년 주요사업의 하나로 반전평화운동을 설정했으며, 종합형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반전평화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활동기구로서 평화군축센터를 새로이 발족(2003. 5)했다.

주요 평화 관련 단체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평화인권연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군산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 한국 이라크 평화팀, 비폭력평화물결,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반도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CNRK), 제주 4.3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4.3도민연대), 노근리 양민학살자료 모음사이트(KNCC),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녹색연합,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인권재단, 환경운동연합, 국제민주연대,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매향리대책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불평등한 소파 개정 국민행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좋은 벗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통일맞이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 통일연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

## (2) 일본의 평화운동과 NGO

일본의 평화운동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 되었다. 청일전쟁 이전의 시대(1870~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때부터 평화사상의 원류가 형성되고 1945년 패전 이후 평화헌법 수호투쟁과 반핵운동을 중심으로 평화운동이 자리 잡았다. 그 후 국제정세 및 일본의 경제발전에 따라 그 성격도 변화해 오고 있다.

### (가) 1950-60년대 평화운동

전후 초기, 즉 1950년대의 일본의 평화운동은 평화헌법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전개되었다. 즉 평화헌법을 가진 국가로서의 일본의 평화운동은, 평화주의 조항 삭제를 바라는 보수 지배층의 공격으로부터 평화주의 조항을 지켜내고 그 의미를 실현할 것을 목표로 전개되었다.<sup>196</sup>

당시 일본의 평화운동은 부분강화 대 전면강화 논쟁, 미일안보조약체결에 따른 미군기지 투쟁, 원수폭 금지운동, 헌법개정 금지운동 등을 통해 나타났다. 주요 쟁점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 속에서 지식인 그룹, 노동조합을 비롯한 사회당, 학생운동세력 등의 이른바 혁신세력이 평화운동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했다.

단독강화 조약과 전면강화 조약 두 가지에 대한 논쟁. 일본의 평화운동은 전면강화운동을 지지, 이것이 일본 평화운동의 근원이 되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단독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60년대의 안보운동, 안보개정 투쟁을 전개하면서 일미안전보장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헌법구조와도 큰 관계가 있었다. 또 하나 원수폭 금지운동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문제로 출발했다. 일미관계 뿐만 아니라 인류와 핵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의견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 피폭자들에 대한 원호문제도 있었다.

1950년대 좌익세력들이 주류였던 일본평화운동이라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많았고, 피해자의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 경향이었고, 현재 약해졌지만, 지속적인 흐름으로 남아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공해반대 주민운동, 반전운동 등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평화운동이 등장했다. 그것들은 정당을 넘어서 탈정당성, 자립한 시민운동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sup>197</sup> 또 사상적으로도 가해자성을 바로 보자는 성격을 포함하고 있었다. 가해자성의 문제는 공해반대 운동에서 보면, 시민운동이 하는 공해반대 문제는 일본 내 기업이 외국으로 공해를 수출하는 것에 반대하는 형태였고, 미국의 베트남전 반대운동은 일본 내 미군기지에서의 출격반대를 주장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sup>196</sup> 이상봉, “전후 일본인의 평화의식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성과정과 특징 및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2집 3호 (2003), pp. 302-303.

<sup>197</sup> 시민단체연대회의, 평화와 연대: 일본NGO 해외연수보고서 (2002), p. 18.

## (나) 70-80년대 이후 일본의 평화운동

1970년대 초 증반을 계기로 일본의 평화운동과 국민의식에 변화가 발생했다. 먼저, 1960-70년대 일본 경제의 급성장과 이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은 경제적 관점에서 평화를 바라보는 독특한 평화의식이 형성되는 계기였다. 평화를 그 자체의 가치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어야 일본이 경제성장에 전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생활수준의 향상이 가능해진다는 관념이 지배하게 되었다.<sup>198</sup>

또한 1960년대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의식의 보수화이다. 1970년대 초반에 오면, 과거에는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미일안보조약도, 자위대도 그리고 이에 배치되던 헌법 9조도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의식의 보수화와 함께, 1950-60년대에 일본 평화운동의 주력을 형성했던 노동조합운동도 민간노조의 기업주의화와 공관 노조의 민영화 움직임에 수반하여 평화운동에의 참가가 축소되었다. 학생운동도 1970년대 후반 이후 그 힘이 감소했다.

그렇지만, 시민레벨의 평화운동이 새롭게 등장했다.<sup>199</sup> 다시 말해, 1970·80년대는 일본 내 자립적인 운동이 시작되는 시기, 다양한 운동형태 등장, 운동의 국제연대를 모색하는 시기였다. 1970년대에는 태평양전쟁 당시의 공습을 되새기면서, 일본의 미군기지에서 베트남 출격을 반대하는 ‘공습을 기록하는 운동’이 나타났다. 1975년 고베시의회는 핵무기를 적재한 함정의 고베항 입항을 일체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1980년대에는 전쟁의 참상을 소개하는 ‘전쟁전시회’가 평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1982년 이후에는 비핵 자치체 운동이 광범하고 급속하게 전개되었다. 비핵 자치체 운동은 핵무기의 배치는 보복공격의 위협성을 증가시킨다는

<sup>198</sup> 이상봉, “전후 일본인의 평화의식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성과정과 특징 및 변화를 중심으로,” pp. 306-307.

<sup>199</sup> 김영필, “일본의 전후 평화와 시민운동의 역할,” 주성수 편, 『정치과정에서의 NGO: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pp. 205-212.



생각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비핵 평화선언을 하는 것이었다. 비핵 선언을 한 자치체 수는 1981년 7개에서, 1990년 1477개, 1996년 2168개, 2002년 3287개로 증가했다.

#### (다) 냉전 체제 붕괴 이후 최근까지의 경향

1980년대 말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일본의 보수 우익화 현상은 점차 강화되었다. 냉전 후 일본 사회당이 몰락하면서 일본의 정계는 보수정치인들에 의하여 장악되었다.<sup>200</sup> 비록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있지만 우파적인 역사 인식에서는 야당의 의원 역시 현재 자민당의원과 차이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보수 지배층은 냉전 후의 상황 변화를 일본의 대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여,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미일동맹의 재공고화를 실현함으로써, 평화헌법은 그 존재가치까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었다.<sup>201</sup>

실제로, 1993년 자민당은 연립정권을 구성한 이후, 자민당의 창당 이래의 숙원사업이었던 정책 사안들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1999년 국기, 국가법과 주변사태법이 성립했다. 나아가 2000년에는 일본 국회 내에 헌법조사회의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유사법제 3법안이 성립되었다.<sup>202</sup>

정치권의 보수화와 노조와 시민운동 세력의 탈이념화도 진행되었다. 노조는 사회당과 결별하고 보수적 야당과 우호관계를 맺었다. 때에 따라서 노조가 자민당과도 정책협의를 하게 됨으로써, 노조가 철저하게 이익단체 지향적 형태로 변모했다. 시민운동은 미일안보조약 반대투쟁이후 정치운동 성격보다는 순수생활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정치적 이슈로 결집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sup>200</sup> 김준섭, “전후 일본인의 역사인식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4집 4호, pp. 259-276.

<sup>201</sup> 이상봉, “전후 일본인의 평화의식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성과정과 특징 및 변화를 중심으로,” pp. 310-313.

<sup>202</sup> 김영필, “일본의 전후 평화와 시민운동의 역할,” p. 214.

이처럼 냉전 종결 이후 악화되었지만, 일본의 평화운동은 다음의 네 가지를 추구했다.<sup>203</sup> 첫째, 헌법구조 체제를 지키자는 운동으로서, 전쟁포기와 군비철폐운동이다. 최근에는 유사입법 반대운동이나 일본 자위대 해외 파견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둘째, 미일 안보체제반대운동, 개정운동이다. 이것은 오키나와 기지 철거운동, 일미지위협정을 대등하게 개정하는 운동이다. 셋째, 핵무기 폐기운동이다.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 체제에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자는 것과 피폭자녀들에 대한 원호와 개선 문제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의 일환이다. 미국의 이라크공격 반대 등의 전쟁에 반대하는 활동이 벌어졌다. 이밖에도 일본의 평화운동은 일본 자신이 경험한 가해성과 피해성을 역사적으로 밝히면서 개선해나가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선 전후보상운동이 있는데, 이는 일본의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활동이다. 그와 연계해서 올바른 교과서 만들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 (라) 일본의 주요 평화운동 단체

### 1) 평화협동자료관<sup>204</sup>

평화협동자료관 (Peace Depot)은 1997년 가을에 설립된 단체이다. 설립 전 7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걸쳐 창립하게 되었고 현재 5년째 활동중이다. 평화협동자료관은 시민의 손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창립목적에 따라 시민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단체이다. 평화협동자료관은 일종의 조사 연구기관에 속한다. Think Tank에 해당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정부와의 연계가 많은 Think Tank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한국NGO와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는 일본 평화운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정부에 반대하거나 요구하는 시위행동을 할 때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 근거해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운동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sup>203</sup> 시민단체연대회의, 평화와 연대: 일본NGO 해외연수보고서 (2002), pp. 19-20.

<sup>204</sup> 위의 글, pp. 16-17.

활동과 관련, 평화협동자료관은 핵분출 문제와 관련한 정보지를 월 2회 내고 있다. 월간지를 받는 사람은 천명에 이른다. 사람들이 구독료와 회비를 내고 있어 재정 충당이 되고 있다. 일본의 핵분출 정책에 관한 성적표에 해당하는 뉴스레터를 발간해 핵문제에 관해서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제로 항목별로 2002년 일본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일본 속에서는 반핵운동이 정통적이고 오래된 운동이다. 일본은 반핵운동이 정통이고 강하지만 군축이나 그 정책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료집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의 핵 정책과 관련한 성적표와 평가기준을 담은 자료집을 국회의원이나 정부관계자, 일본 시민단체에 자료로 보내주고 있다. 영어판, 일본어판 두 가지로 제작된다. 그 이외에도 핵문제와 기지문제에 관한 책을 많이 발간하고 있고, 그 수익금이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평화협동자료관의 재정구조는 회비, 구독료가 재정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상근자는 대표 우메바야씨를 포함 4명의 상근자를 두고 있다.

## 2) Peace Boat

Peace Boat는 배를 타고 각국을 돌며 전 지구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국제교육과 NGO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 그룹이다. Peace Boat의 주요관심사는 평화와 인권,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문제라고 한다. 이들은 평화적인 항해를 통해,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배우면서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NGO운동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sup>205</sup>

Peace Boat는 평화와 인권, 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들의 철학은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각 지역의 정부와 사람의 협력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철학적 토대를 통해 개인들 간의 연대와 파트너십 형성을 기본적

<sup>205</sup> 위의 글, pp. 21-25.

으로 진행하고, 협력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세계 NGO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파트너십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내용은 항해, 평화교육, 국제협력으로 나뉜다.

Peace Boat의 본질적인 활동은 교육적인 세계일주(혹은 대륙간) 항해에 있다. 매년 세 차례 세 달 동안의 세계일주 항해를 진행하고, 한두 차례의 짧은 지역항해를 편성한다. 평균 500여명정도 참가하며, 18개국 정도를 방문한다. 이 과정에서 배와 육지에서 평화교육과 국제교류가 진행되는 것이다. Peace Boat 항해 시에 50여명의 세계적인 강연자가 참석하고, 다양한 분야의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이 강의와 프로그램은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의 세계적 관심사안에 초점을 맞춘다. 방문하는 지역에서는 많은 강연과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Peace Boat는 현지에서 제안되는 의제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의 NGO들과의 협력을 통해 항해계획을 세운다. 동시에 NGO FORUM 프로그램은 각국의 NGO들 간의 네트워킹 등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 3) 포럼 평화·인권·환경

이 단체는 해외침략과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기 위해 제정된 일본헌법의 숭고한 이념에 기초하여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 평화, 인권, 환경 등의 운동 과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 설립된 단체이다.<sup>206</sup> 이 단체는 지구시민의 관점에서 인간의 안전보장이라 불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운동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반핵, 인권, 환경, 그리고 식량문제 등의 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시민에게도 널리 개방된 운동의 공공재로서, 전국적 네트워크 조직을 지향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인간의 안전보장을 둘러싼 평화포럼의 사회적 역할, 전국조직으로서의 활동을 확립하기 위하여 유사법제와 헌법 9조 개정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투쟁, 군축, 핵무기 폐기, 교육기본법개악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투쟁, 일본 거주 외국인의 참정권, 피폭자의 권리확립, 탈

---

<sup>206</sup> <<http://www.peace-forum.com>>

원자력발전, 환경문제, 식품의 안전과 WTO교섭 등의 중점과제에 관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의 평화운동 관련 단체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sup>207</sup>

북해도 평화운동 포럼([www.peace-forum.net/](http://www.peace-forum.net/)),

군마현 평화운동 센터([www8.plala.or.jp/gunheiwa/](http://www8.plala.or.jp/gunheiwa/)),

동경 평화운동 센터([www.jca.apc.org/~tkopeace/](http://www.jca.apc.org/~tkopeace/)),

부산현 평화운동 센터([www.peace-toyama.jp/](http://www.peace-toyama.jp/)),

아시아태평양 자료 센터([www.parc-jp.org/](http://www.parc-jp.org/)),

피스 넷 뉴스([www.jca.apc.org/peacenet/](http://www.jca.apc.org/peacenet/)),

피스 데포([www.peacedepot.org/](http://www.peacedepot.org/)),

피스 뉴스([www.jca.apc.org/~p-news/](http://www.jca.apc.org/~p-news/)),

헌법조사회 시민감시 센터([homepage1.nifty.com/kenpou/](http://homepage1.nifty.com/kenpou/))

중국인 전쟁 피해자의 요구를 지지하는 모임

([suopei.org/index-j.html](http://suopei.org/index-j.html))

반차별 국제 운동([www.imadr.org/](http://www.imadr.org/)),

자녀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

([www.ne.jp/asahi/kyokasho/net21/](http://www.ne.jp/asahi/kyokasho/net21/))

전쟁피해조사회법을 실현하는 시민회의

([www.geocities.co.jp/HeartLand-Keyaki/5481/](http://www.geocities.co.jp/HeartLand-Keyaki/5481/))

일본 전몰 학생기념adatsumikai.lookscool.com/)

오키나와 반전 지주회 관동 블럭([www.jca.apc.org/HHK/](http://www.jca.apc.org/HHK/))

석천현 평화운동센터([www.ishikawa-heiwa-center.gr.jp](http://www.ishikawa-heiwa-center.gr.jp))

원수폭 금지 히로시마 협의회([ww3.ocn.ne.jp/~gensui/](http://ww3.ocn.ne.jp/~gensui/))

## 다. 동북아 NGOs의 연대가능성과 한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동북아 각 국가의 평화운동과 관련 NGOs의 동향은 각 국가의 역사와 당면 과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현실적

---

<sup>207</sup> <<http://www.peace-forum.com>> (검색일: 2004. 11. 5)

으로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평화운동과 관련한 NGOs가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의 평화운동의 현황과 당면과제는 상당히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정부와 기존 질서에 비판적인 시민사회와 NGOs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평화관련 NGOs의 비중은 2001-2003년간 급격하게 증가했다. 한국의 경우에 NGO의 ‘평화’ 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매우 강하며 대국민 호소력도 커졌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기존질서에 비판적인 NGOs의 활동이 약화되어 왔으며, 전체 사회의 보수화 경향 속에서 ‘평화’ 문제의 대국민 호소력도 약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한 관심사를 놓고 볼 때, 동북아 ‘평화’ 문제를 놓고, 영향력 있는 국제연대가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민간단체가 통상적 의미의 NGO라기보다는 국가보조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적 경향 때문에, 한국측이 제기하는 이슈에 대하여 유효하게 연대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NGOs는 넓은 의미의 ‘평화’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력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간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서는 교과서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원폭 피폭자 구제 문제<sup>208</sup>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엔의 주도로 2005년 뉴욕에서 개최되는 ‘무력갈등 분쟁 예방 국제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전세계 6개 지역에서 진행되었는데, 그와 관련한 동북아 지역 회합도 전개중이다.<sup>209</sup> 여기에는 중국, 일본, 대만,

---

<sup>208</sup> 교과서 문제, 원폭 피폭자 구제 문제의 한일협력 및 관련 NGO에 관하여 시민단체연대회의, 평화와 연대: 일본NGO 해외연수보고서 (2002) 참조; 정진성, “일본의 평화운동: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7권 1호(1999/봄), pp. 63-87.

<sup>209</sup> <www.cp.or.kr> 참조.

홍콩, 한국, 러시아의 NGO가 참가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각 국의 NGO가 준비모임에서 선정한 6개의 주제에 대하여 2005년 한국에서 NGO 대회를 열며, 여기서의 토의를 바탕으로 무력갈등예방에 대한 NGO와 유엔의 협력에 관한 제안을 최종적으로 2005년 뉴욕회의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큰 전쟁이나 긴장의 위협이 없어진 냉전 종결 이후, 평화운동은 여러 종류의 갈등의 순화와 평화적 해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주요 주제는 군축과 인간안보, 무력분쟁 방지, 해결과 평화적 이행, 국제인도주의와 인권, 전쟁의 원인 제거 등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의 각 국가에서 NGO가 해당 국가와 맺고 있는 관계 및 국제적 연대에 대한 관심사가 매우 다르다. 동북아 국가와 지역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한국의 NGO는 국가 및 의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대립적 역할을 하는 매우 정치적인 권익 추구형 NGO를 발전시켜왔음에 비해,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는 국가와 NGO의 공생관계를 토대로, 주로 사회봉사와 복지 부문의 NGO가 발전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평화운동과 관련 NGO가 존재하는 국가는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는 역사적 상황과 당면 과제의 상이성 때문에 주요 이슈와 NGOs의 특성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비판적 시민사회와 NGO의 역할이 높아져 왔던 한국에서는 2000년대 초기에 평화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상당한 동원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전반적으로 비판적 사회운동이 약화되고 사회의 보수화가 강화되어 가는 가운데, 평화관련 이슈의 비중과 동원력은 약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NGOs는 넓은 의미의 '평화'관련 문제를 놓고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요 주제는 교과서 문제, 중군위안부 문제, 원폭 피폭자 구제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엔이 주도하는 '무력갈등 분쟁 예방 국제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도 전개되고 있다.





# VI

## 결론



동북아는 지정학적 요건이나 역사적 차원에서 밀접한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영향을 미쳐왔다. 동북아의 주요 국가인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현재에도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국가간 관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등장과 NAFTA 등 각 지역의 블록화도 동북아 국가간 협력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현실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국가 간의 협력관계는 그 이면에 각 국민간의 정서적 거리감과 외교안보적 불신을 동시에 배태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공동체는 아직 그 시도조차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상호간의 밀접한 교류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공존을 지향하는 동북아 차원의 평화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구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병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동북아 공동체는 단순한 규범적 의의를 지니는 것에서 벗어나 공동번영을 위한 당위성을 지닌다. 동북아 각국간의 교역관계는 이미 막대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 국가의 국내적 경제문제도 동시에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동북아 공동체와 평화문화의 형성은 왜곡된 근대사의 경험과 영향을 해소하고, 동북아의 다자적 외교안보 협의체의 구성, 그리고 국가와 민간간의 공동의 평화노력을 전제로 하는 복합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평화문화는 국제적 과제이면서도 동시에 각 국가의 국내적 발전에 의해서도 영향받는다라는 점에서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의 평화문화는 국제적이며, 복합적이고도 장기간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각국의 평화인식과 평화정책, 평화운동,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평화문화는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닌다. 이는 서구와 다른 동북아의 특수한 근대사와 그 영향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가장 먼저 근대화의 여정을 걸어간 일본의 방식은 제국주의적인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일본 내외에 강압적 힘을 행사하면서 진행되었으며, 결국 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귀결되었다. 패전 이후 일본은 빠른 속도로 서구적 가치와 기준들을 흡수하면서 발전을 이루어 갔으나, 이 과정에서 전후 서독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시민사회의 성찰적 과정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경제적 발전에 성공했으면서도 성찰을 통한 과거문제의 해소에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동북아국가들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원폭투하에 이은 2차대전의 패전은 일본의 독특한 평화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피해의식을 유도함으로써 일본 스스로 동북아에 행사했던 강압적 힘에 대해 적극적 인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동북아 근대사의 과거에 대해 일본은 한국과 중국과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 국가간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공동체와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탈사회주의 발전과정을 겪고 있는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영토를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의 변화로서 지구촌에 영향을 미치며, 동북아의 전반적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근대화의 서구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공산주의적 지배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통제하에서 시민사회가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평화문화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비정부기구 활동의 근본적 제약을 의미한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지속은 동북아의 근본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북핵 문제라는 문제로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는 한 동북아의 평화체제구축과 평화문화의 형성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탈권위주의화 과정은 국내정치적으로 갈등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동북아 차원의 협력을 위한 추진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과 관련하여 각 국가는 독특한 특성들을 지니며, 이는 상당부분 스스로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다. 그러나 동북아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갈등과 협력의 공통의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오늘의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적 방식으로 상호연관된 근대화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공동체의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북아의 평화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의 불신의 토대가 되고 있는 근대사의 기억을 성찰적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제국주의적 침략을 행했던 일본의 대내외적인 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와 분단이라는 요인에 의해 정상적 발전을 추구하지 못했던 중국과 한국 역시 근대화의 비정상적 요소들을 스스로 해소하는 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스스로 근대화의 여정에서 자신들이 배태시켜온 비정상성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동북아 국가간의 국제적 성찰적 노력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와 민간의 노력이다. 유럽연합의 사례는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국가 차원에서 완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의 경우, 국가영역은 동북아 근대사의 정치적 영향과 외교안보구조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다 자유로운 시민사회와 민간의 경우,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추구에 있어서 국가보다 자율성을 가지며, 국가간 협력을 자극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동북아에서의 평화문화의 형성은 복합적이며,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먼저 동북아 차원의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연구의 심화와 구체적인 노력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동북아 각 국가평화문화에 대한 비교사회론적 인식은 동북아 평화 문화 형성에 대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추진 방안의 경우 정부와 민간차원의 협력적 역할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이나, 특히 초기단계에서 시민사회와 민간에 대한 종합적 지원프로그램이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강순원. 『평화·인권·교육』.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0.
- 교육개발연구원. 『독일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연구』. 서울: 교육개발연구원, 1993.
- 김명기. 『남북한 통일정책』.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5.
- 김양희·양애경·정숙경.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 방향』.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0.
- 김인회. 『한국인의 가치관: 무속과 교육철학』. 서울: 문음사, 1981.
- 김청수. 『멋진 통일 신나는 평화운동』. 서울: 책세상문고우리세대, 2000.
- 김학성.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이서향. 『동북아의 아태지역 다자간 안보협력 추진방향: 개념 및 접근방법』.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3.
- 이호재 외. 『한국인의 평화의식과 통일관』. 서울: 법문사, 1989.
- 임희섭 외.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 사회운동』. 서울: 나남출판, 1998.
- 조대엽. 『한국의 시민운동: 저항과 참여의 동학』. 서울: 나남출판, 1999.
- 조용범·박현채 감수. 『경제학사전』. 서울: 풀빛, 1988.
- 조희연 편.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서울: 나눔의 집, 2001.
- 주성환 외. 『한국 NGO 리포트 2004』.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 츄스키 외. 『전쟁과 평화』. 서울: 삼인, 2001.
- 함석헌 기념사업회. 『민족의 큰 사상가 함석헌 선생』. 서울: 한길사, 2001.
- 허문영. 『북한의 대미국정책 변화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홍용표. 『김정일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서울: 민족통일연

구원, 1997.

Beck, Ulrich. *Die Erfindung des Politischen*. Zu einer Theorie reflexiver Modernisierung. Frankfurt/M, 1993.

Fichte, J.. *Die bestimmung des Menschen* (1800). SW Bd.2, 1845.

Galtung, Joan & Gewalt, Strukturelle. *Beitraege zur Friedens- und Konflikt- forschung*. Reinbek, Hamburg 1975.

Grundbegriffe, Geschichte. *Historisches Lexikon zur politisch-sozialen Sprache in Deutschland*, Brunner, Bd. 2, Otto(Hg.). Stuttgart: Klett- Cotta, 1992.

Habermas, J.. *Der philosophische Diskurs der Moderne*. Frankfurt/M, 1985.

Heiss, Robert. *Utopia und Revolution*. Ein Beitrag zur Geschichte des fortschrittlichen Denkens, 1975.

Huber, Wolfgang · Reuter, Hans-Richard. *Friedensethik*. Stuuart/ Berlin/koeln, 1990.

Mouffe, C. (Hg). *Gramsci and Marxist Theory*. London, 1979.

Spero, Joan Edelman.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St. Martin's Press: New York, 1985.

## 2. 논문

구갑우. “평화담론 재론: 한반도적 맥락.” 『근대극복을 꿈꾸는 동아시아의 도전』. 서울: 청어람 미디어, 2004.

김국현. “한국유교의 평화사상과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43. 2002. 2.

김석근. “한국전통사상의 평화관념: 사대와 중화를 중심으로.” 『21세기의



- 평화학』. 서울: 풀빛, 2001.
- 김영필. “일본의 전후 평화와 시민운동의 역할.” 『정치과정에서의 NGO: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 김유남·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다자간 안보협의체와의 상호보완성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1999.
- 김정태. “한국의 민족성과 평화의 성향.” 『경향잡지』. 1975. 1.
- 김준섭. “전후 일본인의 역사인식에 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4집 4호.
- 김창수. “한국의 평화운동의 이념과 과제.” 『환경과 생명』 7. 1995 가을.
- 류재곤. “근대 한국 평화사상연구.” 『한일관계사 연구』 15. 2001. 10.
- 맹용길. “한반도의 평화신학 정착: 한반도 평화신학 정립.” 『한국기독교 신학 논총』. 6권. 1989.
- 문광훈. “전쟁과 평화 그리고 세계시민적 질서.” 『아세아 연구』. 46권 3호. 2003.
- 민진. “국가안보관련 국내·외 NGO 현황과 협력방안 연구.” 『군과 NGO의 협력관계 활성화 방안』. 2003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연구 용역과제 보고서.
- 박종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배정호. “일본의 유사법제(有事法制).”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설』. 2004. 6. 23.
- \_\_\_\_\_. “주일미군의 재편과 미일동맹의 강화.” 자유기업원 『국제이슈해설』. 2004. 8. 31.
- 아마모토 유우지. “아시아의 평화와 일본의 역할.”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전문가 워크숍』. 2004. 9. 21.
- 여인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한중 workshop 발표논문, 1999. 10. 25.
- 연규홍. “한국교회의 민족통일운동과 통일문제.” 『신학연구』. 41. 2000.

- 유팔무. “한국전쟁과 문화변동.” 『아시아문화』 16. 2000. 1.
- 윤병로. “한국문학에서의 전쟁과 평화의식.” 『대동아연구』 19. 1984. 1.
- 윤사순. “한국유학의 평화사상.” 이호재(편). 『한반도평화론』. 서울: 법문사, 1989.
- 이삼열. “세계 평화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방향.” 출처: www.peacewomen.com.
- \_\_\_\_\_. “한국 사회와 평화운동.” 『기독교 사상』. 1985. 8.
- 이상봉. “전후 일본인의 평화의식에 관한 비판적 고찰: 형성과정과 특징 및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2집 3호. 2003.
- 임혁백.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평화정착.” 『평화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 \_\_\_\_\_. “한국의 민주화와 사회평화정착.” 『평화연구』. 2호. 1992.
- 정경란. “세계 여성평화운동의 현황과 21세기 여성평화운동의 과제.” 출처: www.peacewomen.com.
- 정우성. “평화교육: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새로운 교육이념 - 사람, 삶, 되살림 : 더불어 고르게 사는 삶을 터잡는 교육.” 한국교육연구소 『평화교육심포지움 발표논문집』. 1993.
- 정인재. “국육의 평화사상.” 『평화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 정진성. “일본의 평화운동: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7권 1호. 1999/봄.
- 진홍상. “중국인의 평화철학과 동북아의 평화.”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전문가 워크샵』. 2004. 9. 21.
- 차명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 유럽과 한국의 비교.” 『94년 전기 사회학대회 발표 논문집』. 서울: 한국사회학회, 1994.
- \_\_\_\_\_. “한국에서의 새로운 사회운동 활성화의 가능성: 유럽과 한국의 평화운동 연구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4』. 1994.
- 최상용. “평화와 정치체제에 관한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31권 2호. 1997. 1.

- \_\_\_\_\_. “한국인의 의식에 나타난 정치적 평화.” 『평화연구 1』. 1991.
- 허문영. “북한의 대남 및 통일정책.” 『북한외교정책』. 서울: 서울프레스, 1995.
- \_\_\_\_\_. “북한의 변화와 대남정책 전망.” 『전략연구』. 제3권 제2호.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6.
- 홍관희. “3차 6자회담 종결과 북한 핵문제.” 『국제이슈해설』. 2004. 6. 28.
- \_\_\_\_\_.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동북아 안보.”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체제 형성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홍성태. “50년 전쟁체제의 사회적 결과: 비정상성의 정상화.” 『남북간 대립 사회체제의 동요와 새로운 갈등구조의 이해』. 비판사회학대회 발표 논문 2000. 9. 23.

- Albrecht-Heide, Astrid. “Wege aus der Gewalt in der Dominanzkultur.” Wolfgang R. Vogt & Eckhard Jung(Hg). *Kultur des Friedens*. Wege zur einer Welt ohne Krieg, 1997.
- Dieter Senghaas. “Frieden als Zivilisierungsprojekt.” Wolfgang Vogt(Hg) *Frieden als Zivilisierungsprojekt. Baden Baden*. 1994/95. (Vivilisatorisches Hexagon)
- Galtung, Johan. “On Peace Education.” Christoph Wulf. *Handbook of Peace Education*. Frankfurt: IPRA.
- \_\_\_\_\_. “Peace Research.”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II. Collier-Macmillan London, 1968.
- \_\_\_\_\_. “Peace Research: past Experiences and Future Perspectives.” *Essays in Peace Research* 3/1990.
- Gerhard, w. “Friedenkultur und Moderne.” Wolfgang R. Vogt & Eckhard Jung(Hg). *Kultur des Friedens*. Wege zur einer Welt ohne Krieg, 1997.
- Hsin-Haung Michael Hsiao. “The new reformism: The private

- philanthropy in Taiwan in the 1980's." Barnett F. Baron (ed.). *Philanthropy and the Dynamics of Change in East and Southeast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91).
- Jude Howell. "NGO-State Relations in Post-Mao China." David Hulme. *NGOs, States and Donors- Too Close for Comfort?*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7).
- Koenig, Helmut. "Zivilisationsprozess und Frieden." Jopp Matthias (hg.) *Dimensionen des Friedens*. Theorie und Selbstverstaendnis der Friedensforschung, 1992.
- Offe, K. "Politische Legitimation durch Mehrheitsentscheidung?" Guggenberger. *Bernd/Offe*. Claus 1984.
- Peter Schlotter. "Zur Zukunft der Friedensbewegung. Rahmenbedingungen alternativer Politik." Reiner Steinweg(Hrsg.). *Die Neue Friedensbewegung*. Suhrkamp. Frankfurt. 1982. S.17.
- Senghaas, Dieter. "Kultur des Friedens im Lichte des zivilisatorischen Hexagon." Wolfgang R. Vogt · Eckhard Jung(Hg.). *Kultur des Friedens*. Wege zur einer Welt ohne Krieg, 1997.
- Stephen D. Krasner. "Structural Causes and Regime Consequences: Regimes as Intervening Variables." Stephen D. Krasner, ed.,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Vogt, Wolfgang R.. "Das Theorem der Inkompatibilitaet." Vogt, W. R.(Hg.). *Sicherheitspolitik und Streitkrafte in der Legitimitaetskrise*. 1983.
- \_\_\_\_\_. "Friedenkultur. Zur Vision kultureller Zivilisierung der Weltgesellschaft." Wolfgang R. Vogt · Eckhard Jung (Hg.). *Kultur des Friedens*. Wege zur einer Welt ohne Krieg, 1997.

- 吉田信雄. “行政(政府・地方自治體)と NPOの關係 -支援から協働へ.”  
日本NPOセンター編. 『日本のNPO2000』 日本評論社, 1999.
- 大冢健司. “中國.” 中富眞一 編著. 『アヅアの國家とNGO』 東京: 明石書店, 2001.
- 望月克哉. “日本.” 中富眞一 編著. 『アヅアの國家とNGO』 東京: 明石書店, 2001.
- 寺尾忠能. “臺灣.” 中富眞一 編著. 『アヅアの國家とNGO』 東京: 明石書店, 2001.
- 澤田 ゆかり. “香港.” 中富眞一 編著. 『アヅアの國家とNGO』 東京: 明石書店, 2001.

### 3. 기타자료

- 『김일성 저작선집 1』.  
『김일성 저작선집 3』.  
『김일성 저작선집 4』.  
『김일성 저작선집 5』.  
『김일성 저작선집 6』.  
『김일성 저작선집 8』.  
『로동신문』.  
『연합뉴스』.  
『정치사전』.  
『조선일보』.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년감 1950』.  
『조선중앙년감 1962』.  
『조선중앙년감 1989』.

『조선중앙년감 1992』.

『조선중앙년감 1994』.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회의 호소문』. 1954. 10. 30.

『최고인민회의 제2기 1차회의에서 김일성 연설』. 1957. 9. 20.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 회의 부수상 남일 연설』. 1959. 10. 26.

『평양방송』.

*Korea Herald*.

<http://www.peacekorea.org>.

<http://www.peacewomen.or.kr>.

<http://www.peacewomen.com>.

<http://blog.naver.com/gcomuni.do?Redirect=Log&logNo=140007688777>.

<http://www.peace-forum.com>.

<http://www.cacap.org>.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흙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 · 최의철 · 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 최의철 ·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 연례정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장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윤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소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F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